

# 共產主義와 左傾思想

그 理論과 實體

1988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 發刊에 즈음하여

새해 1988년은 國家的으로 多事多忙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民族의 現代史에 있어 新紀元을 闢게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보람찬 한 해가 될 것이다.

우선 大韓民國 政府樹立 40周年을 맞이하게 되고 憲政史上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뿐만아니라, 地球村 家族들의 最大祝典인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 배달민족의 進取的 氣像과 底力을 世界萬邦에 과시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같은 當面 國家大事를 成功的으로 마무리 짓는데 온 國民의 슬기와 힘을 합쳐야 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民族의 긍지와 역량을 南北韓 關係改善과 平和統一 促進의 活力素로 승화시켜야만 한다.

그러함에도 최근 社會 一角에서 우리의 自由民主體制를 顛覆하고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急進左傾勢力의 暴力的 挑戰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국민가운데는 左傾問題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認識하지 못하고 安易한 타성에 젖어 있거나, 일부 識者는 오히려 이들을 庇護하는 듯한 傾向마저 없지 않는데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으로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들의 發想이나 行動은 우리가 指向하는 自由·民主·平和統一을 源泉的으로 否定하거나 決定的인 沮害要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當院에서는 그동안 매년 統一·安保教育 標準教材로서 「民主統一論」을 발간하여 왔으나 올해에는 이같은 현실적 상황을 감안, 「共產

主義와 左傾思想 - 그 理論과 實體」를 별책으로 엮어내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널리 활용되어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統一政策, 北韓實態, 左傾問題 등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自由民主體制의 優越性에 대한 확고한 信念과 건전한 統一·安保觀을 지닐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院內外 教授陣과 斯界專門家 여러분에게 衷心으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1988年 元旦

統 一 研 修 院 長

# 目 次

## I. 共產主義 本質

1. 序 言 .....	6
2. 共產主義 概念.....	7
3. 共產主義 革命理論.....	10
4. 共產革命과 共產黨.....	30
5. 共產統治의 一般的 特徵 .....	37
6. 共產社會建設의 虛構性.....	42
7. 結 言 .....	48

## II. 現代左傾思想

1. 急進左傾思想의 概念.....	52
2. 先進産業社會의 急進左傾思想.....	56
3. 後進國의 急進左傾思想.....	67
4. 韓國의 急進左傾思想.....	86

## III. 共產圈 實相

1. 序 言 .....	100
2. 共產革命의 類型과 共產體制의 一般的 特性.....	101
3. 蘇聯의 實態와 變化 樣相.....	111
4. 中共의 實態와 變化 樣相.....	121
5. 東歐 및 아시아 共產國의 實態와 變化 樣相 .....	129
6. 結 言 .....	138

# I. 共產主義 本質

陳 性 桂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6
2. 共產主義 概念	7
가. 마르크스主義	8
나. 레닌主義(볼셰비즘)	9
3. 共產主義 革命理論	10
가. 唯物史觀과 階級鬭爭論	10
나. 勞動價値와 剩餘價値論	17
다. 暴力革命과 階級獨裁論	24
4. 共產革命과 共產黨	30
가. 共產黨 組織原理	30
나. 共產黨의 權力奪取 方法	32
다. 共產革命의 惡循環	34
5. 共產統治의 一般的 特徵	37
가. 共產主義 人間觀	37
나. 共產主義 生活樣式	39
6. 共產社會建設의 虛構性	42
가. 私有財產 廢絶의 妄想	42
나. 地上樂園의 꿈	44
다. 理想과 現實의 昏迷	45
7. 結 言	48

## 1. 序 言

우리 나라에서 감행되었던 공산침략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 무엇때문에 그토록 共產主義를 반대하고 경계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도 매력있게 선전하는 공산주의가 어찌면 그렇게도 많은 비극과 고통을 선량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직접 우리와 같은 경우를 당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참하고 끔찍한 진상을 아마 우리만큼 생생하게 그리고 날날이 고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侵略行爲는 지난날로서 그 막을 내린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反共은 한낱 구호가 아닐 뿐더러 공산주의로부터 받은 지난날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단순한 보복행위도 아닌 것이다.

자유민주체제를 보위하는 수단적 가치인 反共을 大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自由와 平和와 繁榮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反共은 바로 우리 民族의 생존을 좌우하는 지극히 중대한 命題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산주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전략을 잘 분석해서 이에 대처해야만 하는가?

첫째, 공산주의는 우리 조국의 평화적 統一과 민족의 번영을 도모하는데 기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暴力的인 존재로서 전세계의 자유민들이 싫어하고 배척하는 非人間的인 思想(또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며,

셋째로 북한의 공산주의가 우리 민족의 生存과 安全을 직접적으로 위

협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눈앞에 두고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공산주의의 正體를 우리는 누구 보다는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 2. 共產主義 概念

私有財産制度로부터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회적·도덕적인 害毒을 인식하고 재산의 共同所有를 기반으로하여 平等社會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소박한 理想은 인간의 政治意識이 생겨날 무렵부터 싹튼 것으로서, 그 뿌리는 멀리 紀元前 수백년까지 거슬러 올라 갈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古典的인 소박한 공산주의적 개념은 근대적인 의미로서의 공산주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近代的共產主義」는 古代나 中世의 공산주의적 사상 내지 운동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바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관심의 초점은 이 근대적 공산주의의 토대가 되고있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共產黨이 핵심이 되어서 전개하는 世界赤化를 위한 포괄적인 運動이며,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는 理論과 組織과 實踐運動의 세가지 요소로 된 복합적인 구성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과 실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가지 구성요소 사이의 밀접한 相互作用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공산주의의 목적은 짧게는 非共產主義體制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도하고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잡는데 있으며, 길게는 소위 계급없는 사회를 부르짖으면서 共產黨 一黨獨裁體制의 유지와 세력확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공산화를 달성하려는데에 그 목적을 둔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는 ① 공산당의 政權 장악 ② 공산당 독재체제

협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눈앞에 두고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공산주의의 正體를 우리는 누구 보다는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 2. 共產主義 概念

私有財産制度로부터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회적·도덕적인 害毒을 인식하고 재산의 共同所有를 기반으로하여 平等社會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소박한 理想은 인간의 政治意識이 생겨날 무렵부터 싹튼 것으로서, 그 뿌리는 멀리 紀元前 수백년까지 거슬러 올라 갈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古典的인 소박한 공산주의적 개념은 근대적인 의미로서의 공산주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近代的共產主義」는 古代나 中世의 공산주의적 사상 내지 운동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바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관심의 초점은 이 근대적 공산주의의 토대가 되고있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共產黨이 핵심이 되어서 전개하는 世界赤化를 위한 포괄적인 運動이며,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는 理論과 組織과 實踐運動의 세가지 요소로 된 복합적인 구성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과 실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가지 구성요소 사이의 밀접한 相互作用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공산주의의 목적은 짧게는 非共產主義體制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도하고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잡는데 있으며, 길게는 소위 계급없는 사회를 부르짖으면서 共產黨 一黨獨裁體制의 유지와 세력확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공산화를 달성하려는데에 그 목적을 둔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는 ① 공산당의 政權 장악 ② 공산당 독재체제



확립 ③ 사회주의사회를 거쳐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일단 마르크스主義와 레닌主義로 나누어서 알아보기로 한다.

### 가. 마르크스主義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始祖인 칼·마르크스는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까지 살았던 독일사람이다.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19세기는 産業革命과 프랑스革命의 파동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풍랑속에서 흔들리던 시대였다. 따라서 이 시대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건설의 방법을 모색하던 고민의 시대이기도 했다.

마르크스는 처음에는 그당시의 어두운 현실에 직면하여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로서 봉건적 특권계급에 항거하다가 그 후에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오늘날과 달리 국민의 민주적 권리가 아직 보장되지 못했던 초기 산업자본주의 당시에 있어서 불만스러운 사회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과격한 지식인들이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당시에 한창 성행하던 階級鬭爭, 즉 폭력혁명이었다. 말하자면 19세기의 유럽은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조건과 사상적 분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르크스도 무릇 다른 사상가나 혁명가와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며 그의 이론과 실천도 時代性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구성한 이론적인 구조에는 어느 정도 예리한 분석과 비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또한 거기에는 사실과 사실아닌 오류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반항적인 혁명가가 지니고 있는 獨斷性과 排他性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目的論的인 誇張表現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요컨대 마르크스主義는 어떠한 時代에나 어떠한 社會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眞理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생존했던 당시의 환경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時代的인 產物」임에는 틀림이 없다.

#### 나. 레닌主義(볼셰비즘)

專制政治에 대한 반항 속에서 싹터 初期産業資本主義의 우울한 모순 위에서 자란 마르크스主義의 토대 위에 짜리즘과 농노제로 대표되는 러시아 사회의 문제점 극복을 둘러싼 정치투쟁의 선풍속에 사회주의 폭력혁명의 계기를 마련한것이 레닌主義 즉, 볼셰비즘이다.

레닌主義는 마르크스主義의 실천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르크스의 혁명적 세계관은 레닌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혁명전략과 결합되어 있다.

理論家の 입장이 앞섰던 마르크스는 모든 정치현상을 경제적 측면에 종속시킴으로써 마르크스主義는 실천적인 정치이론 즉, 조직과 제도의 개념을 결여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과도적인 프롤레타리아트獨裁를 단기적으로 예측한데 비하여 레닌은 현실정치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프롤레타리아트獨裁國家 개념으로 파악했다.

레닌은 일반적인 마르크스主義의 敎理를 후진국가인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전략전술적인 요구와 러시아의 혁명적 전통과 결합시켰다. 이것은 마르크스主義의 러시아化를 의미한다.

레닌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도하는 前衛黨組織이 없으면 혁명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고, 혁명의 성공은 자본주의가 자연붕괴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있지않고 오히려 혁명투쟁의 정치적 意志와 음모를 통하여 전투적인 공격을 가하는데 있다고 믿었다.

### 3. 共產主義 革命理論

#### 가. 唯物史觀과 階級鬭爭論

##### 1) 唯物史觀의 構造

唯物史觀에서는 社會와 政治를 변천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을 어떤 고매한 理想이나 精神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生産과 교환방법의 변동, 즉 경제생활의 변동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唯物史觀에 의하면 生産에는 두개의 커다란 요소가 있는데 生産力과 生産關係가 그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자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물자의 생산에 요구되는 生産道具와 생산의 경험과 노동에 대한 숙련에 의하여 생산기구를 운영하면서 물자를 생산하는 사람 즉, 勞動力을 종합해서 生産力이라 부르고, 생산을 둘러싸고 맺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生産關係라고 한다.

그런데 生産力과 生産關係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의 生産樣式 안에 포괄되어 그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生産力이 변하고 발전할 때는, 이에 대응하여 生産關係도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生産關係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산력에 대응한 必然的인 생산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생산활동에서 맺어진 이러한 생산관계의 總合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 경제적 구조야말로 下部構造 즉, 사회의 토대이며 법률·정치등 上部構造는 이 위에 대응해서 성립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의 生産力과 生産方法이 변할 때는 이에 따라 생산관계가 변하고, 생산관계가 변함에 따라 그 사회의 정치·법률·도덕·종교·예술등이 전반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부구조는 하부구조(土臺)에 대응하여 결정되는데 다시 상부구조를 분석한다면 상부구조는 그 당시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

한 것이라고 한다. 낡은 생산관계가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에 대하여 장애가 되면 될수록 투쟁이 점점 격화되고 드디어는 사회혁명이 폭발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낡은 경제구조는 깨어지고 上部構造, 즉 관념 형태도 무너진다는 것이다.

唯物史觀에서는 生産方式을 기준으로 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原始共同社會·古代奴隸社會·中世封建社會·近代資本主義社會·共產主義社會가 그것이다. 그런데 奴隸社會와 封建社會 그리고 資本主義社會는 다같이 私有財産을 토대로 한 사회였던 까닭에 사회발전은 크게 나누어 原始共同制·私有財産制·共產主義制의 三段階로 구분된다고 한다.

## 2) 唯物史觀의 誤謬

唯物史觀은 공산주의 혁명이론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크게 평가되는 학설로서 결국 다음과 같은 두개의 사상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즉,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經濟的 要因이 기본이라는 것과, 사회의 발전은 辨證法的 法則에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唯物史觀에 의하면 生産力이 변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生産關係가 변하고 生産關係의 변화에 따라 관념형태는 이에 대응하여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 때에 대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산관계에 의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있지는 않으나, 법률·정치를 포함한 모든 精神文化는 그 시대의 지배계급이 그 지배관계를 유지하는데 편리하도록 형성되고 계급관계가 변함에 따라 이것들도 변한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류의 정신문화는 생산관계라는 단 한가지의 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다.

만일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왜 똑같은 생산조건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켰고, 서로 다른 생산조건 밑에서 같은 문화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

명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생산관계를 각각달리하는 古代로마와 현대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지배적일 뿐만아니라,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산국가에서마저 아직 말살되고 있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유물사관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같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위에서도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공산주의에서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이질적인 사상이 복잡하게 엉켜있을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각 상당한 수의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유물사관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만일 유물사관에서 주장하는대로 政治가 경제관계의 반영이라면 경제관계가 성숙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공산주의적 정치제도의 수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政治權力을 장악하고난 다음 政治의 힘으로 共產主義的 生産關係를 만들려고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치열하게 思想戰을 전개하는 것은 상부구조의 힘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政治가 生産關係를 개조하고 이 개조된 생산관계를 가지고 생산력을 촉진시키자고 하는데에 그 목표가 있다. 즉, 상부구조의 힘에 의하여 하부구조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下部構造인 경제관계가 정치·법률·제도 및 인간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공산주의자 못지않게 알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정신문화의 성격이 오로지 결정적으로 경제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된다고 하는 사상은 수긍할 수가 없다.

인간의 정신문화는 경제관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관계를 지배하기도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교적 커다란 사건은 물질적 조건과 인간정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질적 조건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지능이 낮아서 생산력이 유치했던 미개한 시대에는 생활자료의 획득이 인간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지만,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여 물질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은 衣·食·住라는 기본적인 욕

구 이외에도 복잡한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이것이 거꾸로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회에는 반드시 그 생산관계에 적응하는 하나의 문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생기게 되어있으며 오늘날의 문명사회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唯物史觀에서는 인류사회 발전을 원시공산사회·노예사회·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회는 각각 그 内部的 矛盾에 의하여 다음단계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唯物史觀에서는 私有財産制의 마지막 단계인 자본주의사회는 붕괴하고 공산주의사회로 넘어가는것은 「歴史的 必然」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때, 唯物史觀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자본주의제도는 부당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하는 생산력과 현존하는 생산관계와의 충돌로 사람들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멸망하여 공산주의사회가 온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물론 우리도 인류사회가 변천해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본주의도 고정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 또는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可能性인 것이지 必然性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설혹 자본주의사회가 변혁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공산주의사회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가 무너진다고 해도 그 결과로 공산주의사회가 오지않고 공산주의와 관계없는 어떤 사회가 나타날 수도 있고, 공산주의사회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도 다시 몰락해서 자본주의사회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공산주의사회의 출현이 생산력의 발전으로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라면,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혁명운동에 뛰어들 필요가 있겠는가.

唯物史觀의 주장대로 공산주의사회는 역사적 필연에 의하여 인간의

욕망이나 뜻과는 상관 없이 머지않아 오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자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칠 때에는 이미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사회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必然的인 것에는 원래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가치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唯物史觀에서는 인류역사가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거쳐서 필연적으로 공산주의사회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그 공산주의사회는 다시 무엇으로 발전하는지 안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말하자면 辨證法의 법칙은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될 때까지는 歷史를 지배하고 일단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변증법적 발전은 정지하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것뿐이다. 이것은 변증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때, 唯物史觀도 역시 觀念論的 宗教史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階級鬭爭論

공산주의자들이 唯物史觀을 내세우는 것은 계급투쟁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자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의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까지는 계급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계급투쟁이론의 결론이다.

그런데 계급투쟁이론은 큰 결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階級에 관한 개념이 문제이다.

공산주의에서는 계급이란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며, 그 의식에 있어서 연결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고,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오직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회의 구성부분으로 해석되어

야지 함계에 의하여 성립되는 단체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제적 계급구성도 반드시 통일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일부 계층 가운데는 계급의식이 생겨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것은 꼭 계급간에 있어서의 상반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의 역사는 본래가 協同의 역사인데 경제상의 利害關係가 심하게 相反될 때에 비로소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계급투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 견해이다.

인간은 단지 경제적 利己主義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경제적 욕망 외에도 많은 정신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사회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그 중간에 많은 계층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는 선량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는 악독하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갈라놓을 수는 없다.

요컨대 계급투쟁이론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투쟁을 조장하기 위한 선전·선동용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둘째, 계급의식이 민족의식보다 강하다는 가설의 오류를 들수 있다. 본래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血緣을 기초로 한 文化的 類似性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階級이라는 것은 人爲的인 요소를 포함한 利害關係에 따르는 結合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적으로 볼 때 民族은 당연히 階級에 앞선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民族은 基本的이고 階級은 派生的이다. 또한 民族은 不變的이며 永久的이고 階級은 可變的이고 一時的이다. 한국민족은 아무리 변해도 한국민족이지만,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본가로 될 수 있고 자본가는 언제든지 노동자로 될 수 있다. 계급의 대립과 투쟁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인의 하나로서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앞서서 민족이 세계역사의 담당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오늘날 인류는 계급의 대결보다는 민족으로 분열되어 서로 도우며 혹은 대립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역사는 역시 민족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그가 속해있는 계급 여하에



따라 이해관계나 사상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민족에 따라 한층 더 달라진다.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 상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은 그가 속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적대국가의 노동자와 싸워왔다. 세계대전을 통해서 보더라도 전쟁자체가 계급 투쟁이 아닐뿐더러 각국의 노동자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노동자계급을 위하여 적국의 노동자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비록 속해 있는 계급은 노동자일지라도 자기 민족과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노동자들은 서로 싸웠던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민족과 조국을 초월해서 계급으로 단결하는 것은 아니다.

세째,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계급은 필연적으로 서로 투쟁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쟁에 앞서 서로 협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사회에는 때로 계급투쟁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변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오늘날 富益富 貧益貧으로 인한 貧富의 격차가 현저하고 安定과 希望이 없는 곳에서 對立과 투쟁의 경향들이 있고, 그 투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인류역사를 모조리 계급투쟁의 역사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계급투쟁이론은 지나친 誇張이다.

인간에게는 生存競爭이라고 하는 투쟁면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相互扶助의 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째, 공산주의 계급투쟁이론에서는 中間階級은 머지않아 몰락하여 노동자계급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하지만 중간계급은 몰락하지도 않았고 노동자계급으로만 흡수된 적도없고 또 없을 것이다. 중간계급은 대

자본가에 반대하는 의미에서는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私有財産制度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서는 것도 아니다. 중간계급의 태도는 階級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國民的이며, 부분적인 계급이익 보다는 전체적 이익을 중요시한다. 중간계급은 사실상 계급투쟁과는 거리가 멀다.

공산주의자들이 몰락해버린다고 주장했던 중간계급은 오늘날 몰락하기는 커녕 점점 肥大해져서 한 社會와 한 國家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간계급이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緩衝作用을 하는 한 계급투쟁의 가능성은 사실상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 나. 勞動價値와 剩餘價値論

### 1) 勞動價値說

노동가치설은 공산주의 경제이론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잉여가치설을 유도하고 자본주의 발전과 그 몰락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다. 따라서 노동가치설이 무너지면 착취의 이론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고, 동시에 공산주의경제학의 전체 이론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노동가치설이란 商品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平均勞動量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것인데 「노동은 상품가치를 형성하는 原因이고, 노동은 상품가치의 實質이며 노동은 상품가치를 측정하는 尺度」라는 것이다.

이 노동가치설이란 것은 이미 쓸모없는 학설로 되어버린지 오래된 時代錯誤的 이론으로서 허다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노동가치설에 의하면 모든 商品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勞動量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이란 것은 단순한 同質的인 것이 아니라 異質的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勞動量의 엄밀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一級技術者가 열심히 하지않은 세시간의 노동량은 보통기술자가 열심히 일한 몇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없다. 모든 물건의 가치는 그것에 대한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노동생산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많으면 그 가치가 큰 것이다. 노동이라는 것은 供給을 결정하는 한개의 變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노동가치설은 상품가치의 형성에 있어서 노동 이외의 生産要素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과 더불어 土地나 기타의 天然資源과 같이 노동의 投下 없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치설에서는 이러한 노동에 의하지 않는 물건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가치설은 설사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一般論은 될수가 없고, 오직 勞動生産物의 가치를 논할 때에 한해서만 有用한 것이다.

셋째, 노동가치설은 「노동이 상품가치의 尺度」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동 그자체의 가치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결국 노동의 가치는 그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投下된 노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밖에 말할 수 없게된다. 投下된 노동은 財貨 및 用役의 사용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재화와 용역은 노동의 생산물이다.

결국 상품의 가치는 노동에 의하여 결정되고, 노동 그 자체의 가치는 노동생산물의 가치로 설명하게 되고, 그 노동생산물의 가치는 또다른 노동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다.

네째, 노동가치설에 의하면 생산물의 가치는 投下된 勞動量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일정한 노동인구가 일정한 노동시간 동안 일해서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의 總量은 일정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되

면 노동가치설을 가지고서는 경제성장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이 노동가치설은 一定量의 가치가 모든 계급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分配論으로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總生産의 增大를 설명하는데는 불충분한 것이 된다.

그런데 노동가치설이 경제이론으로서는 도저히 수궁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도 하는 것은, 이 노동가치설이 상품가치의 원인을 설명할 때 상품의 가치가 노동자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결과라는 도덕적인 要素를 내세우는 점이라 하겠다. 노동가치설이 어떤 정치적 효과 즉, 暴力革命을 노리는 선전자료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경제학설이 아니라 한낱 정치적인 선전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2) 剩餘價值論

잉여가치론은 노동가치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잉여가치의 이론은 어떤 생산물의 가치가 단순히 그것에 投入된 勞動量에 의하여 생겨나고, 그 노동가치는 또다시 노동 그 자체의 再生産에 필요한 노동에 의존한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노동가치설이 무너지면 잉여가치론이 무너지고, 잉여가치론이 없으면 마르크스의 대부분의 이론은 껍질만 남게된다.

잉여가치론은 科學性이 결여되어 있고, 경제이론의 각도에서 볼 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되어 있다.

첫째, 이 잉여가치론의 근본적인 난점은 「생산물의 가치와 이윤의 근거가 노동에 의해서만 창조」된다는데 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외에도 자본과 원료와 기업가의 능력 등 여러가지의 生産要素들이 필요하다.

자본에 의해서 기계나 원료가 구입되고 노동자가 고용되어서 비로소 상품이 생산된다. 따라서 商品의 가치는 자본과 노동의 협동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마땅히 자본과 노동의 양쪽에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상품의 가치는 노동만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노동가치가 상품의 가치를 전부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노동의 生産性만 인정하고 자본의 生産性은 인정하지 않는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産業體制에 있어서 자본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자본의 生産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만으로 생산된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착취한다는 이론은 아무런 타당한 근거가 없다. 잉여가치는 오직 노동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잉여가치론은 獨斷論에 빠지게 되었다.

둘째로 착취라는 말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企業家が 市場에서 결정되는 貨金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市場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서 생산물을 판다. 그 때에 그 생산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상의 需要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가격으로서 생산물이 팔리면 이 가격으로부터 생산비를 빼낸 후에 남는것이 利潤이다.

그런데 잉여가치론을 주장하는 착취론자는 이 利潤을 착취의 결과라고 한다.

다시말하면, 利潤은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말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량 즉, 노동비용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는 企業家が 利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노동자가 그 노동에 의하여 만들어내는 가치보다도 적은 가치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노동과 그것에 대한 지급은 不等價交換이며, 노동자는 주는 것보다도 적게 받는데, 그 차액이 결국 利潤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착취이론은 엄격하게 노동가치법칙이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소비된 노동량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需要가 있느냐 없느냐 또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不等價交換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고 따라서 착취란 것은 있을 수 없게 된다.

만일 노동력으로 생산된 상품이 市場에서 매매되지 않아 資本家가 손해를 본다든지, 품질이 나빠서 팔리지 않는 상품일 때에도 계약에 의하여 노동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때에 결국은 자본가가 착취되는 결과가 된다.

노동가치설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론도 많은 결함과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者들이 아직도 이 이론을 내세우고 주장하는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이론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명료하고, 궁핍한 노동자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으며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깊은 이론적 수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社會正義가 땅에 떨어져서 富益富·貧益貧하고 不正과 부패가 극심한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릇된 이론도 合理化하려는 충동을 받게 된다.

分配의 不平等을 시정하고 중산층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민주주의를 국민의 경제생활에까지 파급시켜서 福祉國家를 건설 할 때에, 착취이론인 잉여가치설의 영향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잉여가치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본가의 利潤은 노동자의 착취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며,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자기의 몫을 빼앗기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사회에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복지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자본가의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낙원을 만들겠다는 혹은 이미 만들었다는 공산국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 3) 資本主義 沒落理論

노동가치설을 토대로 해서 형성한 잉여가치설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결국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잉여가치설의 역할은 노동착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자본주의 몰락의 「법칙」을 유도해내는데 동원된 것이다.

자본주의 몰락의 법칙에 따르면,

-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점점 더 혹심해 가고, 그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빈곤은 더한층 커진다는 것이며,
- 그 위에 자본의 집중으로, 경쟁에서 패배한 중소자본가가 노동자로 轉落하는 까닭에 노동자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며,
- 노동시장에는 産業豫備軍 즉, 失業者의 수가 증대하고 이것은 노동임금을 더한층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법칙에 의하여 노동자들이 점점 단결하여 드디어 자본주의사회 타도에 쫓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경제체제는 마르크스시대의 초기산업자본주의와 달라서, 오히려 自由企業體制라고 부르는것이 맞을 것 같다.

이 자본주의체제라고 부르는 自由企業體制는 지난 200년 동안의 생장발전과정에서 자기자신을 살려나갈 活力과 彈力性을 갖추게 되었다.

자본주의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최대의 장점으로서는 국민 각개인이 자기의 創意性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창의성이 발휘되는 조건은 각 국민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자유롭다는데 있다. 물론 이 자유가 다른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용납이 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자유롭게 각자가 행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인류역사상 이와같은 경제적 자유가 가장 많이 허용되고 보장된 제도가 자유기업의 제도 즉, 자본주의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 밑에서 과거 어느 때에도 볼수 없었던 위대한 생산력이 발휘되었고 기술의 발전이 가장 눈부시게 일어났던 것이다. 새로운 발명

이 연이어 일어났고, 새로운 제품이 부단히 등장하여 새로운 生産樣相과 경제방법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둘째로 景氣變動의 원인이 되는 生産과 消費의 不均衡을 조정하는 장치가 발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資源의 안배와 사용이 價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물자의 需要와 供給이 조정되는 까닭에 표면상으로는 無政府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資源의 안배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計劃적으로 生産되고 소비되는 공산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물건의 공급과 수요에 차질을 초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景氣變動을 가져오는 수가 많다.

세째로 이 제도의 장점은 自動安定裝置의 작용만으로 景氣의 안정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財政과 金融上의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不況의 경우에는 減稅措處로 국민의 購買力을 높이고, 公共事業을 일으켜 경기를 好轉시키는 財政政策을 실시하고, 이와 반대로 好景氣에 있어서는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增稅措處를 취함으로써 경기의 과열을 방지할 수도 있다.

財政政策과 아울러 景氣調整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金融政策이 있다. 이것으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通貨量과 金利를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해온 경로를 살펴볼 때,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國家의 역할이 크게 증대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 이미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타났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와같은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몰락」이나 「자본주의 종말」은 적어도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몰락하거나 종말을 고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 때문에 몰락한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계속 발전해 가는데 오히려 자본주의가 가장 뒤떨어진 러시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이다.

人間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단을 法과 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점차적인 사회개혁과 福祉增進政策으로써 해결하는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100여년 전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궁핍과 타락을 예견하였으나, 그 예상은 적중되지 않았다.

노동자 자신의 각성과 노동조합활동, 복지정책, 특정산업의 公有化 등의 조치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예상한 자본주의의 몰락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자본주의체제에 불평등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현대적 민주주의와 결부되어 발전할 때 평화적으로 해결해 왔고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모든 면에서 공산주의 보다는 자유기업사회와 민주개방체제가 優越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 다. 暴力革命과 階級獨裁論

### 1) 階級國家觀

공산주의에서는 “國家는 사회적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발생하였고, 國家는 본질적으로 폭력적 탄압기구이며, 國家에 의하여 지배계급은 피 지배계급을 착취한다”고 한다. 따라서 國家는 사회의 전반적 福利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古典的 國家理論을 공산주의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즉, 국가는 서로 對立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급이 투쟁에서 멸망하지 않기 위한 충돌을 완화하고 질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발생한 권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관계의 계급적 대립에서 오는 충돌을 막기위하여 발생한

국가는 비록 그 형태가 어떻게 다르다고 해도 폭력적 억압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敵對階級에 대한 탄압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國家에서 탄압성을 배제할 때는 그것은 이미 국가가 아니며 국가가 아닌 것으로 될때, 즉 국가가 死滅해버리는 사회는 이미 계급적 대립이 消滅된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국가라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급국가일 뿐이지 인민전체의 국가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共產主義 階級國家觀은 超階級的 國家觀 즉, “국가는 외부의 敵으로부터 국민전체와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防衛機構이며,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治安機構”라는 國家理論을 일체 무시한다.

물론 國家에 강제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으로 국가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이외에 教育·保健·文化·社會保障등과 기타의 公共福利를 위하여 막대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설혹 지배계급을 위하여 봉사해 왔고, 국가의 意思가 지배계급의 意思였다고 하더라도 國防과 治安의 기능을 순전히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무시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까지의 歴史的 경험으로서는 戰爭은 주로 民族과 民族과의 전쟁이었으며, 패배한 국가에 있어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막론하고 민족전체가 戰勝國家·民族에게 예속되어 왔던 것이다.

계급이 소멸된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었다고 가상할 때 생산의 無政府狀態를 극복한다는 공산사회의 경제체제는 생산과 분배의 全過程이 어떤 중앙기관에 의하여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운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경제가 어떻게 強制力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공산사회에서 強制權力이 배제된다면 새로운 계급과 착취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強制力은 필요한 것이다. 階級國家觀은

로서의 國家死滅論은 非科學的인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 2) 暴力革命論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革命은 계급투쟁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혁명이 없이는 새로운 사회는 탄생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가 공산주의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피압박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돌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現存制度를 暴力으로써 타도하는 것 즉, 流血革命을 뜻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暴力革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非組織的인 대중의 산발적인 蜂起나 無計劃的이고 一時的인 폭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單一階級으로 집결한 노동자들의 전체적 봉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혁명이란 것은 政治勢力으로 결속된 프롤레타리아트가 流血의 폭력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뒤엎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르크스主義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계급의 생활은 점점 도탄에 빠져서 그 결과로 드디어는 쫓겨나 國家權力을 탈취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機構를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동계급의 생활은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노동자들이 생명을 내던져 가면서까지 혁명을 위하여 폭발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공산주의에서 자본가의 독재기구라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을 공정하게 볼 때, 그 나라들은 대중을 억압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에 의해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중의 지지를 받는 多數政黨은 政府를 움직이고, 政府는 군대와 경

찰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國家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이 폭발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少數 獨占資本家가 武力으로 탄압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말은 용납될 수가 없다.

요컨대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향상되고 민주정치가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혁명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설혹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다.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意識分子가 기성정권을 전복시키고 독재정치를 실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少數 職業革命家의 陰謀에 의한 政變에 불과한 것이며 그런 政變은 자본주의국가에서도 가능하고 봉건국가·노예국가에서도 가능하고 사회주의·공산국가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政變은 이미 프롤레타리아 혁명과는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구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다면, 代議政權만 수립해 놓으면 노동자의 요구가 자동적으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더우기 지난날의 모든 폭력혁명은 罪惡이었다든가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것도 아니다.

어떤 시대나 어떠한 사회의 지배자도 폭력적 반항을 받지않고 스스로 그 특권을 포기한 일은 거의 없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볼 때 “공산주의는 폭력으로 혁명하는 과정을 거쳐서만이 실행된다”고 한 마르크스의 말은 마르크스가 살았던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근거없는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폭력혁명은 결코 必然的인 것도 아닌 동시에 찬양할만한 것도 아닌 것이다. 폭력은 最善의 경우에 있어서도 필경은 必要惡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폭력혁명이 성공한다고 해도 국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파괴가 극심한 까닭에 혁명에는 성공하고서도 파멸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는 공산혁명을 正常化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이론을 전개하면서 그것이 社會發展法則인 것처럼 力說해 왔다. 그러나 공산주의 폭력혁명론은 다음과 같은 批判을 면할 수가 없다.

첫째, 공산혁명은 暴力을 必要惡으로 보지않고 必要不可避한 必然性으로 보고 있다.

둘째, 공산혁명이론은 普遍妥當性 있는 科學的理論이라기보다는 特定國家의 暴力革命을 合理化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공산혁명이론에서는, 폭력혁명은 노동자와 공산당의 歷史的的使命이라고 過大評價하고 있다.

넷째, 오늘날까지의 공산혁명은 어느 경우에서나 少數의 職業革命家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지 결코 多數의 支持를 얻은 혁명은 아니었다는 것등이다.

### (3) 階級獨裁

공산주의 혁명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부르주아제도의 폭력적인 전복이 필요하나, 전복만 시켜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새로운 사회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階級이 消滅되고 國家가 死滅하는 공산주의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기구가 전복된 후 우선 國家權力을 장악하고 자기자신을 支配階級으로 높인 다음에 부르주아지의 復活과 復讐를 막고 그 殘滓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의 過渡期 즉 獨裁期間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 기간의 國家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國家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기간중에는 國家는 여전히 탄압적 기관으로 남아 있는 것이며 그것은 자본주의국가와는 반대로 多數의 프롤레타리아트가 少數의 부르주아지에 대하여 強行하는 階級獨裁機構로서 작용한다는 것

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반드시 共產社會를 실현하리라는 것은 하나의 희망적 관측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희망에 대한 환멸은 바로 오늘날의 공산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獨裁權力の 위험성에 관하여 생각할 때,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權力만 확립되면 공산사회는 무난히 찾아오리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예측은 완전한 誤判이다.

오늘날의 공산국가가 秘密警察과 強制勞動收容所에 의지하여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統治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공산주의자들의 誤判은 명확해진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 해방에 있다고 하면서도 階級獨裁와 階級解放의 美名下에 全體主義的 一人獨裁 혹은 極少數의 集團獨裁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 공산국가의 현실이다.

첫째,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競爭的 政黨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공산당 唯一黨의 독재정치이다. 그곳에서는 立法機關이 民意를 대표하거나 중요한 정책 또는 法律案을 직접 立案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複數政黨의 존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唯一黨인 공산당은 정책을 국민에게 強要하는 기관이며 정부도 공산당의 정부이고 군대도 공산당의 군대 즉 黨軍이다.

둘째, 지난날의 공산독재는 현명한 정치를 보장하지 못했다. 공산독재자는 대중을 조직하고 선동하여 폭력으로 政敵을 물리치고 독재자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지 높은 정치적 識見이나 사회경륜 또는 탁월한 領導力이 인정됨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공산독재자는 스스로를 全知全能한 支配者인 것처럼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를 偶像化하게 되고, 공산당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장담하면서 絕對服從을 強要하게 된다.

셋째,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기초는 국민 다수의 自由意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배하는 독재자의 強制力에 있다.

원래 독재의 合理性은 「特定目的」과 「一時的 例外」라는데 있기 때문에, 독재의 권력은 自由公正한 國民意思에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공산국가 독재정권은 국민의 自由意思에 의한 支持가 없이 한사람 혹은 階級이라는 이름의 소수집단이 「人民의 뜻」을 자칭하면서 강제력과 폭력으로 국민의 支持를 조작했던 것이다.

## 4. 共產革命과 共產黨

### 가. 共產黨 組織原理

공산당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직능을 포괄적인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공산주의 특히 레닌主義(볼셰비즘)의 중심적인 개념이다.

마르크스가 생존했을 때 만들어진 노동계급의 政黨은 대체로 代議制民主主義의 政黨과 비슷했다. 多數의 당원이 있고, 선거에 의한 지도자가 당을 대표하며 政綱·政策으로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그런데 레닌이 주장한 것은 새로운 형의 엘리트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黨이라고 불리우지만 그것은 자기자신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로서의 政黨이 아니고 또 정치상의 경쟁적 제도속에서 투표자를 조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능으로서의 정당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처음부터 戰鬥組織으로 생각해낸 것이며 思想的·軍事的인 軍隊이며 테러로부터 話術에 이르기까지의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파괴하고 權力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와 같은 思考方式을 러시아에서 감행했을 때 레닌은 추종자들에게 일정한 형태의 조직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는 이데올로기의 원칙도 強制했다. 특히 非共產主義的 환경속에서의 공산주의자

원래 독재의 合理性은 「特定目的」과 「一時的 例外」라는데 있기 때문에, 독재의 권력은 自由公正한 國民意思에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공산국가 독재정권은 국민의 自由意思에 의한 支持가 없이 한사람 혹은 階級이라는 이름의 소수집단이 「人民의 뜻」을 자칭하면서 강제력과 폭력으로 국민의 支持를 조작했던 것이다.

## 4. 共產革命과 共產黨

### 가. 共產黨 組織原理

공산당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직능을 포괄적인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공산주의 특히 레닌主義(볼셰비즘)의 중심적인 개념이다.

마르크스가 생존했을 때 만들어진 노동계급의 政黨은 대체로 代議制民主主義의 政黨과 비슷했다. 多數의 당원이 있고, 선거에 의한 지도자가 당을 대표하며 政綱·政策으로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그런데 레닌이 주장한 것은 새로운 형의 엘리트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黨이라고 불리우지만 그것은 자기자신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로서의 政黨이 아니고 또 정치상의 경쟁적 제도속에서 투표자를 조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능으로서의 정당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처음부터 戰鬥組織으로 생각해낸 것이며 思想的·軍事的인 軍隊이며 테러로부터 話術에 이르기까지의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파괴하고 權力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와 같은 思考方式을 러시아에서 감행했을 때 레닌은 추종자들에게 일정한 형태의 조직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는 이데올로기의 원칙도 強制했다. 특히 非共產主義的 환경속에서의 공산주의자



의 地位와 役割에 관한 원칙도 강요했다.

즉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黨의 조직원칙과 당생활의 기율을 명백히 하고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새로운 형의 당을 만들 것을 생각해 냈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있어서는 黨은 勞動者階級の 前衛隊이며, 勞動者階級の 여러 조직 중에서 최고의 계급적 조직이라고 한다.

레닌의 黨理論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隊이다.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를 領導해야 하며 先頭에 서야 한다. 그리고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司令部와 같다.

둘째,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部隊이다. 셋째,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道具이다. 넷째, 공산당은 강철같은 기율을 가진 意志의 統一體로서 分派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최고형태라는 등으로 요약된다.

레닌의 黨理論은 그 구성원칙에 있어서 혁명의 전위대로서의 職業革命家를 중요시했고, 동시에 職業革命家は 훈련된 極少數의 精銳分子이어야 하며, 조직은 철저히 비밀조직으로 해야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武裝部隊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決定的 時期가 찾아왔을 때 단기간의 都市暴動戰術에 의거해서 기존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것이다.

레닌의 前衛黨 개념은 본질적으로 大衆政黨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이익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과도 상관없다.

또 공산당은 少數 精銳分子 중심의 조직론이었기 때문에 당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고위층 당간부의 독재로 타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직의 운영원칙으로서 소위「民主集權制」를 제시하고 있다. 중앙집권제를 조직운영의 원리라고 한다면, 민주제는 조직원리의 선전적 명분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당 조직개념에 있어서 소위 민주집권제라고 하는 것은 조직형태와 그것의 운영을 위하여 제시된 원리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산당 조직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민주주의는 없고 權力의 集中만이 있을 뿐이다.

공산당의 조직개념은 본질상으로 하나의 排他的 精銳分子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中央集權的 성격이 철저한 반면에 일반 당원은 당 중앙에 대하여 그것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할 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이란 적용될 수 없는 하나의 장식이며 기만에 불과하다.

공산당은 構造上 二重의인 조직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로 당은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도적 위치에 있으며, 둘째로 일반당원은 中核指導分子로 구성된 당지도부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당 조직은 결국 당중앙위원회가 權力의 최고기관으로서 全權을 장악하고 마침내는 독재자가 중앙위원회를 틀어쥐게 되며, 공산당은 一人獨裁의 도구로 전락되고 만다.

레닌의 몰세비키 黨원적은 레닌을 비롯하여 그 후 계속해서 一人共產獨裁者를 世界의 모든 공산주의 운동에서 만들어 냈다. 결국 레닌의 前衛黨理論은 특히 스탈린時代 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산당의 一黨獨裁에서 一人獨裁를 위한 이론적 武器로 이용되어 왔다.

## 나. 共產黨의 權力奪取 方法

공산주의의 革命類型이나 權力奪取 과정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공산당의 탈권에 있어서 武力의 사용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공통적인 수단으로 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권력탈취를 위한 혁명의 과정에서도 土着的이라고 할 수 있는 게릴라 형태를 취하는 경우와, 외국군 즉 소련군의 주둔과 개입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소련의 조종과 지령에 따라 소련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政權을 장악한다는 점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은 世界의 다른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기존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하는데 출발신호가 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공산주의 혁명과정도 본질적으로는 소련을 모델로 한 것이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들이 정권을 탈취하는데 사용했던 수단은 暴力과 武力의 사용을 비롯한 宣傳과 煽動, 테러와 恐怖政治, 陰謀와 僞裝 등이었다.

첫째, 暴力(軍事力)을 사용했다.

레닌에 있어서는 혁명이란 조직적인 軍事力에 의하여 政權을 탈취하는 일종의 軍事作戰이었다. 동시에 혁명을 위한 武裝蜂起에서 주요한 관심은 군대의 支持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데 있었다.

1917년 러시아 2월혁명은 自然發生的인 것이었으나, 10월혁명은 2월혁명으로 물러난 짜리政府의 뒤를 이어 수립된 臨時政府를 타도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볼셰비키)의 쿠데타형식의 혁명이었다.

그 당시 임시정권은 국민들로부터 無能하고 無氣力한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고, 패전한 짜리정권을 이어받아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경찰과 군대마저 부패하여 治安維持 수단도 상실하게 되었었다.

이런 가운데 레닌은 공산당의 세력을 확장하고 정권탈취를 위하여 당내에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한편 무장봉기 계획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軍事力이었다.

볼셰비키는 少數였으나 잘 조직되어 있었고, 기율이 엄격한 무장부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公共施設을 기습함으로써 혁명은 시작되었고 순식간에 武力으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고 말았다.

둘째로 볼셰비키당이 사용한 방법은 宣傳과 煽動이 武器였다.

임시정부의 無能이 점점 드러나 도시의 일부 노동자들이 볼셰비키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 때 볼셰비키들은 급진주의자들과 동맹을 형성하여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平和·土地·빵」을 口號로 내세워 煽動했다.

이러한 구호는 결국 구호로 끝나고 그대신 무서운 恐怖政治를 국민들에게 안겨다 주었다는 것은,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한 후의 政治史가 잘 보여주었다.

볼셰비키들은 정권탈취에 있어서 大衆操作을 매우 중요시했다. 그들은 少數의 知識人을 대상으로 하는 宣傳과 多數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煽動을 개념상 구분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공산체제는 宣傳煽動과 暴力이라는 두개의 支柱를 통치의 기본적인 기술로 삼고 있다.

세째로 볼셰비키당이 사용한 방법은 테러와 공포정치이다. 마르크스의 自然發生的 혁명론과는 달리 人爲的 혁명론을 신봉한 레닌은 혁명의 목적을 위해 수단을 正常化했다. 소비에트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반대파의 무자비한 숙청을 合理化했다. 반대파에 대한 철저한 억압은 공산주의체제의 또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네째로 볼셰비키혁명에 사용했던 수단은 職業革命家에 의하여 中央集權的으로 조직된 黨組織이라는 武器였다.

무장력을 물리적인 무기라고 한다면 黨은 조직상의 무기였다. 공산당은 政權奪取를 위한 武裝暴力의 戰鬥司令部인 동시에 그 뒤에 올 공산당독재의 유지를 위한 무기로 보았던 것이다.

#### 다. 共產革命的 惡循環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부담을 加重시키지 않고도 생산력을 加速的으로 높힐 수 있는 현대적 생산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오늘날 뒤떨어진 생산력밖에 가지지 못한 노동자를 추

켜올리고 앞세우는 어떠한 社會改造論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無知에서 오는 한낱 時代錯誤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사회개조 보다도 權力에 대한 욕구불만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煽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회개조론자 즉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과 정권을 장악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계급없는 공산사회를 약속하면서 노동자를 선동하여, 그 선동에 휩쓸려 쫓겨난 노동자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한다.

둘째, 공산당이 노동자를 선동하고 이용하여 政權을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었다고해서 생산력이 갑자기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생산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은 승리는 했지만 최초의 기로에서 방향을 그르치게 되고 노동자들의 자유와 포만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실망으로 돌변하게 된다.

셋째, 그런데 실제로 요긴한 문제인 생산력 제고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산력을 제고하는 방법을 얻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이 시기에 노동자의 희망은 부득이 보류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희망이 보류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장에 생산력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동을 강화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나아가서는 강제노동 등 노동력 착취를 가중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넷째, 그래서 점차로 높아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은 드디어 공산당 권력을 위협하는 잠재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산당은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권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해서 권력의 강화와 노동자의 불만은 交互作用을 하게 된다. 즉 노동자의 불만이 정권을 침해하게 되니 정권을 장악한 자는 정권을 강화하게 되고, 권력이 강화되니 노동자의 불만이 점차로 높아진다는 사실이 꼬리를 물고 돌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이리하여 공산당 권력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걸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그것은 곧 국제적 平和에는 큰 위협적인 존재로 되어서 마침내는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에 대한 억압세력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자는 이전과 다름없는 無力한 가운데 모든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결국은 그 꿈을 아주 잊어버리게 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共產主義運動은 다음과 같은 因果關係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공산당은 時代錯誤的인 노동가치설을 토대로 하는 그 이론구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산력의 중요성과 그 加速的 발전의 방법으로서의 현대적 과학기술의 기능과 가치를 어느 정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서 후진사회가 그 낙후된 생산력을 현대화 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일깨워 준 면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공산당은 復讐的이고 被害妄想的인 그 集團性格 때문에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생산력을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체권력의 강화와 혁명역량을 위한 파괴력의 축적에 충당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밖으로는 국제간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시켜 平和를 뿌리로부터 말살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이 현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집단성격이 개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는 한 공산당이 내거는 어떠한 민주주의적인 또는 평화적인 구호도 그것은 그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장하는 방편적인 선전에 불과할 뿐더러 自由와 平和와 繁榮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5. 共產統治의 一般의 特徵

### 가. 共產主義 人間觀

人權의 尊重과 個性의 自由는 文明社會의 基本이념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의 이 신념을 정면으로부터 부정하려고 시도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말을 빌어서 “인간은 각종 사회관계의 복합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사회적인 생산관계와 생활환경만 변화시킨다면 인간 자체를 저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狂信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物質的 生産力이 특정한 발전단계에 相應한 生産關係의 總體가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그 기초위에 意識形態가 형성된다」고 한 유물사관의 기본공식은 마르크스 이후의 사회생활의 실태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유물사관 신념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모든 社會成員의 개인생활은 유린되고 인격의 존엄성은 무시되었다. 특히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이념이 희박한 후진사회에서 공산화될 경우 그것은 파멸적인 현상을 빚어놓게 되었다. 공산당 통제에 의하여 사회적 생산력을 발전시키면 그만이고 사회적인 것에 개인적인 것을 沒入시킨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광신은 모든 사람의 경제생활을 사회적 소유에 편입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개인의 정신생활마저 사회적 규격에 均一化시키려는 공개적인 사상훈련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한다는 공산당의 일상용어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인간형이란 것은 공산당이 규정하는 교양적인 설교에 의하면 공산주의의 노선에서 노동하며 투쟁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 보면 첫째로 공산주의적 신념과 행동에서의 組織性을 들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산당의 敎示라면 결론·분별·판단·思考方式까지도 지극히 간단명료

하다.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공산당이 펼쳐놓은 각종 조직망 속에 망라되어서 일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주적 행동에 대한 요청도 거의 없다. 공산당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일하기도 쉽고 투쟁하기도 쉽다는 논리이다.

둘째로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특성은 個性消失의 경향과 人格價値의 低下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생산방식에 수반되어 온 것으로서 인간은 공산당이 내리는 책임생산량(노르마)이라는 것에 쫓기면서 엄격한 규제에 의하여 모든 인격을 생산과정 속에 밀어넣고 생산력 확충이라는 목표만을 주로 추구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이렇게 되고보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하는 생산량 완수에만 사로잡히게 되고, 정신생활의 풍부성이나 너그러운 정서면은 물론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 그러한 환경이고 보면 학문도 예술도 정신문화도 꽃필 수 없고 인간은 오직 생산에 쫓겨서 동분서주하며 시달리는 보잘것 없는 빈약한 존재로 되고 만다.

이리하여 공산당 통치하의 인간은 기껏해야 黨員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떨어지게 된다. 더구나 공산당은 본래가 계급투쟁의 당으로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예사이기 때문에 각개인은 계급적 소속과 계급투쟁의 역할 밖에는 정치적 존재의의도 없어지게 되고 만다.

세째로 들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특징은, 보편적 인류애의 부정과 他人의 悲運에 대한 냉담성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공산당의 敎理인 계급투쟁론과 상호관련이 있다. 계급투쟁을 관철하려는데서 人間憎惡思想을 조장하며 폭력을 장려하니 결국 보편적 인류애가 완전히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남는 것은 소위 사회혁명과 공산당의 이익인데 이것이 공산주의도덕의 척도로 되어있다. 공산주의 열성자에게서 人情이나 同情이나 義理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네째로 공산당 통치하에서 공산주의자와 일반대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심리적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초조와 불안이라고 하겠다. 공산당은 주로 후진산업사회에서 정권을 장악한 후 환상에 불과한 공산주



의사회의 실현을 위해 생산력 발전에 매진하게 되므로 모든 것을 성급하게 서두르게 된다. 그래서 생산량이 몇%이고 몇백%를 초과달성했다고 자랑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수량상으로는 높아졌다 하더라도 품질상으로는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비참해지고 수많은 인명재산이 건설도상에서 희생되는 것도 냉담하게 지나고 있다.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특성을 몇가지로 나누어 고찰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정치가 간섭하지 않는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의 분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아무리 팽소국가라고 해도 비록 제한성은 있을지언정 개인생활면의 불간섭분야가 뚜렷하게 존재하는데 공산당 통치하에서는 공산당의 통제와 정치권력의 만능이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체의 사회생활 분야는 물론 개인의 모든 거동과 심지어는 생각하는 활동의 구석구석마저도 통제한다는 사실이다. 공산당의 이와 같은 철저한 人間規格化를 거부하는 사람은 反動分子로 몰려 조만간에 숙청대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 나. 共產主義 生活樣式

공산주의적 생활양식은 공산당의 의식적 추종자만이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사상적으로 공산당의 노선에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생존하자니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산당 통치와 관련된 사회적 조건과 생활환경에의 적응이라고 볼 수 있는 공산주의적 생활양식을 만들어 낸 중요한 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관찰된다.

첫째는 공산당식 경제건설이다. 이것은 비생산적 소비재 지출에 대한 억제력을 의미하는 경제절약과 개인상공업 수탈에 의한 중공업임금 축적을 위하여 강행되는 공산당의 기본정책이다.

이것은 일당독재하에서 급속하게 생산력을 확장하면서 전쟁용 중공업 건설하자면 그러한 방식이 불가피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경제건설과 보조를 맞추어서 강행되는 군비확충과 권력통치기구의 강화가 공산독재하의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비인간적 궁핍과 노예적 신세의 처지에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두번째로 공산주의적 생활양식 조성의 요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개인적 생활토대와 재산기반의 상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편견에 사로잡힘으로써 私有財産의 기반이야말로 인격향상과 인심순화의 기본적 조건이며 德性의 어머니라는 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社會惡의 근원은 私有財産에 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비겁하고 편협한 상태로 이끌고 있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공산당식 생활양식 조성의 요건은 공산당 일당독재에 수반되는 극단적인 조직생활 만능주의와 모든 사물에 대한 통일적인 규격화의 경향이다. 조직만능 사상은 결국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개인적인 義理를 소멸케 한다.

개인생활의 조직의존성 조성과 함께 추진되는 통일적 규격화의 경향은 공산당 통치하의 주민생활에서 개인적인 희망을 사라지게 하며 다양한 꿈을 여지없이 깨뜨리게 한다.

생활이 끊임없이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다는 것은 누구나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당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군중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주민들은 현실에서 가망이 없는 낭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희망을 틀에 박힌 것이나마 영화·연극·노래로써 발산시키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확고한 전통적 기반의 자유로운 발전에 입각하지 않는 공산당 통치하의 사회문화생활은 물질적 토대의 불안정과 더불어 인간 정신과 그의 행동을 항상 들뜨고 바쁘고 침착성 없는 것으로 이끌어 가게 한다.

공산당통치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폭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당독재
- 극단적인 不自由와 기본인권 무시
- 개인노력 성과의 강압적 수탈
- 계급투쟁이라는 이름의 無慈悲性
- 종교신앙에 대한 멸시와 박해
- 철의 장막으로 外界와 차단
- 報道의 철저한 통제와 改作
- 相互暗害와 숙청선풍의 日常化
- 流血的 강제노동 감행
- 不平等표방하에 새로운 不平等 출현
- 철저한 組織依存성과 개성 유린
- 부당한 重勞動과 독촉
- 초조·불안·공핍의 보편화 등이다.

공산당통치와 같은 독재정치는 계획의 일관성·처리의 신속성·통제의 강력성등을 장점으로 하는 동시에 공산정권은 국내외적으로 民心離脫의 위험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산당독재는 인류문화 발전이 희구하는 自由와 民生安全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있는터이고 민생안전에 대해서도 그 표방과는 달리 狂信의 실천과정에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하게 지적할 공산당통치의 결함은 무자비한 계급투쟁과 항상 적을 만들어서 투쟁하는 그 生理的인 투쟁성이라 하겠다.

## 6. 共產社會建設의 虛構性

공산주의자들이 政權을 장악한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實相을 보면 공산주의가 목표로 내세운 理想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공산주의의 根本思想과 목표 자체가 실행이 不可能하다는데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私有財産의 否定과 地上樂園 建設의 꿈이다.

### 가. 私有財産 廢絶의 妄想

본래 공산주의의 소박한 개념은 “私有財産이 모든 罪惡의 根源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없애버리고 재산을 공동관리만 하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近代的 의미로서의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레닌主義도 理念的인 前提가 되는 것은 私有財産의 否定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必要要件이며 사람의 生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된다. 자기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責任을 지며, 자기의 行爲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道德의 근본이 된다. 적어도 인간은 自立하는 인간이어야 하고 自活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은 국민 개개인의 自立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립한 사람이 없는 곳에 참다운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한 결과 주민들은 예외 없이 生活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적으로 국가 즉 공산당에 예속되는 한편 독립된 가치관이 있을 수 없는 까닭에 공산주의 사상에 맹목적으

로 복잡하고 틀에 박힌 이데올로기의 올가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유재산은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으로 사유재산 없이는 人間尊嚴性의 보호도 없고 생존의 자유도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우리는 所有가 늘어남에 따라 자유도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을 歷史를 통하여 알고 있다. 물론 사유재산에 구애되어서 국가의 통치나 국가방위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재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 사람들의 權利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사유재산이 좋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없애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私有財産의 폐절」을 들고 나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공산혁명을 일으켜 수십년 동안(소련의 경우는 70년)을 공산통치한 결과 사유재산은 없앨 수가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즉 오늘날 공산국가들은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유재산의 폭을 조금씩 늘려주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공산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유재산 전부를 國有化하거나 共有化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사유재산 소유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삼는 공산국가에 왜 사유재산이 허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명백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공산국가에서는 이에 관한 뚜렷한 해명도 없이 다만 선전과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사유재산을 理念的으로 否定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공산국가에 사유재산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로 보아서도 사유재산은 어떤 의미에서든 필요한것만은 부인하지 못한다.

더우기 거의 모든 공산국가에서 사유재산의 폭은 점점 확대되어 공산당 간부나 행정관료 등 소위 「노멘끄라투라」라고 불리우는 特權階級들은 사유재산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世襲化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사유재산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단지 이론상의 문제이고, 사실상으로는 아무렇게 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여기에 공산주의의 근본적인 虛構性이 숨어 있는 것이다.

## 나. 地上樂園의 꿈

공산주의의 근본이 되는思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虛構性은 私有財産을 廢絶하면 地上樂園이 이룩된다는 非科學的인 幻想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만 없애면 모든 계급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공산국가에서는 착취가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산국가에는 예외없이 엄연히 계급이 존재하며 모든 분야에서 계급간의 격차가 현저하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으로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없는 사회를 내걸면서 권력을 잡기만하면 어느 틈에 그 國家權力을 自己目的化 해버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날뛰던 職業革命家들은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재빨리 特權階級으로 탈바꿈 해버린다.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한편에서는 절대적인 특권을 가진 특권계급이 생겨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억압만 받는 가운데 오직 노동할 의무만 짊어진 계급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오늘날 공산국가의 특권계급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온갖 특권을 世襲的으로 물려줄 수 있는 保障裝置마저 만들어 놓고 있다.

노동자의 解放과 平等 그리고 階級消滅을 표방하는 공산국가에 특권계급이 생겨나고 그 특권층이 世襲化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산국가에 계급없는 理想社會 즉 地上樂園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낱 幻想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공산사회가 되면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한대로 받는다」고 하는 地上樂園의 꿈은 虛妄한 소리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이 노동은 能力만큼만 하고 그 대신 원하는대로 얻을 수 있으려면 그 사회는 無制限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資源은 제한되어 있어서

무제한의 생산이란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무제한의 人間慾望을 다 채워줄 수도 없다.

그리고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받는다는 말에는 함정이 있다.

즉 능력만큼 일해야 하는 그 능력은 각개인이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國家내지는 공산당이 인정하고 부여하는 能力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해야 하는 勞動量은 각개인이 생각하는 노동량이 아니라, 공산당이 요구하는 노동량인 것이다. 또 必要에 따라 받는다는 그 필요도 개인이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라 공산당으로 부터 주어지는 필요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가 생각하는 能力과 必要는 공산당이 생각하는 能力과 必要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라고 하는 사회주의국가 즉 공산국가에서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얻는다」는 구호밑에 노동자의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人類가 도달하지도 못할 공산주의사회라는 虛妄된 地上樂園을 표방하면서 인간에게 한없는 憎惡와 鬭爭을 강요하며 그 理想世界를 共產獨裁라는 強制權力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증오와 투쟁이 幸福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증오와 투쟁은 필경 오늘날의 공산국가 처럼 서로 監視하고 同志間에 투쟁하고 피비릿내 나는 肅清을 하는 살벌한 사회로 歸着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未來의 地上樂園을 증오와 투쟁으로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幻想은 한낱 꿈이 아니라면 素朴한 국민대중을 煽動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다. 理想과 現實의 昏迷

공산주의자들이 煽動口號로 부르짖는 理想社會로서의 공산주의사회

는 적어도 공산주의자에 의한 실현이 不可能하다는 것은 이미 공산혁명 70년을 통한 경험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첫째, 공산주의자들은 無慈悲한 獨裁政治를 감행하면서도 「幸福한 地上樂園」을 만든다고 한다.

둘째,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特權階級을 만들고 계급간의 격차를 점점 확대하면서도 「階級없는 社會」를 창조한다고 한다.

셋째, 공산주의자들은 一黨獨裁를 만들고 國家權力을 점점 더 強化하면서도 「國家의 死滅」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를 賤待하고 抑壓하고 최대한으로 酷使하고 搾取하면서도 「勞動階級の 解放」을 부르짖고 있다.

다섯째, 공산주의자들은 특권계급의 私有財産을 점점 늘어나게 하고 그것을 相續시킬 수 있는 보장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私有財産이 없는 社會」를 지향한다고 한다.

여섯째, 공산주의자들은 憎惡와 鬭爭을 煽動하고 共產革命을 최대한으로 輸出하면서도 「永遠한 平和의 樂園」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逆說的인 현상들은 공산주의자들이 意識的으로 만들어 냈던 것이 아닌 사실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공산주의의 허황된 理想이 실현 불가능한 空論일 뿐 아니라 공산주의 자체가 허다한 矛盾과 誇張과 獨斷과 偏見과 非科學性과 非人間的 要素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共產主義는 시대적인 산물이다.

물론 공산주의도 시대의 變遷과 더불어 수정되고 변화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밑바탕이 되는 要素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적어도 자본주의와 非共產主義體制를 타도하고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표방 아래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만은 고집스럽게 堅持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價値體系에 속하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는 놀랄정도로 무지하다. 자기들만의 가치체계 속에 파묻혀서 그 체계에



서 생겨나는 모든 잘못된 사실에 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끈질긴 敵對意識을 갖는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비교할 때에는 「共產主義 理想」은 「自由民主主義 理想」과 비교하고, 「공산사회의 현실」은 「자유민주사회의 현실」과 비교해야만 한다. 「共產主義 理想」과 「自由民主社會의 現實」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理想은 理想이고 現實은 現實이기 때문에 理想은 理想끼리 비교하고 現實은 現實끼리 비교해야만 한다.

「勞動者의 天國」을 만들었다는 오늘날의 소련의 노동자는 미국의 노동자보다 못살고 동구라파 노동자들은 서구라파 노동자보다 못살고, 동독의 노동자는 서독의 노동자보다 못살고 中共의 노동자들은 自由中國의 노동자보다 못살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남한의 노동자들보다 못살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勞動者의 天國」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게 된다.

첫째, 공산주의가 과연 노동자와 함께 농민의 천국이라면 무엇 때문에 공산국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鐵의 帳幕」을 내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共產主義 天國」을 「資本主義 地獄속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공산국가가 천국이라면 滿天下에 公開하여 자랑할 것이지 왜 꼭꼭 숨겨놓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둘째, 공산국가가 진정 천국이라면 지옥같은 자본주의나라에서 천국같은 공산주의나라로 集團的인 移住가 이루어질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천국」인 공산국가에서 「지옥」인 자본주의국가 쪽으로 大量으로 脫出해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셋째, 「奇蹟的인 繁榮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西獨勞動者들 사이에는 오늘날 마르크스主義와 결부된 공산주의는 거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社會主義라고 하는 말조차도 거의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社會主義가 아니라 共同化이다.

무엇 때문에 서독의 노동자는 사회주의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

英國의 노동자들도 「産業 國有化」의 필요성을 아무리 힘주어 설명해도 무표정한 얼굴을 한다고 한다. 결국 영국에서도 산업 국유화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거의 흥미를 잃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자본주의국가 중에서도 가장 앞선 英國과 西獨에서 노동자들이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에 흥미를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자의 낙원이었어야 할 공산국가에서 노동자의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프롤레타리아 解放」이라고 하는 거창한 救世主的인 使命感과 결부된 「共產主義的 帝國主義」가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6·25南侵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匈牙利事態, 폴란드事態, 체코슬로바키아事態에서 유감없이 폭로되었다.

匈牙利事態에서는 7만명의 노동자가 反革命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소련탱크에 깔려 희생이 되었다.

말하자면 「勞動者 解放」이라는 명분하에서 「勞動者 虐殺」이 저질러진 것이다.

「勞動者의 王國」을 건설하겠다고던 共產主義의 理想이 이런 모습으로 現實化되리라고는 예상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 7. 結 言

우리는 지난날 나라를 잃었던 고통과 서러움을 맛보았으며 6·25 共產南侵을 통해서 同胞끼리 피흘리며 총뿔리를 겨누는 悲劇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경험했다. 오늘도 우리는 民族分斷이란 커다란 시련 속

말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社會主義가 아니라 共同化이다.

무엇 때문에 서독의 노동자는 사회주의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

英國의 노동자들도 「産業 國有化」의 필요성을 아무리 힘주어 설명해도 무표정한 얼굴을 한다고 한다. 결국 영국에서도 산업 국유화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거의 흥미를 잃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자본주의국가 중에서도 가장 앞선 英國과 西獨에서 노동자들이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에 흥미를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자의 낙원이었어야 할 공산국가에서 노동자의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프롤레타리아 解放」이라고 하는 거창한 救世主的인 使命感과 결부된 「共產主義的 帝國主義」가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6·25南侵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헝가리事態, 폴란드事態, 체코슬로바키아事態에서 유감없이 폭로되었다.

헝가리事態에서는 7만명의 노동자가 反革命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소련탱크에 깔려 희생이 되었다.

말하자면 「勞動者 解放」이라는 명분하에서 「勞動者 虐殺」이 저질러진 것이다.

「勞動者의 王國」을 건설하겠다는 共產主義의 理想이 이런 모습으로 現實化되리라고는 예상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 7. 結 言

우리는 지난날 나라를 잃었던 고통과 서러움을 맛보았으며 6·25 共產南侵을 통해서 同胞끼리 피흘리며 총뿔리를 겨누는 悲劇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경험했다. 오늘도 우리는 民族分斷이란 커다란 시련 속

에서 가지지 않는 상처의 아픔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의 歷史의 敎訓을 새롭게 되새기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있었던 상처의 아픔을 잊어버리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共產國家 중에서도 가장 閉鎖的이고 異端的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북한공산집단과 對峙하면서 끊임 없는 侵略威脅을 슬기롭게 對處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그들을 조국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對話의 마당에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세계적으로는 全人類가 共產主義라는 癩的인 존재로 인해 生存과 平和를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공산주의의 위협은 단순한 安全에 대한 위태로움이 아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은 文明에 대한 挑戰인 것이다.

世界平和와 社會正義 그리고 人間尊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산주의는 國際平和와 질서를 위협하고 勢力擴張과 侵略을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歷史的 罪과를 범했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共產主義 思潮가 문제시 되는 사회는 共產主義 革命公式과는 반대로 先進資本主義社會가 아니라 내부 불안을 안고 있는 開發途上國家라는 점이 주목된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택 하면서 아직도 발전초기 단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宣傳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에서 不安을 느끼는 사람, 자유경쟁 체제에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物質萬能主義에 拒否感을 느끼는 사람, 사회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고 높아진 기대와 욕구의 충족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 자본주의 체제의 長點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民主福祉社會로 발전한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경우 공산주의

는 이제 문제시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代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立證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敎訓은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이 人類共同의 숙제인 人間不平等의 解消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歷史的 기록과 경험들이다.

### 〈參 考 文 獻〉

1. 原典 共產主義大系, 極東問題研究所 刊
2.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民族主義, 亞細亞文化社 刊
3. 이념교육지도지침서(上·下), 극동문제연구소 간
4. 社會主義와 共產主義, 靑文社 刊
5. 共產主義批判 方法論 摸索, 韓國精神文化研究院
6. 레닌主義의 전략과 한국지성, 韓國精神文化研究院
7. 康仁德, 共產主義와 統一戰線
8. 共產主義 批判, 極東問題研究所
9. 共產主義革命類型과 實體, 自由評論社
10. 俞斗烈, 마르크스·레닌主義崩壞
11. 칼·마르크스 著, 「哲學의 貧困」
12. 칼·마르크스 著, 「經濟學·哲學 草稿」
13. 칼·마르크스 著, 「도이체 이데올로기」
14. 칼·마르크스 著, 「共產黨 宣言」
15. 칼·마르크스 著, 「資本論」
16. 칼·마르크스 著, 「고타綱領 批判」
17. 엥겔스 著, 「家族·私有財產·國家의 起源」
18. 엥겔스 著, 「反帝—링論」
19. 레닌 著, 「國家와 革命」
20. 레닌 著, 「무엇을 할 것인가」
21. 스탈린 著, 「레닌主義 諸問題」

## II. 現代左傾思想

尹 璟 泰(統一研修院 教授)

1. 急進左傾思想의 概念	52
2. 先進産業社會의 急進左傾思想	56
가. 네오마르크스主義	56
나. 뉴레프트운동	65
3. 後進國의 急進左傾思想	67
가. 新帝國主義論	67
나. 從屬理論	71
다. 買辦資本論	78
라. 解放神學	82
4. 韓國의 急進左傾思想	86
가. 急進左傾思想의 流入	86
나. 民衆이데올로기의 本質	90
다. 民衆革命論者들의 統一安保觀	94
라. 民衆이데올로기의 問題點	95

## 1. 急進左傾思想의 概念

최근 우리 社會는 急進左傾思想의 不分별한 流入과 이에 오염된 일부 知識人과 學生들의 反政府次元을 넘어선 體制否定的 主張과 社會의 “民主化運動”을 빙자한 과격한 示威·騷擾로 인해 큰 陣痛을 겪어 왔다.

이들은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급진좌경사상을 批判意識없이 받아들여 마치 폭력적 左傾思想만이 절대적 眞理인양 맹신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기본바탕인 自由民主主義體制와 憲政질서를 暴力革命的 方法으로 파괴하려 하고 있다.

때로는 이들이 北韓共產集團의 宣傳과 煽動에 말려들어 그들의 基本路線과 對南革命戰略을 동조·지지하는 傾向마저 나타내고 있는 데 問題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급진좌경사상에 대한 옳바른 理解만이 우리의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급진좌경사상의 本質과 그 思想的 傾向은 어떠한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急進左傾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左傾이라는 用語는 국어사전에서 보면, “왼쪽으로 기울어짐”, “社會主義—共產主義 등의 左翼으로 기울어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左傾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먼저 左翼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左傾이란 단어가 政治的 용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佛蘭西大革命(1789) 後로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는 불란서 대혁명으로 舊體制가 무너지고 1791년 10월 1일 三部會議가 國民會議로 개편되었을 때 議長席을 중심으로 온건 立憲君主制를 추구하는 지롱드(Girondes)派는 右側에, 그리고 共和政으로의 急激한 변화를 추구

하는 자코방(Jacobins)派는 좌측에 앉았던 데서 비롯된다. 이 때 자코방派를 左翼이라 불렀다. 따라서 그 당시에 사용된 좌익이라는 개념은 현재와 같이 공산주의에 대한 용어라기보다는 막연하게 反政府的인 集團이나 勢力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左翼이란 말이 政治的 용어로서 특정한 社會政治思想이나 行動의 경향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즉 오늘 날 左翼(左派)이라 하면, 넓은 의미에서의 社會主義者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되었고, 한편 右翼(右派)이라 하면 資本主義的 自由主義者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왔다.

이와 같이 左翼이나 右翼이라 함은 절대적 概念이 아니라 相對的 개념이기 때문에 좌익에도 中途左派라든가 極左派라는 분류방법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일반적으로 左翼이라 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여러 부류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게 된다. 즉

① 프롤레타리아革命, 私有財産制의 철폐, 共產黨의 獨裁를 주장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共產主義者.

② 노골적으로 共產主義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私有財産制와 自由民主主義를 부정하는 사람들

③ 북한 共產集團을 포함하여 敵對的 共產國家의 상황을 好意的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등이다.

이러한 좌익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고찰할 때, 좌익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좌경적인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부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① 左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표면적인 主張과 行動이 좌익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람.

② 확고한 좌익이라 볼 수 없으나, 좌익적 思想이나 行動에 同情的 이거나 同調的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이상과 같이, 左翼과 左傾은 개념이 확연히 다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통상 左傾의 개념속에 좌익도 포함시키고 있다. 즉 현재 당국이



나 言論에서 좌익과 좌경을 구분하지 않고 좌경이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범주에 속하는 對象者들이 대부분 배움의 과정에 있는 知的으로 미숙한 단계의 大學生들이기 때문이다.

다음 急進이란 용어와 관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急進主義란 現存秩序나 體制에 극도의 不滿을 갖고 革命的方法으로 現存질서를 변혁할 것을 주장하는 思想的傾向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연유하는 급진 사상은 사회주의 좌파에 속하는데, 그 일반적 특징을 보면, 資本主義體制를 부정하고 社會主義 건설을 표방하면서 暴力手段을 정당화하는데 있다. 즉 急進主義者들은 사회주의나 共產主義를 人本主義(Humanism)라고 강변하는 반면, 자본주의는 인간소외를 창출함으로써 人間을 非人間化시키는 體制이므로 이를 否定하고 止揚시키기 위하여서는 暴力手段의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폭력수단의 動員을 위한 道具로서 民衆을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代 急進左傾思想의 이론적 支柱로서는 네오마르크스主義, 新帝國主義論, 從屬理論, 買辦資本論, 解放神學 등이 있다. 이들 理論들의 공통적 특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資本主義體制를 부정하고, 階級鬭爭論的인 兩分法에 의해 社會構成을 支配와 被支配계급의 투쟁적 對決로 구분하고 폭력혁명을 통해 社會主義 社會를 건설해야 한다는 데 있다.

마르크스주의가 19세기의 初期 資本主義를 배경으로 발생했다면, 레닌주의는 20세기 초반의 러시아의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現代 急進左傾思想은 20세기 중반(1960년대)의 西歐의 先進産業社會와 제3세계 특히 中南美 후진국의 低發展을 배경으로 성립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에 발표한 “共產黨宣言”에서 資本主義社會는 고도로 발전하면 그 內的 構造的 矛盾에 의해 必然的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革命에 의해 붕괴되고 歷史發展의 법칙에 따라 계급도 국가도 없는 공산주의 社會로 移行하게 된다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資本主義 社會는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몰락하지도 않았고 프롤레타리아 階級에 의한 暴力革命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自體修正과 適應力을 통해 풍요한 福祉의 先進産業社會를 이룩하였다. 그런가 하면 볼셰비키혁명(1917년)이후의 소련에서는 스탈린 體制下에서 방대한 官僚主義的 獨裁體制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사회주의자들 뿐만아니라 공산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마르크스의 初期思想을 人本主義(Humanism)라 규정하고 마르크스주의에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思想이 대두되었는데, 이것이 소위 네오마르크스주의(Neo-Marxism)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레닌이 마르크스주의를 왜곡시켰으며, 마르크스의 基本思想은 人間疏外를 극복하여 社會主義社會를 건설하려는 人本主義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의 연장선 위에서 現代産業社會를 비판하고, 그 극복을 위한 革命的 주도세력으로서 知識人과 學生의 역할을 강조한 左傾勢力을 가리켜 新左翼(New Left)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의 좌경사상의 영향을 받아, 제3세계 특히 中南美地域에서도 新生國들이 政治的 獨立은 획득하였으나, 經濟的 發展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西方 先進國의 經濟的·文化的 支配때문이라는 주장들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理論들이 新帝國主義論, 從屬理論, 買辦資本論 등이며, 또 이 이론들이 神學과 결부하여 나타난 것이 解放神學이다. 이들 이론에 의하면, 第3世界國家들이 低發展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서구 資本主義國家들에 의한 經濟的 支配때문이라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社會主義革命에 의한 改革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現代 急進左傾思想은 西方 선진국에서는 일시 뉴레프트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그 뒤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政治的·社會的 問題가 많은 後進國에서는 기존의 社會體制에 정면

으로 도전하는 파괴적 요인으로 등장하여 큰 社會的 問題를 야기시켰으며, 우리나라에도 교묘하게 침투하여 社會的 不安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先進産業社會의 急進左傾思想, 後進國의 急進左傾思想, 韓國의 急進左傾思想으로 크게 분류하고, 先進産業社會의 急進左傾思想으로서는 네오마르크스주의와 뉴레프트運動을, 그리고 後進國의 급진좌경사상으로서는 新帝國主義論, 從屬理論, 買辦資本論, 解放神學을 차례로 고찰한 다음, 이러한 급진좌경사상들이 한국의 社會狀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2. 先進産業社會의 急進左傾思想

### 가. 네오마르크스主義

#### 1) 概念

네오마르크스主義(Neo-Marxism)란 여러 사람들에 의해 問題가 제기되거나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한 마디로 定義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레닌이후의 소련 共產主義者들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본래의 思想과 理論을 왜곡·변질시켰다고 보고, 마르크스의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人本主義(Humanism)의 입장에서 그의 思想과 理論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東歐와 西歐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의 思想的 傾向이라 할 수 있다.

네오마르크스주의는 Neo 라는 말이 뜻하듯이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 概念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네오마르크스主義에는 廣義의 개념과 狹義의 개념이 있는데, 廣義의 개념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롯하여 마르크스주의에 관련되는 모든 思想과 理論들이 포함되며, 狹義의 개념에는 마르크스의 初期작품을 중심으로 人

으로 도전하는 파괴적 요인으로 등장하여 큰 社會的 問題를 야기시켰으며, 우리나라에도 교묘하게 침투하여 社會的 不安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先進産業社會의 急進左傾思想, 後進國의 急進左傾思想, 韓國의 急進左傾思想으로 크게 분류하고, 先進産業社會의 急進左傾思想으로서는 네오마르크스주의와 뉴레프트運動을, 그리고 後進國의 급진좌경사상으로서는 新帝國主義論, 從屬理論, 買辦資本論, 解放神學을 차례로 고찰한 다음, 이러한 급진좌경사상들이 한국의 社會狀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2. 先進産業社會의 急進左傾思想

### 가. 네오마르크스主義

#### 1) 概念

네오마르크스主義(Neo-Marxism)란 여러 사람들에 의해 問題가 제기되거나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한 마디로 定義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레닌이후의 소련 共產主義者들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본래의 思想과 理論을 왜곡·변질시켰다고 보고, 마르크스의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人本主義(Humanism)의 입장에서 그의 思想과 理論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東歐와 西歐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의 思想的 傾向이라 할 수 있다.

네오마르크스주의는 Neo 라는 말이 뜻하듯이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 概念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네오마르크스主義에는 廣義의 개념과 狹義의 개념이 있는데, 廣義의 개념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롯하여 마르크스주의에 관련되는 모든 思想과 理論들이 포함되며, 狹義의 개념에는 마르크스의 初期작품을 중심으로 人

本主義的 입장에서 그의 思想과 理論을 재 해석하려는 사상적 경향들만이 포함된다.

마르크스主義의 변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思想과 이론을 正統마르크스主義라 부르고, 그 이후의 마르크스주의를 續마르크스주의라 부르며, 續마르크스주의 이후의 마르크스주의를 네오마르크스주의라고 한다는 것이다. 속마르크스주의에는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 중공의 毛澤東주의, 유고의 티토주의 등이 포함되며, 네오마르크스주의에는 1950년대이후에 재 해석된 마르크스주의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안드레아스 폰 바이스(Andreas von Weiz)는 네오마르크스주의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① 네오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續마르크스主義의 한 유형이다.

② 네오마르크스主義는 제도·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서구마르크스主義의 한 유형이다.

③ 네오마르크스主義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政黨이나 社會團體의 주장이라기보다는 個人들(社會學者, 哲學者, 經濟學者, 心理學者, 神學者)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때,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그 亞流的 해석이라 하겠다. 그리고 네오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다같이 비판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대부분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네오마르크스주의는 1960년대초부터 1970년대초까지 구미 각국과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 國家에 유행하였던 뉴레프트運動의 思想的 지주가 되었으며, 1970년대초부터 우리나라에도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여져 大學街를 중심으로 社會混亂의 씨앗이 되고 있다.

## 2) 形成背景

마르크스주의가 初期 資本主義를 배경으로 성립되었다면, 네오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의 高度産業社會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를 時空을 초월한 無誤謬의 절대적 眞理로 신봉하였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高度로 발전하면 그 자체의 構造的 모순에 의해 必然的으로 붕괴되고 階級도 國家도 없는 共產主義 社會로 移行한다는 마르크스의 예언은 20세기의 高度産業社會에 와서 共產主義 國家에서나 資本主義國家에서나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이러한 狀況에 처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正統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이나?”, 또는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는 무엇이나?”하는 등의 문제들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서구마르크스주의자들의 自己省察, 自己反省, 또는 自己批判이라는 명분으로 등장한 것이 네오마르크스주의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들로써는 이태리의 그람시(Antonio Gramsci) 헝가리의 루카치(Georg Luckacs), 독일의 코르쉬(Karl Korsch), 프랑스의 알튀세(Louis Althusser), 르페브르(Henri Lefebvre)등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인데, 이들이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선구자들이다.

이태리의 공산주의자인 그람시는 그의 저작 “옥중기”에서, 마르크스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별하고 知識人과 勞動者는 다른 것으로 본 데 대해, 知識人과 勞動者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 바로 노동자라고 주장하면서 미래의 革命은 지식인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헝가리의 마르크스주의자인 루카치는 그의 저작 “歷史와 階級意識”(1922년)에서, 마르크스가 그의 辨證法에서 강조했던 人間의 구체적 측면이 스탈린과 같은 후계자들에 의해 무시되었다고 지적하고, 마르크스 辨證法의 정확한 뜻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였다. 루카치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본래의 理想은 人間의 意識이 모두 상품의 論理로 통용되

고 있는 近代 資本主義社會에서 人間의 事物化 또는 疏外現象을 극복하고 人間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루카치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唯物論的으로만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主體(人間)와 客體(物質)간의 관계로 받아 들여야 하며, 그 主體는 프롤레타리아의 前衛인 黨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전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의 特權化된 共產黨獨裁를 비판하였다.

코르쉬는 그의 著書 “마르크스주의와 哲學”(1923)에서, 마르크스주의 哲學의 핵심은 변증법에 있다고 전제하고, 소련의 公認哲學을 비롯해서 모든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였는데, 특히 레닌의 理論을 가리켜 ①黨派的 鬭爭을 위한 理論, ② 부르주아 哲學과 同一한 唯物論, ③ 民主主義를 적대시하는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의 批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哲學不在를 지적한 것이며, 蘇聯共產黨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 결과, 「코민테른」의 조치에 따라 루카치는 自己批判을 강요당했고, 코르쉬는 黨에서 추방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初期作品인 “經濟·哲學手稿”(1844년), “獨逸이데올로기”(1846년) 등이 1932년 독일 社會民主黨의 도서관에서 發見되었고, 또한 소련의 마르크스·엥겔스·레닌研究所에서 “마르크스·엥겔스全集”이 發刊됨으로써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著書들의 발견과 발간은 마르크스주의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의 정통성에 대한 이론적 도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學派라고 불리는 일단의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휴머니즘적 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찌즘, 소련의 스탈린주의 등의 全體主義國家에 있어서의 人間疏外現象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體制批判的 理論을 定立하였다. 이들의 이론을 “批判理論”이라 하는데, 이러한 研究는 第2次 大戰후에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 代表的 人物로는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마르쿠제(Her-

bert Marcuse), 하버마스(Jurgen Habermas) 등을 들 수가 있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1914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대학 社會研究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2차 대전중의 나치스시대에는 미국의 뉴욕에서 研究를 하다가 1950년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비판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이들의 批判理論은 1960년대에는 주로 서구 선진자본주의국가의 體制 저항적 學生運動의 촉매제가 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後進國에서의 지식인과 학생들에 의한 反政府·反體制運動의 이론적 支柱로 확산되었다.

### 3) 類派와 內容

#### 가) 類 派

네오마르크스주의는 東歐 네오마르크스주의와 西歐 네오마르크스주의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東歐 네오마르크스주의는 學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國家機關의 全體主義的 支配를 비판하고 社會主義制度내에서의 “民主主義”의 發展을 주장한다. 대표적 人物로는 폴란드의 콜라코브스키(Leszek Kolakowski), 샤프(Adam Schaff), 체코의 시크(Otto Sik), 코시크(Kaerl Kosik), 유고의 페트로비치(Gajo Petrovic) 등이 있다.

西歐 마르크스주의는 우선 批判理論을 대변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學派와 프랑스의 實存主義的 네오마르크스주의와 構造的 네오마르크스주의를 들 수가 있다. 實存主義的 네오마르크스주의의 代表的 人物은 코예프(Alexandre Kojève), 샤프트르(Jean Paul Sartre) 등이며, 構造的 네오마르크스주의의 代表的 人物은 알튀세(Louis Althusser) 등이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네오마르크스주의라고 하면 그 主流는 프랑크푸르트學派인데, 이들은 마르크스를 人本主義者로 부각시켜 그의 疏外論을 現代産業社會 비판의 基本적 分析의 틀로 사용하여 人間疏外의 해소 즉 人間解放을 위한 革命의 主導勢力은 知識人과 學生이어야 한



다는 論理이다.

### 네오마르크스주의의 類派

네오마르크스주의의 先驅者들		그람시(이태리), 루카치(헝가리), 코르쉬(독일), 알튀세(프랑스), 르페브르(프랑스) 등
東歐네오마르크스주의		콜라코브스키(폴란드), 샤프(폴란드), 스타크(체코), 시크(체코), 코시크(체코), 페트로비치(유고), 블로흐(동독) 등
西歐네오마르크스주의	프랑크푸르트學派	호르크하이머(독일), 아도르노(독일), 마르쿠제(독일), 하버마스(독일) 등
	構造主義派	알튀세(프랑스) 등
	實存主義派	코예프(프랑스), 샤프트르(프랑스) 등

\* 主流은 프랑크푸르트學派임

#### 나) 內容

i) 人本主義와 疏外論: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 특히 프랑크푸르트學派는 마르크스의 初期作品에 초점을 맞추어 마르크스를 人本主義者로 보며, 그의 勞動疏外論도 人本主義에서 출발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초기作品인 “經濟·哲學手稿”(1844)에 “共產主義는 人本主義이다”라는 命題가 있다는 데 근거한다.

마르크스의 초기작품에서 인간의 회복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生活을 하지 못하고, 事物化되고 非人間化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소외론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人間疏外의 근원이 私有財産制에 있다고 보고, 그 根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社會革命을 통해 생산수단의 私的 所有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면, 資本主義國家에서는 물론이고

私有財産制가 폐지된 社會主義國家에서도 여러 가지의 소외가 존재하며, 오히려 強制勞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問題는 마르크스의 基本思想이 과연 人本主義에서 출발하였으며, 人間疏外の 근원이 私有財産制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ii) 現代産業社會 批判 : 프랑크푸르트학파의 基本理論은 비판이론이다. 이들은 2차 대전전에는 피시즘의 비판에, 그리고 2차 대전후에는 東西양진영의 現代産業社會의 비판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의 이론이 理論과 實踐의 괴리의 극복이라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네오마르크스주의와 다른 점이 없으나,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現代産業社會에 대한 비판이다. 그 결산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共著인 “계몽주의 변증법”(1947)과 마르크제의 “一次元的 人間”(1964)이다.

이들은 대체로 마르크스의 경제적 착취론이나, 노동계급 궁핍화론과 階級鬭爭論이 現代産業社會의 비판에는 들어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마르크스의 소외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人間解放戰略을 전개하였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현대산업사회의 문화는 “습理化”라는 명분하에 모든 것을 규격화·획일화함으로써 人間理性은 그 自律性を 상실한 채 理性 자체가 지배의 道具 즉 “도구의 이성”으로 전락하게 되고,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산업사회는 全體主義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現實批判”을 통한 계몽된 인간의 자율성 회복을 人間解放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제는 현대의 고도산업사회를 技術의 發達로 전면적 통제가 가능한 “一次元的 社會”로 규정하고, 이 “一次元的 社會에서는 모든 개인이 技術과 文化의 體系에 얽매여 批判的 思考와 항의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됨으로 결국 전체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하면서, 이의 克服策으로 “否定的 정신” 즉 拒否의 정신에 의한 인간해방을 주장하였다.

하버마스는 현대산업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가—노동자간의 矛盾이 아니라 社會的 意思疏通의 구조적 왜곡이라고 보고, 이의 해결책으로 비판적 認識能力을 바탕으로 한 해방적 대화(discourse)를 통한

인간해방을 주장하였다.

iii) 革命과 知識人 :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를 혁명의 主體로 보았으며, 레닌은 혁명전술상 勞動者·農民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마르쿠제, 하버마스 등의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대산업사회에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職業의 안정과 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 동화되어 革命意識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知識人과 학생이 인간해방을 위한 革命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쿠제는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해방을 위해서는 과격혁명도 불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批判理論을 집대성한 하버마스는 과격한 폭력행위는 반대하였다.

현대산업사회의 인간해방을 위한 혁명에 있어서 知識人의 역할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이태리의 공산주의운동의 선구자인 그람시(Antonio Gramsci)이다. 그는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는 知識人이 바로 勞動者라고 보고, 노동자 대열속에 지식인이 있어야 하며, 政治와 勞動간에는 유기적 連帶性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마르크스의 경제적 착취이론만으로는 현대산업사회의 勞動운동을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인이 새로운 노동계급을 형성하여 革命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러한 지식인에 의한 革命觀은 당시의 유럽의 학생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격폭력시위를 유발하게 되었다. 특히 1968년 프랑스의 5월혁명은 “신노동계급론”의 실천적 선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종속이론, 해방신학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4) 批 判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소련의 敎條的 해석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통해 학문적 研究의

개방화를 촉진하였으며, 物質文明의 발달로 인한 人間價値의 전도현상 등 現代産業社會의 제반 문제점의 연구에 몰두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價値와 기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네오마르크스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①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의 基本思想이 社會革命論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마르크스의 초기사상이 人本主義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시각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하고 속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려고 하지만, 마르크스의 일관된 사상은 사회혁명론이며, 人本主義는 그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②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명확한 代案이 없는 現實批判 이데올로기이다. 그들의 현실비판은 대부분 학문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재해석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이론과 現實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비판을 위한 비판은 파괴적 성향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③ 네오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사회와 자본주의사회를 동시에 비판한다는 小道지향적 성격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본주의사회의 비판에 치중하고 있다. 현실비판이란 사상·학문·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개방사회(자본주의사회)에서는 통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폐쇄사회(공산주의사회)에서는 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暴力革命을 통해 사회변혁을 시도하려는 점이다. 마르크제와 같은 急進論者들은 資本主義社會의 잠재력과 탄력성을 무시한 채 革命과 체념의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급격한 변혁은 오히려 억압과 生命과 財産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敎訓이다.

## 나. 뉴레프트運動

### 1) 概念

뉴레프트運動이란 1960년대~1970년대에 걸쳐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젊은 知識人, 學生들이 전개한 과격한 反體制改革運動을 말한다.

뉴레프트(New Left)라는 用語는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영국 共產黨과 急進的 社會主義者들이 自身들의 입장을 밝히는 몇 가지 정기간행물을 발행해 오다가 1960년초에 “New Left Review”誌를 창간한 데서 연유한다,

뉴레프트는 新左翼 또는 新左派로 번역되는데, 기존의 社會主義 내지는 共產主義 政黨을 舊左翼(Old Left)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社會主義的 전통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서방식 社會民主主義와 소련식 共產主義의 그 어느 쪽에도 政治的으로 의존하기를 거부하는 集團을 지칭한다.

이들의 急進運動은 대부분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전개되었는데, 公산주의적 政治體制나, 서구 民主主義나 모두 배격한다. 그 사상적 支柱는 네오마르크스주의, 유로컴뮤니즘, 新帝國主義論, 從屬理論, 解放神學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네오마르크스주의이다.

### 2) 時代的 背景

“스튜덴트파워”(Student Power)라고 불리우는 급진적 과격行動의 示威가 일어난 時代的 배경은

①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報告에 의한 反스탈린運動의 전개.

② 이의 여파로 일어난 동년 6월과 10월의 폴란드와 헝가리의 反蘇自由化運動.

③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中蘇理念紛爭에 의한 共產圈의 分裂.

④ 1960년 “New Left Review”誌의 創刊과 그에 따라 일어난 New Left 운동의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의 확산.

⑤ 뉴레프트운동의 思想的 支柱였던 네오마르크스주의의 보급과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 3) 特徵

① 그 理論體系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뉴레프트운동가들은 그 대표적인 이론가로 마르크제를 들고 있으나, 그들이 숭배하는 영웅 또는 사상은 다양하며, 哲學이나 사상에 있어서도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없다.

② 이론보다는 行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은 결국 파괴적 성향을 띠게 되고, 既存秩序에 대한 무조건적 攻擊을 감행함으로써 무정부주의적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③ 마르크스주의적 용어를 사용하는 傾向이 있으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단순한 실천도 아니다.

④ 노동운동도 아니었다. 그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적의적 態度를 취했으며, 반대로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이 運動을 반대하였다.

⑤ 가난한 後進國에서보다는 풍요한 先進國들의 학생들에 의해 大學 캠퍼스내에서 일어났다.

### 4) 展開樣相

뉴레프트운동은 體系화된 이론이나, 公認된 戰略戰術이나, 組織화된 勢力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헐적, 산발적 소규모의 비판·저항운동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점진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과격한 行動을 취하면서 폭력적 수단을 정당시하는 方向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社會的 사건과 관련되면서 民權運動, 자유언론운동, 反戰反核運動, 學園改革運動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 運動은 時間이 흐름에 따라 과격하고 파괴적이었으며, 대개 1968년 전후가 절정기였는데, 그 代表的인 사건으로는 미국, 독일 등의 각 대학의 소요와 시위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5월事態, 日本의 東京大學事態 등을 들 수가 있다.

그 후 뉴레프트운동은 代案없는 비판과 맹목적 파괴로 國民大衆과 현실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 점차 소멸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이 뉴레프트운동은 1970年代말부터 한국에 전파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 3. 後進國의 急進左傾思想

#### 가. 新帝國主義論

##### 1) 概念과 論理

新帝國主義(New Imperialism)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술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나, 과거의 帝國主義의 새로운 형태를 의미한다. 新帝國主義와 新植民主義(New Colonialism)는 표리의 관계에 있는데, 支配하는 입장과 支配당하는 입장에 따라 新帝國主義 또는 新植民主義라 부른다.

1961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3차 쏘아프리카 인민회의의(All-African People's Conference)에서 채택된 決議文은 “신식민주의란 신생제국이 政治的 독립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살아 있는 植民體制를 말한다. 이들 新生國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그리고 기술적 힘에 의한 간접적이고 교묘한 支配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論理는 식민지통치국이 식민지에게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부여하였으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생국을 지배함으로써 사실상 植民統

이 運動은 時間이 흐름에 따라 과격하고 파괴적이었으며, 대개 1968년 전후가 절정기였는데, 그 代表的인 사건으로는 미국, 독일 등의 각 대학의 소요와 시위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5월事態, 日本의 東京大學事態 등을 들 수가 있다.

그 후 뉴레프트운동은 代案없는 비판과 맹목적 파괴로 國民大衆과 현실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 점차 소멸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이 뉴레프트운동은 1970年代말부터 한국에 전파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 3. 後進國의 急進左傾思想

#### 가. 新帝國主義論

##### 1) 概念과 論理

新帝國主義(New Imperialism)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술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나, 과거의 帝國主義의 새로운 형태를 의미한다. 新帝國主義와 新植民主義(New Colonialism)는 표리의 관계에 있는데, 支配하는 입장과 支配당하는 입장에 따라 新帝國主義 또는 新植民主義라 부른다.

1961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3차 쏘아프리카 인민회의의(All-African People's Conference)에서 채택된 決議文은 “신식민주의란 신생제국이 政治的 독립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살아 있는 植民體制를 말한다. 이들 新生國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그리고 기술적 힘에 의한 간접적이고 교묘한 支配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論理는 식민지통치국이 식민지에게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부여하였으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생국을 지배함으로써 사실상 植民統



치를 계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제국주의는 과거와는 달리 직접지배(정치적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上着 買辦勢力을 내세워 經濟的 壓迫을 기반으로 간접지배(경제적 지배)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間接支配의 방법에는 ① 괴뢰정부의 수립, ② 經濟的 從屬關係의 유지, ③ 軍事基地化, ④ 經濟的 壓迫의 형성 등이 있다는 것이다.

신제국주의란 帝國主義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때, 이 제국주의는 레닌의 帝國主義論을 전제로 한다. 레닌은 그의 著書 “資本主義의 最高 단계로서의 帝國主義”(Imperialism :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에서 “제국주의란 資本主義의 獨점적 단계 또는 最高의 단계”라고 정의하였다. 즉 이 단계에 이르면 세계열강은 原料市場, 資本輸出 및 기타 影響권을 확보하기 위한 植民地 爭奪전에 나서게 되며, 이렇게 되면 결국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어 제국주의는 사멸해 간다는 것이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당시 (19세기말~20세기초)의 유럽열강의 角逐戰을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이에 의해 소비에트 共產革命의 당위성과 必然性을 유도하려는 데 그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理論的으로 많은 결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歐美列強을 비판하는 共產主義者들의 경전의 하나이었다.

그런데 제2차 대전후에 政治的 獨立을 한 많은 신생국들이 그들의 經濟的 當면과제를 레닌(Vladmir I. Lenin)의 제국주의론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理論的으로나, 現實的으로나 많은 오류가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政治的 權威를 빌어 등장한 것이 新帝國主義論이다.

## 2) 發生過程

신제국주의론이 대두하게 된 것은 제2차 대전후의 일이다. 따라서 신

제국주의론은 亞阿地域의 新생독립국이 기대한 급속한 經濟發展의 미진과 소련의 戰後 國際戰略上的 필요 등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게 되었다.

먼저 新生獨立國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新生國들은 政治的 獨立은 획득했으나, 植民統治의 유산을 하루 아침에 불식할 수 없었고, 또 經濟發展도 기대한만큼 그렇게 급속히 이룩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新生國의 새 정치지도자들은 새로이 형성된 政治權力과 經濟的 低發展의 狀況에서 야기되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제국주의론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그 代表的 人物이 1950년대~1960년대초의 非同盟의 旗手들이었던 가나의 앙쿠루마,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이집트의 나세르 등이었다.

다음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스탈린시대는 亞阿지역이 소련의 세계 전략상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때까지만 해도 이들 新生國들이 舊植民地 諸國과 政治的·經濟的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흐루시초프시대인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동에서 개최된 亞阿地域諸國會議에서 非同盟原則이 선언된 것을 계기로 소련은 “敵의 敵은 親舊“라는 論理에 입각하여 西方陣營과 第3世界와의 關係를 신제국주의라고 비난·선전하기 시작하였다.

### 3) 內 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제국주의론 또는 신식민주의론은 레닌의 帝國主義論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時代的·狀況的 必要에 의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體系化된 것은 아니었다.

우선 소련의 주장을 보면, 新植民地政策의 目的은 ① 신생국 人民의 民族解放과정을 방해하고, ② 그들이 소련의 경제발전모델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政策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① 西方陣營이 政府次元이나 民間水準에서 신생국에 제공하는 모든 援助計劃, ② 西方 各國이 해외에 설치하고 있는 모든

軍事基地, ③ 과거 植民地域과 植民母國간의 각종 協力體制, ④ 新生獨立國내의 각종 分離主義運動 등이 있다는 것이다.

제3세계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1) 新植民主義에 屬되어 있는 지역의 土着政府가 經濟的 國際主義의 침투를 돕는 역할을 한다. (2) 신식민주의정책이 新生獨立國家의 진정한 獨立을 방해함으로써 이들 國家들을 세계자본주의 國家體制내에 항구적으로 경제적 壓迫을 시켜 놓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논지중에서 전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買辦資本論이고, 후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從屬理論이다. 이것을 모두 넓은 의미에서 新帝國主義論이라 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볼 때, 매판자본론과 종속이론이 예속지역의 經濟와 先進國經濟와의 構造的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신제국주의론은 先進國이 예속지역을 왜 필요로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신제국주의론의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理論家는 美國의 바란(Paul Baran)과 맥더프(Harry Magdoff)이다. 바란과 맥더프의 신제국주의론은 과거의 帝國主義論과 마찬가지로 先進資本主義의 발전과정에서 초점을 두고 전개된 理論이다.

#### 4) 批 判

신제국주의론 또는 신식민주의론이 그 이론적 矛盾과 객관성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의 후진국에서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先進國과 後進國간의 經濟的 격차, 低發展의 原因, 빈곤의 악순환 등의 책임을 선진국에 돌릴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준 데 있다. 또한 소련이 이러한 상황을 戰略的으로 교묘하게 잘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新帝國主義論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레닌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론을 資本主義의 發展過程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過程으로 보고 있으나, 그것은 敎條的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레닌의 帝國主義論이 그 타당성을

있었음은 이미 經驗的으로 입증되었다.

② 新帝國主義論은 소련의 군사적 팽창과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서방선진국 특히 미국의 對外政策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객관성을 잃은 편파적 비판이다. 제국주의의 政治的·軍事的 확장이란 측면에서 보면, 제국주의론은 소련에게 더 잘 適用된다. 1968년 소련의 체코 침공事態와 관련하여 中共은 소련을 “社會主義的 帝國主義”라고 비난하였다.

③ 선진국과 후진국의 經濟的 關係가 前者에게는 有利하고 後者에게는 不利하게 작용하여 후진국의 低發展의 原因이 되고 있다는 가설은 經驗的으로 잘못되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低發展의 原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基本的으로 그 나라 국민의 教育水準, 經濟開發의 意志 등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예컨대,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新興工業國(NICS)으로서 세계경제에서 主導的 立場을 확보하였다.

④ 경제적 의존관계는 內的으로 政治的 權威主義를 가져오고, 對外的으로는 先進國에 대한 政治的·外交的 종속관계를 가져온다고 하지 마는, 이것 역시 잘못된 가설이다. UN 과 같은 國際機構에서는 先進國이든, 後進國이든 또는 大國이든, 小國이든 똑 같은 投票權을 행사한다.

## 나. 從屬理論

### 1) 概念

從屬理論(the dependency theory)이란 일반적으로 제3세계 특히 中南美經濟가 15세기 중상주의시대 이래 歐美先進國의 經濟에 종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1960년대를 전후하여 주로 프랭크(Andre G. Frank), 산토스(T. dos Santos) 등의 중남미 學者들에 의하여 제창된 後進國發展論이라 할 수 있다. 프랭크에 의하면, 종속이론이 대두된 것은 中南美經濟의 위기와 모순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한다.

이 종속이론은 제3세계의 低發展은 선진국의 發展모델을 확산시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소위 擴散理論을 배격하고, 1960년대부터 脫從屬을 위한 자기나름대로의 발전모델을 모색한 데서 시작되었다. 즉 종래의 선진국의 近代化理論의 후진국에의 適用限界性을 지적하고, 후진국의 새로운 發展代案으로 제시된 것이 종속이론이다. 이런 점에서 종속이론은 이른바 후진국의 低發展理論이라 할 수 있다.

종속이론의 前提가 되는 “從屬”의 개념은 아직 從屬理論家들 사이에서도 그 定義가 恣意되어 있지 않은 모호한 개념이다. 英文표기에 있어서도 “dependency”로 할 것이냐, “dependence”로 할 것이냐의 견해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dependence는 경제적 의미를, 그리고 dependency는 경제적 意味와 함께 社會的, 政治的 意味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前者가 주로 經濟的 對外依存關係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後者は 그에 수반되어 야기되는 對內的 諸般 病理現象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종속이론이란 英語의 dependency theory를 번역한 것으로서 現代 帝國主義가 저발전국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산토스에 의하면, 從屬이란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의 經濟가 한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經濟에 따라 다니며 主從關係를 이루므로, 從屬狀態는 언제나 主導經濟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다양하다고 했다. 또한 그의 主著인 “從屬의 構造”에서 “支配國家는 팽창하고 스스로의 發展에 자극을 가할 수 있는 반면, 종속국가는 이러한 팽창의 반사로서밖에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종속의 개념은 支配國과 從屬國, 搾取國과 被搾取國, 또는 中心國과 周邊國의 二分法으로 나누어 兩者는 상호 대등한 依存關係가 아니라,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政治的인 면에서 지배-종속의 관계로 보는 것이 종속론자들인 프랭크, 산토스, 아민(Samil Amin) 등의 일치된 견해이다.

## 2) 成立背景

中南美諸國은 오랜 기간 經濟發展을 추구해 왔으나, 별다른 發展을 이룩하지 못한 채 심각한 경제적 불안을 겪어 왔다.

중남미제국은 19세기 초반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의 植民地에서 독립을 했으나, 農産物이나 鑛物資源 등을 미국에 수출하며, 消費財 등의 工産品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여전히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중남미국가들은 植民地的 유산, 경제적 落後性, 지나치게 많은 勞動人口, 국민적 紐帶意識의 결여 등으로 해서 국가발전의 原動力이 결집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工業發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前近代의 생활수준을 면치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中南美 經濟의 낙후성을 연구하던 學者들이 선진국의 현대적 技術과 資本을 후진국으로 확산하면 후진국도 발전할 수 있다는 擴散理論을 부정하고, 그 代案으로서 從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 날 제3세계에 팽배하고 있는 종속이론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주로 중남미의 學者들이 中南美의 低發展에 대한 問題意識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성립되었다.

1949년 프레비쉬(Paul Prebisch)는 유엔 中南美經濟委員會 (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ECLA)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중남미諸國의 경제적 低發展의 원인을 構造的 觀點에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不平等交換關係에 있다고 보고, 그 改善代案으로서 輸入代替産業의 육성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輸入代替産業이 실패로 돌아가자, 1960년대 들어 프랭크와 산토스 등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輸入代替産業政策을 비판하고, 종속이 低發展의 원인이라는 基本命題를 이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립된 從屬理論은 1970년대초에 와서 선켈(Osvald K. Sunkel), 카르도소(F.H. Cardoso), 에반스(Pete P. Evans) 등에 의해 보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이후 실증적 검증 및 수정의 단계를 거쳤는데, 그 결

과 종속이론의 일반적 적용의 限界性이 드러나 70年代부터는 새로운 변형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발전된 從屬理論은 크게 보아 두 개의 상이한 분석양식으로부터 발전되어 왔다. 그 하나는 UNECLA의 構造的 觀點에서 그 견해를 계승·발전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적 觀點에서 UNECLA의 성장모델과는 다른 견해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공통된 論旨는 저발전의 원인을 內的 要因에서 보다도 外的 要因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 3) 主要 內容

종속이론에는 ① 프랭크의 低發展深化모델, ②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의 世界體制모델, ③ 카르도소의 從屬的 發展 모델, ④ 산토스의 新從屬 모델, ⑤ 임마누엘(A.Emmaunel)의 不等價 交換 모델, ⑥ 아민의 周邊部 資本主義 모델 등이 있는데, 그 중심된 基本假說들만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中心-周邊의 理論: 종속이론가들은 세계를 中心과 周邊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양 범주사이의 관계를 不平等關係 또는 支配와 被支配,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로 규정한다. 中心은 先進國을 말하고, 周邊은 後進國을 말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中心國과 周邊國과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로서 支配關係이며, 특히 經濟的 支配·搾取關係로서 이것이 周邊國의 低發展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프레비쉬가 從屬理論의 分析틀로서 이 개념을 제시한 이래 모든 從屬理論家들이 이 개념을 사용해 왔으며, 노르웨이의 社會學者인 갈통(Johan Galtung)도 그의 論文 “帝國主義의 構造論”(The Stuctural Theory of Imperialism)에서 중심과 周邊의 개념에 입각, 그 상호관계를 構造化된 從屬關係 또는 수직적 교역關係로 보고, 이러한 관계를 現代帝國主義라고 하였다.

나) 低發展論 : 종속이론에 의하면, 中心—周邊의 관계에서 주변권에 속하는 나라는 종속이 심화될수록 低發展의 발전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후진국이 民族資本이나 民族技術없이 擴散理論에 입각한 선진국의 모델에 따라 발전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도리어 低發展의 발전만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종속이론가들은 후진국의 低發展이 本源的·本來的인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의 팽창결과 的 產物이라 본다. 즉 후진국의 저발전의 원인이 技術, 資源 또는 資本의 蓄積 등과 그 자신의 能力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先進資本主義 國家들에 의한 수탈에 있다는 것이다.

프랭크는 低發展(Underdeveloped)과 未發展(Undeveloped)을 구분하여, 오늘 날 發展된 국가는 과거 한때 未發展 상태에 머물기는 했으나, 低發展상태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전제하고, 低發展의 원인은 先進諸國의 착취의 결과라고 했다.

종속이론가들은 低發展의 發展의 구체적 징후로서 ① 外資의 大量 導入, ② 外國技術 및 제도의 대량 침투, ③ 權力 엘리트계층의 消費生活패턴의 西歐化, ④ 輸入代替産業의 肥大化, ⑤ 不平等 交易, ⑥ 所得격차의 증대, ⑦ 失業率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

다) 多國籍企業 : 多國籍企業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인데, 그 用語가 갖는 의미는 그 企業의 활동이 多數의 나라에 걸쳐 있는 企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후진국에게 先進技術과 資源을 이전해 줌으로써 그 나라의 工業發展과 輸出促進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속이론가들은 多國籍企業의 이러한 順機能을 외면한 채, 다국적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中央母會社의 이익극대화에 있다고 하면서, 다국적기업의 否定的인 면만을 평가하고 있다. 그들이 보는 부정적인 側面은 다음과 같다.



i) 다국적기업은 후진국의 國內發展을 위해 再投資될 수 있는 經濟的 剩餘를 果實送金, 特許權 使用料 등의 형태로 유출한다는 것이다.

ii) 다국적기업은 資本集約的, 勞動집약적 生産方式을 채택하기 때문에 후진국의 失業을 조장하고, 低賃金政策을 통해 所得構造의 不平等을 조장하며, 또한 소비를 조장하고 市場을 독점한다는 것이다.

iii) 다국적기업은 후진국의 政治人과 결탁하여 權威主義的 政治體制를 형성케 하고, 中心과 周邊간의 從屬的 經濟關係를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후진국의 自律的 經濟發展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라) 脫從屬의 問題 : 종속이론가들은 후진국의 低發展의 原因이 중심과 주변의 從屬關係에 있다는 데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脫從屬의 問題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急進論者들은 마르크스主義的 觀點에서 私有制의 克服을 통한 社會主義的 發展에로의 誘導를 강조하면서, 그 방법으로서는 民族부르주아들과의 투쟁을 통한 社會革命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穩健論者들은 資本主義의 打倒가 아니라, 民族資本主義的 立場에서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제반 모순을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4)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관계

從屬理論이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 急進論者들은 마르크스주의적 社會分析視角과 分析概念을 원용해서 제3세계의 經濟現象을 분석하고 있다는 데 특히 유의해야 한다.

① 종속이론의 中心—周邊의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兩分法에 연유한다.

② 급진론자들의 脫從屬의 代案으로서의 노동자들에 의한 폭력혁명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노동자·농민에 의한 폭력혁명과 그 논리적 맥을 같이 한다.

③ 종속이론의 經濟的 暴露戰術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폭로전술과는 그 목적에 있어서 同一하다.

④ 종속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다 같이 統治엘리트를 支配와 榨取의 하수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⑤ 종속이론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찬가지로 전체론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며, 개별적 特殊性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⑥ 종속이론은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관계를 榨取와 被榨取의 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신제국주의와 일치한다.

#### 5) 批 判

從屬理論은 라틴아메리카의 低發展의 원인을 해명하는 데 있어 그 시야를 單位國家에서 國際的 次元으로 넓혀 주었으며, 주체적 입장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시각을 제공해 주는 등 기여한 점도 있으나, 그 연구대상의 地域的 限界성과 함께 문제점도 있는 것이다.

① 세계경제體制를 中心과 周邊의 관계로 兩分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것은 黑白論理의 사고방식이다.

② 종속이론은 支配—從屬의 事例로서 資本主義國家간의 관계만 거론하고 있고,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③ 종속이론은 國際關係에 있어서 經濟的 측면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外交的·軍事的 關係가 후진국의 安保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고 있다.

④ 종속이론은 國家外的 要因과 作用만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해당 後進國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면에서의 國家內的 要因이 그 나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⑤ 종속이론은 脫從屬의 代案으로서 社會主義的 接近法을 제시함으로써 종속이론 자체가 社會主義革命의 정치강령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 다. 買辦資本論

### 1) 概念

買辦資本論은 종속이론의 核心分野를 이루는 이론으로서 後進國의 政治·經濟 엘리트들을 反民族的인 “買辦的인 것”으로 매도함으로써 社會革命을 誘導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긴 이론이다.

우선 “買辦”의 어원을 살펴 보면, 英語의 Comprador는 스페인어의 Comprar에서 연유하는데, 그 뜻은 “사다” 즉 일반적으로 代理商이라는 뜻이다.

매판자본이란 말이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42년의 南京條約의 後 中國에서이다. 中國에 들어온 外國商社의 都給을 맡아 中國내에서 外國産業의 판매를 대행하던 中國人 中개상은 처음에는 수수료를 받고 대행했으나, 나중에는 獨立的 立場에서 쌍방이 이익을 보는 立場에서 代行業을 하였다. 여기에서 買辦資本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런데 오늘 날 매판자본이라 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전제로 한다.

- ① 매판자본은 民族資本의 代칭概念이다.
- ② 매판자본은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라는 국가간의 從屬關係를 전제로 한다.
- ③ 매판자본은 帝國主義의 앞잡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결국 “매판자본”이란 買辦行爲에 기여하는 資本 또는 買辦行爲에 의해 축적된 資本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外國資本과 自己나라 市場과를 중개하는 土着貿易商人 또는 外國商社의 代理業者가 소유하는 資本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外國資本의 援助를 받거나 또는 外國資本과 결합하여 활동하는 後進國의 金融資本이나 貿易資本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속이론가들은 國內資本家들을 매판자본가들이라고 매도하면서, 外國資本의 이익을 옹호하는 편에 서서 民族의 이익을 외면하는

反民族的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2) 生成背景

우선 買辦資本에 관한 논의는 現代 急進左傾思想에 편승하여 전개되었다. 즉 외국자본의 代理라는 범위를 극대화시켜 외국자본에 從屬 또는 依存하는 모든 社會的 資本을 제국주의적이라고 보고 打倒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社會革命戰術의 일환으로 거론되었다.

19세기식 제국주의적 植民狀態에 있던 제3세계國家들이 第2次 大戰의 종식으로 우선 政治的 獨立은 하였으나, 과거 그들 社會를 支配하고 있던 先進資本主義國家에 대한 經濟的 從屬이라는 기본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 國家들은 經濟發展을 통한 貧困으로부터의 解放과 그것을 위한 經濟秩序와 권력의 재편이라는 二重課題를 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의 사회학자들이 그 解決策을 마르크스주의의 社會分析 틀에서 찾으려 한 데서 매판자본론이 대두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판자본론은 제3세계 특히 중남미의 經濟發展을 위한 工業化政策의 실패를 反省的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資本이나, 西歐의 經濟發展論에 대한 부정적 評價를 바탕으로 등장한 論議이다.

종전후 民族自決主義가 새로운 潮流로 등장한 가운데 후진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對外依存의 감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輸出代替産業의 育成政策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輸出代替産業의 육성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資本과 技術의 도입이 불가피했으며, 더우기 輸出經濟의 특성상 대외 무역에의 依存, 西歐의 퇴폐적 文化의 가속적 浸透 그리고 國民大衆의 貧困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런 經濟現象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종속이론이며, 從屬과 買辦資本論은 표리의 관계에 있는데, 從屬理論家들에 의하면 買辦資本이야말로 政治·經濟의 여러 차원에서 從屬을 後進國內部에 더욱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 3) 主要內容

남미의 代表的 從屬理論家인 산토스에 의하면, 신제국주의적인 世界經濟의 발전과정에서 周邊國家들은 국제적 交易體制에 불리한 조건으로 統制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그 결과 對內的으로 經濟構造의 自主性이 상실되고 또한 經濟의 일부는 완전히 종속된다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구조는 토착기업들이 스스로의 目的에 합당한 企業活動을 하지 않으며, 따라서 周邊國의 內部에는 점차 外國資本의 營利活動에 同調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윤蓄積을 도모하려는 國內資本集團이 쉽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買辦資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中心國 資本의 비호를 받으며, 이들 買辦資本을 보호해 줌으로써 權力을 유지하는 政權의 關료들을 가리켜 매판關료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치적·경제적 종속관계 아래에서는 買辦資本勢力이 쉽게 형성되고, 이들의 작용으로 인해 주변국의 중심國에 대한 從屬關係는 더욱 악화되기 마련이므로 이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周邊國經濟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再生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후진국이 工業化를 통한 經濟成長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工業化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原資材 및 加工品 그리고 施設材 도입을 위한 外貨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外貨를 안정적으로 供給하기 위하여서는 傳統的 輸出部門이 육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 주변국의 原料수출부문이 外國資本에 의해 統制를 받게 되면, 그 초과이윤은 外國으로 유출되고 주변국의 中心國에 대한 從屬은 점차 심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20세기 후반의 놀라운 技術의 발달은 중심國과 주변國간의 종속관계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중심國은 현대의 工業技術을 이용하여 주변國의 天然原料를 工業化된 製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후진국은 外貨획득원의 減少를 감수당하게 되며, 이렇게 해서 주변국은 또다시 外貨를 導入하지 않으면 안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은 중심국이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그 移轉 또는 배분을 조종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技術은 대부분이 특허품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고, 또 낙후된 技術이나 기계만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技術과 資本의 도입과 관련해서 子會社가 설립되는데, 이것이 곧 買辦資本家들이라는 것이다. 이 매관자본가들은 철저하게 外國資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外國資本과 買辦資本이 결합하여 누적된 外貨의 부족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周邊國內의 買辦資本은 國內의 전반적 社會構造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하나는 相對的 過剩人口現象이고, 다른 하나는 과대한 消費性 向現象이라는 것이다.

#### 4) 批 判

買辦資本論은 중남미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이론이다. 따라서 중남미이외의 地域에도 무조건 통용될 수 있는 普遍的 理論은 아니지만, 西歐的 發展理論을 비판하면서 후진국들의 構造的 결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새로운 發展理論을 개발할 필요성을 부각시킨 점에서는 다소 학문적 공헌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現實批判을 위해서는 냉철한 分析이 있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①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찰하지 않고, 자본과 기술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만 고찰하였다.

② 後進國의 모든 문제를 外生的인 것으로만 규정함으로써 경제발전에 대한 自省의 機會와 自立的 노력의 意慾을 상실케 하였다.

③ 또한 外國資本이 갖는 유익한 면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④ 오늘 날의 自由貿易時代에는 한 나라의 資本이 다른 나라 資本과의 協力 또는 合作투자를 통해 상호 經濟的 利益을 도모하고 있는 國際經濟의 이점을 무시하고 있다.

⑤ “民族”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外國資本의 導入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모두 매판자본가, 매판관료, 매판지식인 등으로 매도함으로써 國民분열과 革命的 적개심을 고취시킨다.

⑥ 오늘 날과 같은 技術革命時代에 있어서 국제교류없이 과연 自主的 存立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 라. 解放神學

### 1) 概念

解放神學이란 1960년대를 전후하여 중남미의 일부 과격한 神學者들에 의해 제창된 급진적 自由主義 神學運動이다.

解放神學者들은 神學도 종래의 個人的 救援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전통적 保守神學에서 벗어나서 자유주의적 神學의 입장에서 社會의 救援을 위해 政治的·社會的 현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教會도 政治적·사회적 革命을 위한 改革運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루의 神父로서 중남미神學의 선구자인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에 의하면, 해방신학은 중남미의 압제를 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임무를 위임받은 남미의 체험과 福音에 기초한 神學的 省察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방신학은 현재의 不義한 상황을 타파하고 좀더 자유롭고 人間的인 社會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한 神學的 省察이라고 정의했다. 즉 福音의 政治적 해석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방신학자들은 해방신학을 억압당하고 있는 民衆들을 해방시키는 神學의 理論的 기초라고 주장한다.

해방신학의 핵심은 “解放”이다. 해방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해방에는 모든 차원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즉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解放, 政治的·社會的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종교적 해방(죄로부터의)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해방신학이란 역사속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억압 받는 사람, 갖지 못한 사람 그리고 相續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이 겪고 있는 性的 差別, 인종적 差別, 階級的 差別 내지는 경제적 擄取와 政治的 탄압, 그리고 문화적 帝國主義로부터 解放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임무라고 믿는 神學이다. 따라서 해방신학은 그리스도를 解放者로 政治的 구세주로 본다.

또한 해방신학은 개인의 救援보다도 社會의 구원 즉 社會的 行動을 중시하는 實踐的·行動的 神學이다.

## 2) 形成背景

### 〈神學思潮의 背景〉

神學思潮의 側面에서 볼 때, 해방신학의 등장은 現代神學이 1960년을 분수령으로 實存主義 神學 즉 危機神學에서 政治神學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 데서 비롯된다.

危機神學은 신앙이 핵심이기 때문에 自己存在에 대한 危機意識과 救援에 대한 믿음을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이에 반해, 정치신학은 個人보다도 社會構造의 改革을 통한 사회적 救援을 강조한다.

신학이 宗教的 信仰이라는 개인의 믿음으로부터 社會的 構造의 改革에로 관심을 돌렸다는 것은 그만큼 政治化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1960년대부터는 실제로 “革命神學”이라 불리울만큼 사회적 혁명이나 急進的 改革을 주장하는 神學者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政治神學運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1960년대부터 등장한 네오마르크스주의이다.

따라서 해방신학은 革命神學의 영향과 네오마르크스주의의 思想的 배경하에서 출발하였다.

### 〈社會的 背景〉

해방신학이 西歐的 思想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西歐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중남미神學이라 할 정도로 중남미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중남미의 특수한 社會的 배경때문이다. 그 背景은 다음과 같다.

(1) 중남미社會의 가난과 貧富의 격차이다.

(2) 지난 400년간 國民의 90%이상이 가톨릭 信者라는 사실이다.

人II의 절대다수가 基督教人이면서 절대다수가 불행한 현실을 教會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해방신학의 出發論理이다.

### 〈教會的 背景〉

해방신학의 출현에 직접적 자극제가 된 것은 1962년~1965년까지의 제2차 바티칸 公會議의 “현대세계에서의 司牧憲章”이란 문서이다. 이 會議에서 처음으로 社會正義問題가 거론되었고, 社會正義를 위해서는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간에도 協力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음은 1968년 콜롬비아의 메델린에서 개최된 제2차 중남미주교협의 총회이다. 이 會議에서는 중남미를 영원한 低發展狀態로 만드는 모든 행태의 植民主義를 비판하였다. (低發展의 原因이 從屬때문이라고 비판).

1971년 구티에레즈의 “解放의 神學”의 發刊으로 해방신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해방신학이 보다 過激化하게 된 것은 1972년 4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第1次 중남미기독교社會主義協會에서 비롯된다. (당시 칠레의 大統領은 社會主義者인 아옌데이었다) 그 構成員들은 스스로를 “社會主義를 위한 기독교인”이라 하였다.

1972년 12월~1973년 1월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WCC 총회가 중남미의 解放神學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그것은 점차 세계적 관심의 대상으로 확산되었다.

1975년 8월 미국 미시간州의 디트로이트에서 “1975년도 남북아메리카의 神學”을 주제로 개최된 會議를 계기로 中南美解放神學은 전세계의 神學으로 확산되어 갔다.

## 3) 內 容

解放神學은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그 공통적 特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해방신학의 출발점이 성경의 계시나 形而上學的 原則이 아니고 具體的·歷史的 狀況이라는 점이다.

② 해방신학은 거의 예외없이 마르크스주의를 分析의 틀로 受容한다는 점이다.

③ 經濟的 從屬에서의 解放만이 아니라 文化的 從屬의 克服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각 神學者들의 個別的 主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콜럼비아 國立大學教授이며 校牧司祭였던 토레스(Camilio Torres)는 "革命的·基督敎的 鬭爭이요, 司祭의 鬭爭"이라고 주장했다. "意識化"란 用語를 처음 사용했다.

해방신학의 代表이며 페루의 神父인 쿠티에레즈는 그의 著書 "解放神學：歷史, 政治, 救援"(1971)에서 神學의 사명은 "새로운 社會를 이룩하기 위한 階級鬭爭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正統敎理보다 正統實踐(ortho praxis)에 있음을 강조했다.

우루과이出身의 브라질 神父인 아쓰만(Hugo Assman)은 신학은 行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政治的 行動 그 자체이며, 眞理는 觀念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行動의 領域, 歷史의 차원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의 神父인 게라(Lucio Gera)는 ①복음전파를 통해 세상에 信仰을 심는 일과 ② 世俗世界의 領域안에서 人間性을 증진하는 일이 敎會의 사명이라고 했다.

그 외에 우루과이의 Juan Luan Segundo, 브라질의 Rubom Alves, 아르헨티나의 Jose Miguez Bonino, 브라질의 Leonard Boff, 베네주엘라의 Antonio Perey Esclarim 등의 다수가 있다.

## 4) 批判

신학이 神의 계시인 성경과 구체적 상황에서 이루지므로 기독교적 원칙의 전달과 구체적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해방신학이 대두된 지 20여년이 지난 오늘 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① 남미신학이 남미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방신학이 神學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데 그 근본적 誤謬가 있다.

② 狀況分析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마르크스主義의 方法論과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③ 해방신학은 기독교의 救援의 의미를 政治的·經濟的 解放이란 개념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④ 해방신학은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의 解放을 주요 관심사로 보고, 그 해방을 위한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폭력혁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폭력혁명은 또 다른 폭력혁명을 유발한다.

⑤ 해방신학자들은 해방신학이 전형적인 제3세계의 神學이라고 하지 마는, 해방신학 자체가 文化的 帝國主義의 產物이다. 진정한 文化的 獨立은 西歐文化에 대한 단순한 反作用이 아니라 主體的 선택과 受容에 있는 것이다.

## 4. 韓國의 急進左傾思想

## 가. 急進左傾思想의 流入

韓國에서 左翼 또는 左傾思想이 문제시되거나 또 實際活動을 한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 民族은 解放과 더불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南과 北에는 이념

## 4) 批 判

신학이 神의 계시인 성경과 구체적 상황에서 이루지므로 기독교적 원칙의 전달과 구체적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해방신학이 대두된 지 20여년이 지난 오늘 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① 남미신학이 남미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방신학이 神學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데 그 근본적 誤謬가 있다.

② 狀況分析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마르크스主義의 方法論과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③ 해방신학은 기독교의 救援의 의미를 政治的·經濟的 解放이란 개념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④ 해방신학은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의 解放을 주요 관심사로 보고, 그 해방을 위한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폭력혁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폭력혁명은 또 다른 폭력혁명을 유발한다.

⑤ 해방신학자들은 해방신학이 전형적인 제3세계의 神學이라고 하지 마는, 해방신학 자체가 文化的 帝國主義의 產物이다. 진정한 文化的 獨立은 西歐文化에 대한 단순한 反作用이 아니라 主體的 선택과 受容에 있는 것이다.

## 4. 韓國의 急進左傾思想

## 가. 急進左傾思想의 流入

韓國에서 左翼 또는 左傾思想이 문제시되거나 또 實際活動을 한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 民族은 解放과 더불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南과 北에는 이념

과 體制가 상이한 政治的 질서가 형성되었으며, 그로 해서 우리 社會는 해방이후 계속해서 이념적·사상적 갈등과 대립을 겪어 왔다.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問題중에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理想的·思想的 대립의 克服이며,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定着과 確立이다.

解放직후에는 물론이고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한 동안 左翼勢力들이 암약하였다. 그 代表的인 것이 남노당계열의 左翼세력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勢力들은 6·25와 우리 政府의 強力한 反共政策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러다가 4·19이후 일시적인 政治混亂期를 틈타 소규모의 좌경세력들이 등장하였으나, 5·16혁명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좌경성향적 세력들은 공공연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 좌경적 성향의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西歐의 先進國과 中南美의 後進國에서 각기 형태는 다르지만, 그 本質에 있어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急進左傾思想 즉 네오마르크스主義, 뉴레프트운동, 신제국주의론, 매파자본론, 증속이론, 解放神學 등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이들 左傾思想들이 한국에 流入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며, 1980년대 들어 社會의 自律化와 民主化의 요구 추세속에서 보다 體系化되고 擴散되어 民衆革命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으며, 그 행동양상이 과격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 날 우리 社會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념적·사상적 갈등과 對立, 그리고 이를 克服하기 위한 힘의 배양 즉 경제발전과 공업화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등으로 해서 어쩌면 새로운 急進左傾思想들의 침투가 용이한 과도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 날 우리 사회에 急進左傾思想이 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문제 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 걸친

發展의 樣相과 그에 따른 問題들을 肯定的인 면에서 보려는 것이 아니라 否定的인 면에서 보려는 일부 知識人 및 學生들의 急進的 變革意識과 過激한 鬭爭方法에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정치·사회적 배경에 있다고 하겠다.

(1)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공업화와 근대화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社會問題와 그에 대한 體制 회의적 또는 부정적 지식인들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우리 社會는 급속한 사회구조적 變動을 겪고 있다. 1962년부터 1차 經濟開發 5개년 計劃이 착수되어 傳統的 農業社會가 工業社會로 변화하였으며,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職業構造, 階層構造, 家族構造, 中産層의 形成, 價値觀, 市民意識 등에 많은 變化를 가져 왔다.

西歐의 先進國들이 100년~200년 사이에 경험했던 社會構造的 變動을 우리는 불과 20여년 사이에 경험했다. 그러다 보니 工業化過程에서 많은 問題들이 제기된 것 같다. 그러한 문제들을 몇 가지 예를 들면, 分配의 不平等問題, 都市와 農村의 격차, 絶對的 貧困은 해소되었으나 相對的 貧困과 社會的 正義問題, 다양한 利益과 社會的 要求의 분출 등이라 하겠다.

한편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메스컴의 大量 보급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의식, 정치적 관심, 정치적 요구와 참여요구도 크게 증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經濟的·社會的 發展에 따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획기적인 구조적 변혁이 있어야 한다는 급진 과격사상들이 나타났다.

(2) 權威主義的 政治統制에 대한 저항과 民主化 要求의 운동이다.

우리의 현정사는 정부수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政府와 여당의 권위주의적 政治에 대한 野黨의 反獨裁 民主化鬭爭으로 일관되어 왔다.

4·19革命이후 反獨裁 民主主義理念은 學生運動의 전유물이 되었고,

이것은 유신체제하에서 反政府·反體制革命運動으로 전환되었다.

사실 남북대결이라는 우리의 현실에서 政治的 能率의 향상을 위해서 부분적인 政治的 制限도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社會전체의 革命的 改革과 民主化를 요구하는 進歩勢力들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였으며, 그것은 결국 이들로 하여금 反政府에서 反體制的 過激化的 傾向을 띠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③ 思想統制의 급격한 완화와 大學自律化가 충분한 사전대비없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副作用이 컸다는 사실이다.

政府의 思想的 統制의 완화는 처음 이념서적의 부분적 출판허용으로 나타났다. 이념서적의 출판은 좌경이론의 이론적 무장을 필요로 하는 일부 지식인과 學生들의 욕구와 맞아 떨어짐으로써 더욱 가속화되었다. 여기에 출판의 상업주의가 가세됨으로써 이념서적은 무비판적으로 出版되었고, 심지어는 출판이 금지된 서적도 마구 출판됨으로써 좌경이론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당국이 그 副作用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재차 단속을 했을 때는 지하화하는 현상을 보여 주기도 했다.

또한 좌경사상의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조치없는 大學自律化로 大學街에 좌경사상이 음성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였다.

④ 6·25의 民族的 悲劇을 體驗하지 못한 世代들이 전체인구의 大多數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共產主義의 취약성과 自由民主主義의 우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世代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人口중에서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75%~80%에 이른다. 6·25이전세대는 해방직후의 좌우의 정치적 대립과 6·25의 悲劇을 직접 경험하였으므로 共產主義의 잔학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에, 6·25 이후세대는 6·25를 직접 經驗하지 않았기 때문에 共產主義의 本質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이 확고하지 못한 면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民族主義를 감상적으로

이것은 유신체제하에서 反政府·反體制革命運動으로 전환되었다.

사실 남북대결이라는 우리의 현실에서 政治的 能率의 향상을 위해서 부분적인 政治的 制限도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社會전체의 革命的 改革과 民主化를 요구하는 進歩勢力들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였으며, 그것은 결국 이들로 하여금 反政府에서 反體制的 過激化의 성향을 띠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③ 思想統制의 급격한 완화와 大學自律化가 충분한 사전대비없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副作用이 컸다는 사실이다.

政府의 思想的 統制의 완화는 처음 이념서적의 부분적 출판허용으로 나타났다. 이념서적의 출판은 좌경이론의 이론적 무장을 필요로 하는 일부 지식인과 學生들의 욕구와 맞아 떨어짐으로써 더욱 가속화되었다. 여기에 출판의 상업주의가 가세됨으로써 이념서적은 무비판적으로 出版되었고, 심지어는 출판이 금지된 서적도 마구 출판됨으로써 좌경이론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당국이 그 副作用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재차 단속을 했을 때는 지하화하는 현상을 보여 주기도 했다.

또한 좌경사상의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조치없는 大學自律化로 大學街에 좌경사상이 음성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였다.

④ 6·25의 民族的 悲劇을 體驗하지 못한 世代들이 전체인구의 大多數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共產主義의 취약성과 自由民主主義의 우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世代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人口중에서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75%~80%에 이른다. 6·25이전세대는 해방직후의 좌우의 정치적 대립과 6·25의 悲劇을 직접 경험하였으므로 共產主義의 잔학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에, 6·25 이후세대는 6·25를 직접 經驗하지 않았기 때문에 共產主義의 本質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이 확고하지 못한 면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民族主義를 감상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배타적 支配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傾向마저 보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하에서 韓國에 流入된 急進左傾思想은 1980년대에 이르러 1970년대 초반부터 “민주화”운동속에 잠복해 온 “民衆運動”과 접목되면서 더욱 과격화되었고, 오늘 날 보는 바와 같은 “民衆이데올로기”정립의 바탕이 되었다. 아직도 완전한 체계화는 되지 않았지만, 民衆 이데올로기가 韓國의 急進左傾思想의 實體이다.

최근 일부 反體制人士들과 運動圈 學生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民衆이데올로기는 초기의 現實批判的 성격을 벗어나서 이제는 過激 革命鬭爭의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고, 급기야는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否定함은 물론이고, 北韓共產集團의 선전·선동과 주장에 동조하는 傾向마저 보여 주고 있다.

民衆이데올로기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좌경세력들은 1985년부터는 “民族解放 民衆民主主義革命”을 노골적으로 표방하였고, 反美鬭爭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民衆民主主義”가 좌경세력들의 政治理念으로 제시된 것은 “民衆民主主義 民族革命의 개념을 정립하자”라는 地下油印物이 배포된 1985년부터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나. 民衆이데올로기의 本質

民衆革命論者들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構造는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 또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前者는 歷史의 가짜 主體이고 후자가 歷史의 진짜 주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바로 삼키위하여는 歷史의 가짜 主體인 執權勢力과 그 支援勢力인 “美帝”를 축출하는 것이 그들의 당면목표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民主主義는 국민의 多數를 차지하는 民衆이 통치하는 것이므로 민중이 직접 참여하는 民衆民主主義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民衆民主主義란 “民衆이 歷史의 주체가 되며, 民衆이 主人이 되는 社會”의 政治理念이라고 정의하면서,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인 民衆이 억압적 정치구조와 착취적 경제구조를 투쟁으로 타파하고 새로운 社會를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自由民主主義를 “독재를 구축한 매관관료세력의 外皮”라고 규정하고, 이를 전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면 우선 民衆革命論者들이 말하는 “民衆”은 어떤 概念인가?

民衆이란 원래 “國民大衆”을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부터 민중혁명론자들이 쓰기시작한 “民衆”의 개념은 階級을 의미하는 理念的, 政治的, 革命的 用語로 쓰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사용하 있는 “人民”의 개념과 相通한다. 北韓의 「철학사전」에 의하면 “人民大衆은 歷史의 創造者이며, 社會發展의 基本動力”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민중혁명론자들은 “民衆”을 “植民地, 半植民地, 新植民地國들의 反帝國主義, 反買辦鬮爭과정에서 형성된 階級연합의 실체”라고 정의하고, “民衆은 韓國의 社會發展過程에서 중점된 人間解放,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동시에 해결할 主體”라고 보면서, 韓國社會에 다음의 7개 階級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① 買辦資本家(高級관료 포함)
- ② 新中産階級(教授, 辯護士, 의사, 목사, 고급장교)
- ③ 中小 상공업자(民族資本家)
- ④ 富農(自立可能 農民)
- ⑤ 貧農(小作人, 고용인)
- ⑥ 勞動者(하층 임금勞動者)
- ⑦ 都市貧民(영세상인, 失業者, 離農民)

이 7개 계급중에서 민중은 概念的으로는 ① 을 제외한 모든 계급이며, 實踐的으로는 ① ② ③ ④를 제외한 계급이라는 것이다. 즉 勞動者, 貧農, 都市貧民들만이 그들이 말하는 민중이다.

또한 그들은 민중을 非革命的 민중과 革命的 민중으로 구분하고, 前者는 安定된 生活을 누리고 있어 現象타과를 바라지 않는 階級으로서 中産層 즉 富農, 下層 中小商工業者, 下層 新中産階級, 上層 技術勞動者들이 이에 속하며, 後者로는 下層 노동자, 貧農, 都市貧民들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이 民衆革命的 主體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역사의 주체는 民衆이어야 하며, 민중이 주도하지 않는 歷史는 正統性을 결여한다고 전제하고 현재제는 민중의 의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正統性이 없다는 것이다.

民衆革命論者들이 “人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民衆”이라는 概念을 사용하는 이유는 ① 민중이라는 用語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낯익은 용어로서 호소력이 있다는 점이고, ② “人民”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共產主義者로 낙인찍히어 實定法과의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중을 基層民衆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民衆民主主義는 공산주의자들의 人民民主主義와 같다고 하겠다.

오늘 날 우리 사회의 민중혁명론자들이 추구하는 目標은 民衆民主主義의 실현이다. 그들은 민중민주주의의 政治理念으로 民主爭取, 民衆解放, 民族統一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이 目標로 하는 민중민주주의는 “反帝 反買辦의 民衆이 주인이 되는 社會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反美自主化·反과소民主化運動을 통해 民衆政治에로의 政治變革, 民衆經濟에로의 經濟體制의 變革, 民衆文化에로의 文化變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民衆革命論者들은 우리 社會를 평가함에 있어서 政治的으로는 “美帝”의 新植民主主義體制이고, 經濟的으로는 買辦獨占 資本主義體制이며, 社會的으로는 基層民衆이 무시되는 不平等體制이며, 文化的으로는 從屬·支配文化 및 消費享樂文化體制라는 것이다. 이들의 現實狀況 認識은 ① 우리 사회의 肯定的인 면보다도 否定的인 면을 부각시키고, ② 일시적·단편적 現象을 永久的이고 本質的인 現象으로 보며, ③ 支配

와 被支配라는 계급적인 兩分論理를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들은 민중의 敵은 “한반도를 世界資本의 질서속에 편입하여 新植民地 支配를 관철하고 있는 美帝國主義와 이의 앞잡이이며, 美·日獨占資本에 예속된 國內예속資本家の 파쇼政權”이라고 규정하고, 민중이 主體가 되어 暴力革命을 통해 기존체제를 전복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현단계의 “民族·民主革命”의 과제는 “美帝國主義를 축출하고 예속군부정권을 타도하며 예속독점자본을 해체시켜, 진정으로 民族的이고 民主的인 民衆聯合政權을 수립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暴力革命의 전개에 있어서 運動圈 자체의 力量만으로는 體制革命을 감당하기 어려운만큼 基層民衆을 組織化·意識化하여 革命隊列에 끌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학생운동의 역할은 勞動運動이 그 위치를 찾을 때까지 반제·반파쇼투쟁의 선봉에서 勞學연대를 구축하여 반제·반파쇼투쟁전선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다는 것이다.

民衆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急進左傾勢力들이 주장하는 鬭爭의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民主化鬭爭이다. 급진세력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民主化만이 진정한 民主化라고 하면서 그들이 리드하는 民主化鬭爭만을 주장한다.

② 階級鬭爭이다. 勞學연대의 전술하에 현자본주의 체제의 타도를 위한 계급투쟁을 주장한다.

③ 反美鬭爭이다. 현體制와 政府를 “美帝”의 植民體制·예속정권으로 보고, 이를 타도한 다음 民衆革命政權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美帝”를 이 땅에서 축출하기 위한 反美鬭爭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反軍鬭爭이다. 急進左傾論者들은 韓國軍을 “美帝國主義의 傭兵”으로 매도한다. 그들에 의하면, 韓國軍이 美國의 對共前哨基地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급한 民衆이데올로기는 ①社會構造를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으로 보고 있는 점, ② 民衆을 共產主義者들의 用語인 人民과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점, ③ 현재의 우리 社會를 “美帝國主義의 植民體制”로 보고, “美帝”의 축출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우리의 經濟體制를 買辦資本的 豫속경제로 보고 있는 점, ⑤ 체제변혁의 수단으로 暴力革命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면에서 共產主義者들의 人民民主主義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 다. 民衆革命論者들의 統一安保觀

민중혁명론자들은 南北分斷을 美蘇에 의한 타율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民族 스스로의 분열에 의한 分斷이라는 데 역점을 두려 한다. 그들은 남북분단이 남쪽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北韓의 실질적인 統治組織인 北韓勞動黨의 前身인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1945. 10. 10)과 또 사실상의 政權機關이었던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1946. 2. 8)가 大韓民國 政府의 수립(1948. 8. 15)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組織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간과하고 있다.

남북분단이 國土의 분단, 政治的 分斷, 民族의 分裂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國土의 分斷은 美蘇에 의한 38線의 軍事分界線 설정으로 이루어졌고, 政治的 分斷은 北韓共產主義者들에 의한 北韓勞動黨의 組織, 人民委員會의 설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民族의 分裂은 共產主義者들에 의한 6·25기습南侵과 그로 인한 3년간의 民族相爭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엄연한 歷史的 事實이다.

그리고 민중혁명론자들은 이제까지의 歷代政權은 統一問題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으며, 民衆에 의한 統一論議를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民族統一主導勢力은 韓國의 支配勢力이 아니라 民衆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革命的 民衆이 주도하는 統一運動 또는 民族解放鬭爭을 통해 南北統一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統一의 장애요소를 外勢로 보고, 일체의 외세 특히 美國과 日本의 축출을 주장하고 있다. 즉 그들은 南北韓의 統一을 反外勢 民族解放鬪爭과 연결시킬 경우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나라 즉 美國을 몰아내고, 美日등의 從屬關係로부터 탈피하여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운동에서 統一運動의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세를 몰아내고 南韓에서 民衆民主主義 民族革命政權을 세운 다음에 북한과 統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民衆民主主義가 共產主義者들의 人民民主主義와 相通한다고 할 때,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南北分斷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大小規模의 무력도발을 당해 왔으며, 또 지금도 언제 6·25와 같은 戰爭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침예화된 南北韓의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혁명론자들은 歷代政權이 북한의 南侵可能性을 내세워 政權安保만을 다져 왔다고 주장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一次的 目標은 國家安保이다. 國家存立과 安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國民의 安寧과 社會的 질서가 보장될 수 없다. 더우기 北韓共產集團과 155마일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南北을 합쳐 150만명의 軍隊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國家安保를 제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민중혁명론자들은 우리의 國家安保 論理를 민중탄압과 政權 유지의 수단으로 보며, 民族의 生存危機가 北韓共產集團의 위협에 있는 것이 아니라 美日의 經濟的 進出과 買辦勢力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그들은 北韓共產集團으로부터 大韓民國과 自由民主主義를 保衛한다는 시각이 아니라 外勢로부터 民族을 保衛한다는 시각에서 安保概念을 찾고 있다.

## 라. 民衆이데올로기의 問題點

우리 社會에 번지고 있는 民衆이데올로기는 극소수이긴 하나, 自由民主主義體制를 부정하고 과격급진주의체제를 造型하려는 데 우선 그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우리 社會의 民衆이데올로기는 네오마르크스主義, 從屬理論, 新帝國主義論 등의 신좌경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歷史와 현실을 분석하여 그 理論을 정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認識論的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레닌주의적 暴力革命方式에 의해 既存體制를 전복하고 民衆聯合政權을 수립하려 하기 때문에 方法論的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그 구체적 오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歷史의 구성원은 일반 국민대중이지마는, 歷史를 이끌고 가는 主導勢力은 언제나 소수의 政治的 엘리트들이었다는 歷史的 事實을 망각하고 있다.

② 現實인식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일면으로만 보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③ 모든 이론과 思想은 그 時代的 背景이 있기 마련인데, 西歐의 先進産業社會와 中南美의 後進國에서 대두된 현대 급진좌경이론을 우리 社會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억지이다.

④ 韓國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高度의 經濟成長을 유지해 왔을 뿐만아니라 세계 12위의 貿易國으로 부상하였으며, 新興工業國에서 이제 先進工業國으로 도약하려는 단계에 있는데도 政治的, 經濟的 또는 文化的 被植民地國 또는 從屬國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⑤ “民主主義”운운하면서 그 실현방법으로 暴力革命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이다.

⑥ 일시적·단편적 현상도 영구적·본질적 현상으로 보게 만들므로써 사회에 부정적 시각을 만연시키고 있다.

⑦ 民族正統性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 民族은 적어도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에 대처하여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지켜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⑧ 마르크스의 예언이 이 지구상에 어느 곳에서도 실현된 적이 없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수립된 공산주의 國家들마저 共產主義의 오류를 인정하고 자본주의의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體制改革과 對外開放을 하고 있으며, 또한 新左傾思想마저 쇠퇴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이론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과격적인 행동을 표출한다는 것은 時代착오적 사고방식이다.

#### 〈參 考 文 獻〉

1. 國民倫理學會, 「現代急進思想批判」, 螢雪出版社, 1984.
2. 全得柱, 「이데올로기論」, 博英社, 1982.
3. 國民倫理學會, 「現代社會의 諸潮流」, 螢雪出版社, 1984.
4. 大學이데올로기批判敎育 敎授協議會, 「現代思潮와 韓國社會」, 螢雪出版社, 1986.
5. 全得柱外, 「過激急進主義와 自由民主主義」, 平民社, 1985.
6. 「우리시대의 상황인식」, 兵學社, 1987.
7. 韓鎔源, 「共產主義와 急進主義」, 博英社, 1986.
8. „, 「民衆民主主義의 正體」, 博英社, 1987.
9. 朴容憲外, 「民族과 自由의 理念」, 고려원, 1987.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우리 현실과 좌경 과격사상」, 고려원, 1986.
11. 宋大晟, 「左傾이데올로기」, 明成出版社, 1987.
12. 自由評論社, 「共產主義와 現代左傾思想」.
13. „, 「韓國의 左傾思想과 民衆이데올로기」, 1987.
14. 章洙棟, 「民衆民主主義革命論의 正體」, 統一研修院, 1987.



# Ⅲ. 共產圈 實相

金 淳 培(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	100
2. 共產革命的 類型과 共產體制的 一般的 特性 .....	101
가. 共產化過程과 類型 .....	101
나. 共產體制的 構造와 一般的 特性 .....	104
3. 蘇聯의 實態와 變化樣相 .....	111
가. 改革의 背景과 過程 .....	111
나. 政治社會 改革 .....	113
다. 經濟管理의 革新 .....	117
4. 中共의 實態와 變化樣相 .....	121
가. 改革過程과 推進實相 .....	121
나. 最近의 改革政策路線 .....	126
5. 東歐·아시아 共產國의 實態와 變化樣相 .....	129
가. 東歐改革의 背景과 過程 .....	129
나. 東歐改革의 諸 斷面과 動向 .....	133
다. 東南亞 共產國家 實相 .....	136
6. 結 言 .....	138

## 1. 序 言

우리가 共產國家를 바로 理解해야 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共產主義를 반대하면서도 국제화시대의 동반자로 공산국가와 共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소와 같은 공산대국은 지리적으로 접경해 있는 背腹關係의 이웃나라들로서, 남북분단 이후 북한의 막강한 배후세력이 되어 우리의 安保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해 왔다. 한반도문제의 유관국가인 중·소의 상황인식과 정책변화는 바로 북한에 영향을 주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산권의 동향은 北韓의 動向을 파악, 예측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더욱 우리 사회 一角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산주의에의 막연한 동경과 이념적 좌경화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산국가의 모순된 현실을 바로 알게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공산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지 70년이 지났고, 여타의 공산국가들도 공산체제를 시험해 본지 40여년이 되었다. 그 결과는 공산국가 스스로 역사발전의 중대한 시행착오를 인정치 않을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였다.

그들이 멸망하리라 예언 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체제는 자체의 體制調整능력을 발휘하면서 번영과 발전을 지속해 왔다. 반면에 경직된 체제의 노쇠화 현상을 나타낸 공산세계는 정치·사회적 무기력, 경제적 비능률로 인한 침체가 심화되었음을 소련의 고르바초프나 중공의 덩소평이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경제력과 개인의 생활면에서 미·소간의 격차, 서구와 동구간의 격차, 아시아지역 공산국가의 상대적 낙후성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본주의의 능률적인 경제관리 방식을 원용하고 있으며, 정치·사회면에서도 민주적인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변화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의 理論과 實際가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본 교재에서는 공산주의 思想의 오류나 戰略戰術의 기만성등 이론적 측면은 제외하고 가시적인 공산체제의 構造的 矛盾과 현실적인 병폐현상들을 지적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노정되는 제반 현상들을 기술코자 한다. 공산국가의 실상과 변화동향을 진단하는 데에는 對外관계면의 고찰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공산국가의 對內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적 모순과 변화양상을 파악토록 하였다.

먼저 공산체제의 일반적 특성과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이어서 소련, 중공, 동구·아시아 공산국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야별 실상과 변화동향을 추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정기간행물 기사와 공산권동향 자료도 최대한 이용하였다.

## 2. 共產革命의 類型과 共產體制의 一般的 特性

### 가. 共產化 過程과 類型

오늘날 우리가 공산국가라고 규정하는 나라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신봉하며 이를 自己 活動의 지침으로 삼는 黨이 政權을 장악한 1당독재의 국가이다.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 共產黨은 모두 공산혁명의 참모부로서 노동계급의 전위당이다. 共產黨은 국가를 지배하고 생산수단을 국·공유화하며 생산, 분배, 소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공산체제에서는 국가사회의 인적·물적자원에 대해 전체주의적 통제가 행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본주의의 능률적인 경제관리 방식을 원용하고 있으며, 정치·사회면에서도 민주적인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변화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의 理論과 實際가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본 교재에서는 공산주의 思想의 오류나 戰略戰術의 기만성등 이론적 측면은 제외하고 가시적인 공산체제의 構造的 矛盾과 현실적인 병폐현상들을 지적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노정되는 제반 현상들을 기술코자 한다. 공산국가의 실상과 변화동향을 진단하는 데에는 對外관계면의 고찰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공산국가의 對內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적 모순과 변화양상을 파악토록 하였다.

먼저 공산체제의 일반적 특성과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이어서 소련, 중공, 동구·아시아 공산국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야별 실상과 변화동향을 추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정기간행물 기사와 공산권동향 자료도 최대한 이용하였다.

## 2. 共產革命의 類型과 共產體制의 一般的 特性

### 가. 共產化 過程과 類型

오늘날 우리가 공산국가라고 규정하는 나라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신봉하며 이를 自己 活動의 지침으로 삼는 黨이 政權을 장악한 1당독재의 국가이다.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 共產黨은 모두 공산혁명의 참모부로서 노동계급의 전위당이다. 共產黨은 국가를 지배하고 생산수단을 국·공유화하며 생산, 분배, 소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공산체제에서는 국가사회의 인적·물적자원에 대해 전체주의적 통제가 행

해짐으로 그 체제는 획일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해 지탱하게 된다.

공산국가들은 근대적 산업화 과정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던 나라로서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거의 소련에 의해 강점되어 사회주의체제가 주어진 것이었다. 공산국가들의 공산화된 배경, 공산당의 정권 탈취과정은 대체로 대내외적 상황 여건에서 거의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sup>1)</sup>

대내적 요인으로는 하나의 국가, 특히 후진국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여 무질서한 상태가 나타나고, 정부가 무능 부패하여 國民의 신뢰를 상실하게 될때 共產革命의 요소가 싹텄다는 것이다.

한편 共產革命의 대외적 요인으로는 다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國際戰爭(1·2차 세계대전, 中·日戰爭 등)의 여파로 기존정권의 정치적 권위가 극도로 하락한 경우

둘째, 共產 強大國과 인접하여 직접침공이나 간접적인 인적, 물적 지원에 의할때

셋째, 세력균형이 共產主義者에게 유리하게 전환될 때 등이다.

共產主義者들의 혁명유형과 政權탈취 방법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共產革命에서 직간접적인 무력의 사용은 공통적인 수단이 되었고, 소련의 조종과 지령하에 친소세력이 政權을 장악한 점을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화 유형을 구분한다면 러시아 혁명을 위시하여 다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sup>2)</sup>

#### ① 러시아의 볼셰비키 革命

러시아의 볼셰비키들이 정권장악에서 사용했던 수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폭력과 무력의 사용, 테러, 선전, 선동, 음모및 위장이었다. 볼셰비키의 지도자였던 레닌에 있어서 革命이란 조직적인 군사력에 의하

1) 梁好民外, 「공산주의론」, 통일연수원, 1983. pp34~35.

2) 위의책, p26.

여 정권을 탈취하는 일종의 군사작전이였다. 볼셰비키는 소수였으나 잘 조직되어 있었고 규율이 엄격한 무장부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공 공 시설을 기습함으로써 혁명은 시작되었고 순식간에 무력으로 「게렌스키」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동시에 볼셰비키들은 다른 급진주의자들과 동맹을 형성하여 大衆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빵·평화·토지」를 구호로 내세워 선동했다. 레닌은 농업의 집단화 보다는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또 노동자에게는 「모든 공장의 노동자 관리」를 구호로 외쳤다. 이러한 구호는 결국 구호로 끝나고 그대신 국민들에게 공포정치를 안겨주었다.

② 유고, 알바니아, 중공, 월맹, 쿠바와 같이 게릴라 활동에 의한 공산당의 집권

유고와 알바니아의 공산주의자들은 자체의 게릴라 군대를 보유하여 제2차 세계대전시 독립쟁취를 위한 게릴라 투쟁에 의하여 정권을 잡았다. 중공과 월맹도 장기간에 걸친 내란을 통해 공산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중공의 모택동은 1927년부터 國民黨 政府에 대항하여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까지 22년간이 소요되었으며 이 기간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공산혁명의 성공은 黨이 지도하는 농민군의 반란이 큰 계기가 되었다. 毛澤東이 구사한 共產化 전략전술과 레닌이 구사한 그것과의 차이를 지적한다면, 毛澤東은 農民을 프롤레타리아 계급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차적인 역량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 특히 貧農을 가장 적극적인 혁명역량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③ 소련군의 진주를 배경으로 하여 완전히 밖으로 부터 강요된 공산화의 과정을 겪은 헝가리, 불가리아, 동독, 체코, 북한의 경우.

1945년~48년 사이, 동구와 북한에서 공산당의 권력장악 형태는 소련군의 점령하에서 하나의 作戰計劃으로 이루어 졌다. 여기에서는 공통적으로 3단계를 거쳤다.<sup>3)</sup>

3) Robert C. Tucker,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의 혁명유형", 「공산주의」, 한국성신문화연구원, 1982, pp.147~148.

제1단계는 연립정권의 형태였다. 이념이나 사회적 배경을 달리하는 여러 정당들이 과도기적으로 공동목표를 향하여 제휴, 연합하여 파쇼주의자의 숙청, 사회개혁, 정치적 자유, 그리고 대외적 우호관계등의 공동목표를 위요하고 영성하게 연합을 형성했다. 이 기간은 소수파인 共產黨이 힘의 보강을 위하여 시간을 벌자는 작전에 치중한 시기이다.

제2단계는 共產黨이 실권을 장악하는 단계로서, 연립정부는 다만 명목상의 것이 되고 비공산주의 정당은 탄압을 받았으나 경찰은 중립을 이유로 하여 공산당의 폭력행사를 묵인하는 상태였다.

제3단계에서는 이미 비공산주의 정당은 강제적으로 共產黨(노동당)에 합당되고 오로지 共產黨 중심의 단일·중앙 집권적 체제가 구축되어 共產黨 一黨독재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共產國家의 기원은 다양한 역사와 과정을 겪었으며 이때문에 나라에 따라 다소 다른 형태의 共產主義 體制가 확립되었다.

#### 나. 共產體制의 構造와 一般의 特性

제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黨理論, 정치적 통제수단, 사회주의 건설방식이 동구와 아시아 공산국가들의 정책노선에 직접적이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산체제는 성격상 공통적이며 획일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經濟管理운영면에서의 구체적 유사점으로 ① 전산업의 國有化, ② 농업의 集團化, ③ 중앙집권적 計劃經濟, ④ 국가의 人的·物的 資源의 총동원, ⑤ 중공업과 군수공업에 대한 集中投資, ⑥ 주민의 노력동원을 위한 政治教育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권에서는 스탈린이 사망하기 전부터 毛澤東思想, 티도主義, 金日成思想 등으로 표현되는 자기나름대로 적용을 표방한 사상체계가 나타났다. 신생 共產國들은 마르크스主義의 러시아화의 산물인 마르크스·레닌主義를 통치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0年代 후반기 이후에는 각국이 특유한 유형의 공산주의를 전

개시했다.

1917년 소련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일한 공산주의체제가 등장한 뒤 1987년 현재 東歐등 일부 공산국가에서 多元的인 공산체제가 형성될 때까지 공산주의는 실로 많이 변화되고 분화되었다. 이 결과 오늘의 공산주의체제는 본래의 마르크스·레닌主義 이론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면까지 노출하고 있다. 같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추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마다 체제의 상이성을 드러낸 이유중 중요한 점으로는 네가지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

- ① 경제적 발전 水準의 차이
- ② 역사적·문화적 傳統의 차이(특히 정치문화의 차이)
- ③ 공산당의 정권장악 방식의 차이(자체 공산주의 혁명 또는 외부로부터 강요된 공산주의 혁명)
- ④ 지리적 환경적 차이 등이다. 북한의 경우는 이상의 보편적요인 이외에 金日成 개인의 성격이 체제의 특수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共產主義의 다원화와 분열과정의 배경에는 개별국가의 利己主義가 깔려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소련과 중공, 동구공산국가의 현실과 그 변화과정을 비교하기에 앞서 공산체제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오늘날의 각 공산국가 변화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산체제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① 정치면에서는 黨이 국가기관과 모든 사회조직 및 軍을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黨의 절대성을 바탕으로한 체제이며 ② 경제적으로는 모든 生産手段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기초위에 중앙집권적 計劃經濟를 실시한다는 두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공산주의에 있어서 黨은 혁명이전에는 혁명수행을 위한 전위대이며, 혁명후에는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共產國家에서 黨은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절대권력을 완전 독점한다.



黨의 組織이 모든 정책집행과 행정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黨 政治局이 모든 명령계통을 조정·통제한다.

共產主義 前衛黨 개념은 본질적으로 대중정당과 구별되어 일반대중의 利害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프롤레타리아의 利害와도 양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소수 정예분자 중심의 조직론이었기 때문에 黨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黨 高位層의 독재를 조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黨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직의 운영원칙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은 소위 「민주적 중앙집권제」를 제시했다. 여기서 중앙집권제는 실질적 조직운영의 원리이며 민주제는 다만 조직원리의 선전적 명분이라 할 수 있다.<sup>4)</sup> 共產黨 조직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民主主義는 없고 權力의 집중만 있을 뿐이다.

共產國家에서 黨의 절대성과 독재성은 黨의 권력구조와 기능면에서 본다면 더욱 명백해진다. 共產黨은 ① 평당원, ② 위계질서가 명확히 확정된 기능별 당조직부서, ③ 黨 지도부 등 세가지의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가지 구성요소는 그 기능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평당원은 각기 주어진 임무에 따라 黨의 결정사항을 무조건 실천해야 한다. 위계질서가 분명한 黨의 조직과 부서들은 당 지도부의 명령을 일반당원들에게 전달하고 감독하는 기능과 아울러 인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피라밋형 당 조직의 정상에는 최고사령부가 있다. 최고사령부는 소수의 핵심분자로 구성된 상설기관인 政治局과 書記局이다. 이 최고사령부의 第1人 혹은 黨 書記長이며, 그의 지휘명령아래 모든 黨 조직과 국가기관, 軍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黨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실질권한이 없는 최고대의기관(소련의 경우 최고 소비에트, 중공의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며, 세부행정집행 및 생산활동은 내각(북한

4) 梁好民外, 前掲書, pp41~42.

의 경우 정무원, 중공의 경우 국무원)을 통하여 시행된다. 공산국가들은 헌법상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 최고대의기관을 두어 형식상으로 법안등의 안건을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토론이나 표결에 있어서 반대가 없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한편 국가행정기관은 방대한 부서가 설치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분야에서 黨의 政策을 집행하고 있다.

당조직, 국가기관으로서 대의기구와 행정기관도 각각 피라밋형의 階層構造를 갖고 上意下達의 명령계통을 통해 작동된다. 공산국가에서는 당조직은 국가조직과 병행하여 운영되며 전자가 후자에 침투해 들어가는 관계를 갖는다. 이 조직체계의 특징은 黨, 국가기관, 사회단체들이 업무면에서 중복된 권능을 갖는 등, 불필요하게 중첩된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되며 지나친 복잡성을 띤 관료제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공산국가는 격증하는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全體主義的 官료화의 과정을 밟아 왔다. 폐쇄적 관료제의 만연과 고착화로 그 지위의 경직성과 특권 등 관료주의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黨의 관료화에 따라 黨機關에 자리잡고 있는 조직 간부, 새로운 당료가 특권계급으로 등장케 되어 「아파라츠키」를 형성하였다. 소련에서는 이들 당료들이 신분적으로 고정된 「노멘클라뚜라」라는 特權階級으로 분류되고 있다.<sup>5)</sup> 「노멘클라뚜라」는 黨의 서기장으로부터 하부 당조직 책임자까지, 수상에서부터 말단 행정단위 책임자까지 망라되어 있다. 현 소련체제에서는 「노멘클라뚜라」 자체만이 「노멘클라뚜라」가 될 수 있으며, 공장노동자 아들은 노동자로, 농민의 아들은 언제나 농민으로 밖에 될 수 없는 신분이 고정화 된 체제로 봉건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관료제의 복잡성, 통제와 감독의 집중은 당 관료와 국가기관 관료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초기의 黨性이 점차로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성으로 대치되었다. 여기서 思想性과 專門性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紅·專」의 대립과 같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5) 기무라 히로시외, 「현대소비에트학」, PHP 연구소편, 덕운, 1985, p.45.

共產國家에서 黨은 국가의 기능과 사회 문화의 역할간의 차이를 무너뜨리고 사회전체를 완전히 지배·관리하면서 모든 주민을 획일적으로 통제한다. 각급 당조직은 국가와 사회의 한계를 해소시켜 사회를 전면적으로 정치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全社會의 政治化는 宣傳과 教育, 그리고 強制力을 그 수단으로 동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공산국가에서는 통치자(극소수 당료)만이 전체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당원과 주민은 정보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일반주민들은 자기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정보는 알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기타는 왜곡된 선전의 틀속에 安住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공산국가의 일반적 특성을 정치 측면에서 살펴 보았으나 공산체제의 또다른 특성의 하나가 바로 경제체제와 그 구조및 운영관리인 것이다. 사회주의 經濟는 생산수단(기업과 농지)을 모두 국가가 소유한 바탕에서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지령에 의해서 관리 유지되는 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사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뿐아니라 원칙적으로 시장기능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자원을 모두 국가(결국은 黨組織으로 귀결)가 전적으로 처분하고 나아가 경제활동 전반과 노동을 통제하며 가격, 임금, 소비를 규제한다. 그리고 경제관리기구를 분야별로, 계층적으로 편성하며 이것을 통하여 계획을 지령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 따라서 초급당 조직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조직과 말단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국가행정조직도 경제활동에 항상 개입한다.

공산국가의 경제관리기관의 정점은 모든 국가행정기구를 지도 통제하는 역할을 가진 黨 中央委 政治局이다. 黨의 정치국이 국가 행정부에 계획목표와 지침들을 내리면 행정부는 이를 기초로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시 黨 政治局의 승인을 획득한다. 이 승인된 계획에 기초하여 국가기관은 각 부서에 계획과제의 지령을 내리고, 그 실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자금, 투자할당 등을 행하게 된다. 중앙의

지령을 받은 각 행정부서는 다시 각급기업소나 지방기관에 똑같이 계획과제를 하달하게 된다.<sup>6)</sup>

간단히 말하자면 공산국가의 경제계획은 중앙기관이 행하고 각부서와 공장기업소, 지방기관과 협동농장들은 이 계획을 받아들여 시행하는 의무만을 가진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시스템에 망라된 수많은 기관의 숫자로, 공산주의 경제관리는 바로 방대한 관료조직의 집적에 불과하다. 소련의 경우 계획조정 기관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경제관련 행정부서는 56개의 성과 2개의 국가위원회가 있다. 나아가 공업분야의 대기업 또는 연합기업소의 수는 4만5천, 농업분야에서 협동농장 2만6천과 국영농장 2만2천, 건설분야 기관이 2만7천이나 된다.<sup>7)</sup>

공산국가의 방대한 경제기관들은 자기자신의 행동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로봇트와도 같은 것으로 중앙의 지령이라는 전류가 통할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각급 경제기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만 제대로 작동하지 기업간의 수평적 관계는 미약하다. 위로는 黨中央委로부터 아래로는 기업까지의 종적관계가 뚜렷하게 뻗어 있어, 예컨대 행정부의 경제부서간에 계획이외의 거래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한번 위까지 올라가 국가계획위원회등의 중재에 의해 절충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計劃經濟體制는 소련이 1930년대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시 시행한 스탈린식 계획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수준과 규모로는 이러한 경제운영방식이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고도화된 수많은 기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의 지령은 복잡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공산주의 경제시스템으로는 生産意慾을 가진 경영자와 기술자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되어있다. 어떻게 하면 생산원가

6) 위의책 p108.

7) 위의책 p109.

를 내려서 수익을 올릴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경영의 유지와 노동자의 고용이 불가능한 민간기업에서와 같은 創意性은 결여되어 있다.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기업간에 경쟁이 없어서 연약하거나 열등한 기업이 도산할 리 없고 기업의 경영이 부실하다 하여 노동자가 해고되지도 않는다. 사회주의 경제제도에서는 기업관리자이건 노동자건 競争이 자기에게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경쟁을 원하는 강력한 사회계층이 없다. 예컨대 기계공업부서는 이 부분의 완전독점기업으로 지령만 내리면 된다. 각 기업간의 자율적이고 직접적인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명령체제에 따르다보니 원료나 설비의 공급 지연 현상이 만성화되고 부품부족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월말이나 연말이 되면 불가피하게 돌격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제지나 재목등 포장재가 부족하다든지 수송문제등으로 제품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방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生産主體는 경제효율과 생산원가의 절감에 관심을 쏟지않게 되고 제품의 需要, 質, 多樣性은 무시되며 불량품 생산이 많아 제품을 쓸모없이 창고에 쌓아 놓는 이유로 원료와 노동력의 낭비현상이 빈발한다.

공산국가들이 착취를 없애고 부의 평등분배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러한 생산관리 방식을 고수해 온 이유는 공산당 黨 지배를 위한 정치체제의 유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첫째, 黨이 전 국민을 완전히 장악통제하는 데에는 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支配를 위해서는 우선 경찰력처럼 강제적인 수단과 위협적인 수단에 의한 통제와 단속, 선전과 같은 교육적인 유도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통제수단은 국민 모두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일이다. 黨의 수뇌부에게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야말로 생산과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黨의 존재를 강조하며 개입하는데 편리한 장치인 것이다. 둘째, 中央集權的 계획경제체제는 당내부의 계층질서의 확립, 규율의 유지, 당 내부의 연대감 강화에 적합한 것이다.

당의 각 지위에 따라 경제적 처우를 달리하는 등 「노멘플라뚜라」제

의 시행을 가능케 한다.

세째, 사회주의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물론 이데올로기적 正統性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실업, 인플레이, 독점의 폐해가 극심해지고 그 결과 조만간 몰락하게 되지만 공산주의는 그러한 모순이 없다는 주장이다. 즉 자본주의 진영의 제국주의화에 대항키 위한다는 구실로 공산국가는 黨의 통제하에 주민생활의 희생위에 군비의 강화 확충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국가들은 體制內 요소요소에 종만되어 있는 관료적 특성과 비능률로 인해 정치·사회의 정체, 경제와 주민 생활의 낙후를 탈피치 못했다. 이러한 정체와 낙후를 극복하고 체제에 활력을 주입키 위해 최근에는 機能的 合理主義에 귀를 기울이는 개혁공산주의의 물결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改革은 어느 공산국가에서는 혁명세대에 의해 主導 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전문적 기술가집단과 경영관리집단의 새로운 세대로 그 과제가 이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3. 蘇聯의 實態와 變化 樣相

#### 가. 改革의 背景과 過程

東西의 시간대가 11시간의 차이가 나는 광활한 영토에 인구 2억7천 8백만, 150종이나 되는 언어가 통용되는 소련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지 70년이 되었다. 소련은 15개의 가맹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나 실제로는 행정적으로 단일국가처럼 통치되어 왔다. 서방의 소련 전문가들은 관료제가 심화된 소련에서는 침체와 비능률이 각분야에 만연되어 침몰하는 제국의 운명에 놓였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실제로 소련사회 내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약속하는 여러가지 命題에 대한 신조는 희박해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黨의 선전에 무관심하며 심

의 시행을 가능케 한다.

세째, 사회주의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물론 이데올로기적 正統性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실업, 인플레이, 독점의 폐해가 극심해지고 그 결과 조만간 몰락하게 되지만 공산주의는 그러한 모순이 없다는 주장이다. 즉 자본주의 진영의 제국주의화에 대항키 위한다는 구실로 공산국가는 黨의 통제하에 주민생활의 희생위에 군비의 강화 확충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국가들은 體制內 요소요소에 충만되어 있는 관료적 특성과 비능률로 인해 정치·사회의 정체, 경제와 주민 생활의 낙후를 탈피치 못했다. 이러한 정체와 낙후를 극복하고 체제에 활력을 주입키 위해 최근에는 機能的 合理主義에 귀를 기울이는 개혁공산주의의 물결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改革은 어느 공산국가에서는 혁명세대에 의해 主導 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전문적 기술가집단과 경영관리집단의 새로운 세대로 그 과제가 이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3. 蘇聯의 實態와 變化 樣相

#### 가. 改革의 背景과 過程

東西의 시간대가 11시간의 차이가 나는 광활한 영토에 인구 2억7천 8백만, 150종이나 되는 언어가 통용되는 소련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지 70년이 되었다. 소련은 15개의 가맹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나 실제로는 행정적으로 단일국가처럼 통치되어 왔다. 서방의 소련 전문가들은 관료제가 심화된 소련에서는 침체와 비능률이 각분야에 만연되어 침몰하는 제국의 운명에 놓였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실제로 소련사회 내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약속하는 여러가지 命題에 대한 신조는 희박해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黨의 선전에 무관심하며 심

지어 당 지도자들도 그것을 믿지 않는 형편이되었다.

1985년 3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경직되고 침체된 거대한 공산체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과제를 떠맡게 된 것이다. 그는 당 서기장에 취임하자마자 대내체제의 개혁을 최대의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소련은 1950년대에도 후르시초프에의해서 개혁정책을 시도한 바 있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시 브레즈네프에의해 스탈린식 경직체제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스탈린이 사망한지 3년이 되는 해인 1956년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당서기장인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을 격하시키면서 사회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주장하고 수정노선을 제시했다. 그는 내무성내의 특별법정의 해체, 근로자의 이직 및 직업선택의 자유, 집단농장에 대한 월 생산목표의 감소 등 혁신적 정책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후르시초프가 먹는 문제하나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실각하자 당권을 장악한 브레즈네프는 2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1인독재체제를 공고화하며 후르시초프의 개혁노선을 후퇴시키고 「네오 스탈린주의」 체제라 불리는 準動員體制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소련은 「미사일을 보유한 낙후한 제3세계」 또는 「대포는 만들 수 있으나, 빵은 만들지 못하는 體制」로 비유되었다.

브레즈네프가 사망한 후, 노약한 당서기장들이 연달아 등장하였으나 아무런 업적도 없이 단명했다.

혁명3세대로 불리는 젊은 고르바초프는 취임한 후 개최된 1986년 2월의 소련공산당 제27차 대회에서 과감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黨大會 보고에서 소련공산체제의 모순과 부조리,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과거 집권자의 억압정치와 비능률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새로운 개혁노선을 천명하였다.<sup>8)</sup>

8) 「공산권동향자료」, 국토통일원, 1987.



그는 베레스트로이카(개혁 혹은 개편)와 글라스노스찌(공개성, 언론)라는 기치를 내걸고 체제의 병폐를 치유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르바초프가 주장하는 공개성과 개혁은 정치제도와 과정에서의 民主的 改革, 경제분야에서 계획의 分權化와 일부 민영화부문의 확대 등 經濟運營 管理의 改善, 言論의 활성화와 批判의 자유확대, 사회 문화 생활에서의 自律性 확대 등 그 범위가 넓고 심도 또한 깊다.

## 나. 政治社會改革

### 1) 黨의 숙청과 人物교체

고르바초프는 黨權을 장악한 후 개혁반대자들과 무능력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과 당의정비를 단행했다. 고르바초프가 집권하자 당의 최고 지휘부인 정치국의 개편을 위시하여 1년간 300명의 당 중앙위원중 약 40% 정도를 새로운 젊은 인물로 교체하여 당의 권력구조를 재편했으며 국가기관의 각 부처와 연방공화국의 간부들을 대폭 교체했다. 최근에는 모스크바 市の 33개 지구당 가운데 23개 지구당의 서기가 개혁 조치에 부응치 못한다는 이유로 해임되기도 했다.<sup>9)</sup>

1987년 3월 소연방검찰총장 레쿰코프는 프라우다紙와의 회견에서 1986년도에 20만명의 관리들이 국가기강 문란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불량상품 제조와 계약불이행 혐의로 징계받은 1만8천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면서 법의 엄격한 준수와 국가기강의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연방검찰이 1986년도에 억울하게 해고당한 1만1천명을 복직시켰다고 말했다.

### 2) 엘리트층원의 변화

정치분야에서 특기할 개혁의 내용은 選舉方式을 다소 민주화시킨 것

9) 동아일보, 1987. 11. 2일자.

으로, 각급 당 간부와 국가 사회단체의 책임자를 선임하는데 종전까지 시행하던 단일후보에 대한 공개선출방식을 지양하고, 복수후보에 비밀투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간부층원의 통로를 개방했다. 1987년 1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각급 당의 제1서기를 비밀투표로 선출할 것, 최고 소비에트를 포함한 각급 대의원 선거도 복수입후보제를 원칙으로 할 것 등 선거제도의 개혁안을 가결시켰다.

이미 카작스탄과 우크라이나 등 몇몇 지방의 공산주의 청년동맹의 서기 등이 복수입후보와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고 발표되었다. 한편 1987년 3월 진행된 소련 언론인노조 대표자대회에서 공개투표로 진행한데에 이의가 제기되어, 대신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소련 언론인노조의 신임 집행위원들이 선출되었다. 소련의 일부 기관들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인 비밀선거제도에 의해 보수관료의 축출이 이뤄지고 있다.

선거에서 복수입후보라고는 하지만 물론 대의원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지명권을 쥐고있는 것은黨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소비에트 제도가 금과옥조로 내세운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에 부분적 수정이 가해지고 있음을 말한다.

소련에서는 스탈린 이래로 모든 선거에서 당이 사전에 내정한 단일후보에 대해 贊反을 묻는 이른바 선택권 없는 선거가 민주주의원칙으로 예찬되어 왔다. 그래서 당 중앙위원을 위시하여 모든 위원회위원이나 간부들을 최고권력층에서 미리 선정하면 대의원들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각급당부의 제1서기는 그나마도 당 지도부가 내세운 인물에 대해 거수로 선출했다. 이제까지 선거운동도 지도자 선택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행사가 아니라 政治社會化의 한 과정에 불과했다. 후보자의 연설회란 것도 1명 뿐인 후보자를 내세우고 후보자와 당서기의 당정책 해설을 듣는 행사에 불과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극히 제한적이거나 복수입후보와 비밀투표제의 채택은 공산주의식 민주주의의 변혁임에 틀림없다.

### 3) 역사의 再評價와 復權

고르바초프는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사상적 근거를 레닌에서 찾고 있다. 그는 레닌主義의 회복을 주장하고 레닌이후의 역대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소련공산당사와 역사의 재평가 작업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탈린의 戰時共產主義理論, 이에 따른 폭정과 개인숭배, 후르시초프의 주관주의 및 브레즈네프의 관료주의등 과거의 지도자들이 레닌주의에서 이탈했다고 비판하고 레닌—스탈린—후르시초프—브레즈네프로 이어진 黨史를 새로 쓰겠다고 하였다.<sup>10)</sup>

한편, 고르바초프는 과거 스탈린 치하에서 숙청당한 인물의 복권방침을 1987년 11월 2일에 행한 볼셰비키 혁명 70주년 기념연설에서 천명했다. 이 방침이 현실화하면 소련 共產黨史에서 반당분자로 규정된 인물의 재해석으로 黨史의 '30~40年代' 부분은 불가피하게 다시 쓰여져야 한다.

이는 개혁정책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스탈린체제의 이론적 유산을 실천적으로 정리하고 역사적 화해를 통한 국민적 통합을 기함으로써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의 확보와 정통성의 확립을 도모하자는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다 하겠다.

현재 소련의 학자들 가운데에는 기존의 사회주의이론과 그 본질적 성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창하기도 한다. 소련과학아카데미 산하기관에서 발간하는 「철학의 제문제」(1987.2)에서 「아나톨리 브텐코」는 스탈린의 개인숭배식 사회주의 이론연구는 시대요청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는 그 자체가 역사발전단계에서 독자성을 갖는 사회형태라 규정하여 사회주의가 과도적 단계라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 4) 言論文化의 해빙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공개성을 기초로하여 실시되도록 조치가 취해

10) 조선일보, 1987.11.3일자.

지고 있다. 최근 소련의 언론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이 허용되었으며 反蘇 비방이나 선동과 관련된 형법의 개폐까지 거론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1987년 2월 13일 언론사대표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스탈린의 통치시기를 포함하는 소련역사의 암흑기에 관해 더 많은 사실들을 국민에게 밝힌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최근 소련의 TV에서는 스탈린시대에 강제수용소에서 죽은 희생자의 가족과 인터뷰한 내용을 방영하였고, 언론들은 그동안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던 관료의 부패상, 매춘, 마약, 청소년문제 등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어느 한 사람도 없었던 거리의 신문게시판 앞에 지금은 시민이 운집하여 관료의 비행을 폭로한 기사와 반체제 지식인의 비판담화가 게재된 신문을 보고 있다.

문화 예술계에도 공개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거에 「파스테르나크」 등 「반혁명 시인」, 「반소문학가」로 낙인찍힌 작가들이 재평가, 복권되고 금서로 묶겨있던 문학작품이 출판되고 있다. 영화인들은 영화인동맹의 제1서기로 반체제 성향의 「굴리모프」를 선출하고 동맹지도부의 2/3를 완전히 신인으로 교체하였다. 문화 해방을 선도한 분야는 연극이다. 약 60개의 극장에서 시범적으로 검열을 폐지하고 입장료를 자율적으로 결정케 하는 등 극장을 독립채산제로 전환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소련의 개혁은 간부나 현장노동자들의 무기력과 나태함을 청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고르바초프는 「알콜이야 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규정하고 反알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소련 시민들이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공산통제사회에서 특별한 오락이나 레저생활이 없는 까닭에 소련에서는 음주가 성행하고 있다. 소련에서 노동위반, 무단결근, 이혼의 주원인은 음주때문이며 사망원인도 심장병과 암 다음으로 알콜중독에 의한 것이었다. 40~50대에 사망자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알콜중독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때문인 것이다. 술 취한 자가 다만 직

장에 출근했다는 시늉만 하고 취중근무를 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결국 직장 내에 음주투쟁위까지 설치하는 기업소, 술주정뱅이의 사고방지를 위해 기계에 접근 못하게 하는 특별반을 설치한 공장도 생겨났다.<sup>11)</sup>

소련의 저변층 노동자들은 음주, 노동기피, 태만에 젖어 있고 간부들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지시사항만 전달하며 무기력하게 군림이나 하려는 사회풍조가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젊은이들은 공산주의식 생활방법을 회피하며 생산노동자가 되기 보다는 사무직이나 관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학진학 희망자가 지나치게 많아 이것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 다. 經濟管理의 革新

고르바초프가 개혁의 기치를 들고나온 주요동기는 침체의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과 공업생산을 제고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자는데에 있다. 사회주의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스탈린식 명령경제체제는 산업화 초기에는 기초공업을 축성하고 농업을 근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었으나 高度産業化로 가는 데에는 족쇄가 되어 제거하지 않으면 안될 장애물로 등장한 것이 현실 상황인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2월 말의 소련공산당 제27차대회에서 경제분야에서의 課題로서

-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경제의 발전
- 계획의 개선과 국민경제발전의 전체적 균형
- 국가관리체제의 개선을 제시했다.

소련에서의 「과학기술혁명」은 지도자들이 항상 외쳐대는 경제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였으나 27차 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가 제시한 개혁의 방

11) 기무라 히로시의, 「현대소비에트학」, PHP 연구소편, 덕운, 1985, pp.136~137.

향은 동원구호의 성격을 탈피하여 管理運營 방법의 개선에 역점이 두어졌다. 우선 경제부서의 사소한 간섭을 배제하고 비 전문적 개입을 방지하며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넓힌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가격체계를 조정하여 가격기능을 활성화시켜 지정가격이 아닌 계약가격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인정케 되었다.

소연방최고회의는 1986년 11월, 개인기업법을 제정하여 1987년 5월부터 효력을 발생토록 하였다. 한편 1987년 2월에는 기업에 대한 엄격한 중앙통제를 완화하며 자율의 폭을 크게 확대시켜 주는 내용의 경제개혁안 초안을 공포하였다.

공업생산을 늘리기 위해 상부과제의 축소, 기업의 독립채산제 도입으로 경제기관의 자율권을 확대시키고 서방기업과의 합작의 길도 열어 놓았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2백종에 달하는 새로운 경제관계법령 등이 제정공포되었는데, 특히 1986년 6월 30일 채택된 「사회주의기업법」에 의해 3만7천개의 공장들이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 받았다. 이법에 의해 공장들이 자율적인 계약으로 이용되지 않는 설비, 자재, 원료의 독자판매권을 부여받고 노동자들의 임금격차가 허용되었다. 나아가 각종 수선과 수리, 식당, 목공, 이발소 등 29개 업종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인영업을 허용하였다.

27차 黨大會에서 고르바초프는 농업의 낙후를 개탄하면서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농촌 작업반과 분조별, 가정별로 청부제를 실시한다고 공표하였다. 개인경작지의 확대와 농촌의 개인부업 경영의 허용, 일부 농업생산품을 재량으로 처분토록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고르바초프의 經濟活性化를 위한 개혁조치를 요약한다면 과도한 정부기구의 개편과 축소, 계획에 대한 중앙통제의 완화와 분권화, 기업과 집단농장 등 생산주체의 자율권 확대, 개인의 영업행위와 부업의 허용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소득의 격차를 용인하

고 개인의 이익추구를 죄악시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조치인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 말 발표한 「2000년까지의 장기 전망계획」을 통해 앞으로 15년 이내 국민소득과 공업생산의 2배, 농업생산성의 2.5배 증가를 목표로 내걸었다. 소련은 195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3%까지 이른 때가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경제 침체현상은 장기화되어 최근 8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 특히 최근에는 2%미만의 성장에 그쳤다.<sup>12)</sup> 노동생산성도 계속 하락하여 '66~70년은 +1.3%, '71~75년은 -0.1%, '76~80년에는 -0.3%로 오히려 부의 성장이 확대되었다.

스탈린의 사망후 여러가지 개혁이 행해졌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것은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의 범위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스탈린시대에는 허가없이 전직을 하면 금고에 처했고 20분만 지각을 하여도 해고되었으나 1957년 부터는 노동자 스스로 직장이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1970년에는 새로운 노동법이 제정되어 노동계약을 체결할 권리, 노조가입의 권리, 기업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규정되었다. 그러나 명령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이 형식상 생산현장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노동자가 자원의 하나로 취급되어 노동자원으로 관리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은 근무처의 임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비합법적인 개인노동 서비스 등 부업에 의한 보조수입을 올리든가, 기업이 가공 노동자의 명단을 만들어 이 명의로 확보한 자금을 분배하는데 한 몫 끼는 것으로 추가수입을 얻었다. 한편 분명한 소유의 개념이 없어 직장자재나 부품을 갖다 물물교환하거나 용돈벌이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의 전직현상과 노동자의 유동이 많아 연간 공업노동 인구의 2할인 1천만명이 직장을 옮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

12) 동아일보, 1987. 11. 3일자.

동력 이용의 저질화와 비효율화 현상이 나타나고 노동력의 낭비현상이 극심해졌다.

이제까지 중앙통제기관인 국가계획위원회와 경제부서들은 산하공장과 기업소에 생산목표를 지령하고 어디서 원료를 구입하고 어떤 가격으로 어디에 판매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사항을 결정하여 명령하였다. 기차표나 성냥갑의 디자인도 黨과 중앙계획기관이 결정권한을 갖고 있었다. 공장과 기업소는 생산품과 이윤을 국가에 납입하고 종업원에 지급할 봉급을 수령해 오는 일밖에 하지 못하여 기업소가 자체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그 자금을 국가에 구걸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장경제의 자율조정기능을 부인하고 계획당국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計劃經濟는 지난 수십년 동안, 소련인들에게 직업안정과 저물가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경쟁이 없으니 기업이 도산할 리가 없고 노동자도 웬만해서는 일 자리를 잃을 염려가 없으므로 제품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었다. 원칙적으로 가격 자체를 계획당국이 결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윤추구 동기를 갖지 못하는 기업에 가격이라는것은 의미가 없다. 기업소가 이윤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 기업의 종업원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동일의 봉급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어떤 기업소가 생산목표를 보다 잘 달성하여 이윤을 많이 내면 낼수록 오히려 다음 해에는 보다 높은 생산목표만 배정 받는 결과만 낳는다.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앞으로 각 기업소는 자체의 책임하에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농업, 경공업,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 실험의 초점은 생산분야에서 자기가 낳은 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생산제를 실시하여 나태한 노동자와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 가에 모아졌다.

이 개혁방침이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곳 중에 2천명의 종업원이 일하는 우크라이나의 한 건설기계공장이 있다. 이 공장의 생산계획은 중앙



에서 하되 1년단위가 아닌 5년단위로 하였고 기업소가 취득한 이윤 가운데 30%만 국가에 납입하고 나머지의 이윤은 기업소 자체가 자율적으로 처분토록 하여 재투자할 수도 있고 종업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도 있게 하였다.

다른 한편 1987년 6월 채택된 국영기업법에는 적자기업에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1988년 1월 1일 부터 시행케되었다.

서비스 분야에서의 계약노동제와 個人營業의 허용으로 미장원, 이발관, 가구수리업, 자동차수리업, 식당, 사진관, 택시의 개인경영이 시작되었다. 물론 계약노동은 집단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다만 농촌에서의 소규모 가금업과 양봉 등은 가정단위로 계약을 하게되어 있다. 또한 개인영업을 허용하는 경우도 요금과 불입금 등에 대해서는 지방당국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개인영업이 허용되자 흑해 연안의 「오데사」항에는 500대의 개인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고 공원에는 소규모 개인상점이 문을 열어 가정에서 만든 의류와 공예품을 팔고 있다.<sup>13)</sup>

이같이 소련 공산사회의 病理현상을 치유키 위한 고르바초프의 공개성의 원칙과 개혁노선의 기치는 사회저변에 확산되고 있다.

## 4. 中共의 實態와 變化樣相

### 가. 改革過程과 推進實相

#### 1) 4個 現代化 計劃

中國의 공산주의 변천과정은 다른 공산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중국 현실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연속이었음을

13) 조선일보, 1987. 11. 8일자.

에서 하되 1년단위가 아닌 5년단위로 하였고 기업소가 취득한 이윤 가운데 30%만 국가에 납입하고 나머지의 이윤은 기업소 자체가 자율적으로 처분토록 하여 재투자할 수도 있고 종업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도 있게 하였다.

다른 한편 1987년 6월 채택된 국영기업법에는 적자기업에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1988년 1월 1일 부터 시행케되었다.

서비스 분야에서의 계약노동제와 個人營業의 허용으로 미장원, 이발관, 가구수리업, 자동차수리업, 식당, 사진관, 택시의 개인경영이 시작되었다. 물론 계약노동은 집단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다만 농촌에서의 소규모 가금업과 양봉 등은 가정단위로 계약을 하게되어 있다. 또한 개인영업을 허용하는 경우도 요금과 불입금 등에 대해서는 지방당국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개인영업이 허용되자 흑해 연안의 「오데사」항에는 500대의 개인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고 공원에는 소규모 개인상점이 문을 열어 가정에서 만든 의류와 공예품을 팔고 있다.<sup>13)</sup>

이같이 소련 공산사회의 病理현상을 치유키 위한 고르바초프의 공개성의 원칙과 개혁노선의 기치는 사회저변에 확산되고 있다.

## 4. 中共의 實態와 變化樣相

### 가. 改革過程과 推進實相

#### 1) 4個 現代化 計劃

中國의 공산주의 변천과정은 다른 공산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중국 현실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연속이었음을

13) 조선일보, 1987. 11. 8일자.

알 수 있다. 1921년 中國共產黨이 결성된 이후, 1987년 10월 제13차 전 당대회가 개최될 때 까지 이 상호작용은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 중국 공산주의는 상당히 변형되었다.

毛澤東이 사망한 뒤, 그의 후계자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가 중국의 현실에 적용된 <毛思想>이 중국을 현대화하는데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때문에 과감하게 그 내용을 재점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중국 공산주의를 산업사회와 핵시대에 맞게 더욱 변형시킬 수밖에 없었다.

세계 인류의 1/4이나 되는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中共에서는 80年代에 들어와 중국역사상 가장 급격하고도 변화무쌍한 실험이 행해져 왔던 것이다. 毛澤東이후 실권을 잡은 鄧小平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가 中共의 現代化 문제였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완성과 현대화의 실현은 상호간에 잘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관계를 노정시키게 되었다.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속에서 중공이 공산주의 자체를 오늘의 중공 현실에 알맞게 어떻게 재정의하며 변형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中共이 <毛思想>을 재점검, 수정하고 변신을 시작한 시점은 1978년 12월의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中全에서 鄧小平體制가 <4개 현대화>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黨의 노선으로 결정한 때이다. 이 회의에서 中共은 앞으로 4개 현대화를 기어코 달성하여 中共人의 물질 및 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sup>14)</sup> 中共은 서기 2000년까지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의 4개 분야에 있어서 강력하고 부유한 社會主義國家가 되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동회의에서 이와같은 現代化를 촉진시키는데 적합한 黨의 지도와 정치활동은 집단지도제, 민주집중제 및 법제화의 강화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黨의 지도하에 黨·政의 機能分化, 각 조직의 權限을 법제화하며, 일반대중들도 사회주의법의 보호를 받게 만들자는 목적을 지향한 것이

14) 安秉俊, 「비교공산주의와 현대 국제질서」, 나남사, 1987, p102.

다. 이렇게 經濟 第一主義로 나가기 위한 정치의 뒷받침, 조직생활의 합리화가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亂보다는 治를, 그리고 투쟁보다는 안정과 단결이 필요하다는 黨路線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鄧小平은 현대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키 위해 이론적인 정당성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鄧은 1981년 6월의 黨제11기 6中全 회회에서 黨主席인 胡耀邦을 통해 黨史를 수정하면서 毛澤東과 그 思想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 會議에서 胡는 보고를 통해 毛가 취했던 모든 결정과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계급투쟁보다 더욱 중요한 黨의 당면한 과제라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鄧小平은 개혁파를 중심으로 한 권력계승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 사회적 현대화를 제도화하는 작업을 일단 성사시켰다.

## 2) 농·공업관리 개혁

黨제11기 6중전회의에서는 현대화를 위해서는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하고 個人의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시험적 조치를 먼저 농업부문부터 취하도록 하였다. 농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胡耀邦은 包產到戶(농업생산에서 일종의 도급제로, 생산 할당을 各戶에 맡기는 制度)나 自留地를 경작면적의 15%까지 올리는 것과 농촌 등지에서 사유재산이나 영업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78년부터 經濟構造와 生産管理方式을 변경해온 중공은 첫단계로 농촌경제에서 계약제도에 의한 책임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농촌의 생산소대나 농민소조, 혹은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양의 생산량을 달성하면 그 이상의 초과생산분은 생산자가 자의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업을 위시한 경제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도 취해졌다. 1982년 9월 진행된 黨 제12차 대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 黨·政 분리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편, 중앙고문위를 신설하여 80代의 老幹部들을 정치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대신 60代의 당간부가 전

면에 부상했다. 한편, 同年 9월의 제5기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에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 국무원의 총리와 부장들의 임기제를 채택하여 政權 機關 간부의 종신제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활력과 효율을 높이려 시도했다.

농업부문부터 시행된 경제개혁조치가 공업등 다른 경제분야로 확산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1984년 10월의 黨 제12기 제3中全회의에서 마련되었다. 이회의에서 「경제구조의 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우 복잡하지만 요점은 市場經濟 및 價格體制의 형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도시 경제개혁, 즉 市場社會主義를 도입하여 가격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힌 것이다. 이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黨 路線을 이론적으로 재정립하였는 바, 中共黨은 마르크스주의가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치 않다고까지 선언했다.

이러한 결정과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농촌에서 책임제에 의한 生産과 分配制度를 실시해 본 결과, 이것이 성공을 거두어 농산물 생산을 약 60%이상 증산할 수 있었음으로 비슷한 개혁을 공업에서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된데 있었다.

이로써 종전의 경직된 중앙통제와 계획의 강도가 완화되고, 그들이 말하는 상품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산과 교환이 시장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시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원래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농촌의 부업이나 自留地에서 생산된 물건을 처리하는데 국한하여 허용되었으나, 이것을 도시의 기업생산품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중공에서는 도시경제의 75% 이상을 시장가격 형성의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동구 공산제국의 시장 기능을 능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競争을 허용하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 혹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능률적인 자원의 배분과 통제가 가능케 되었다.

중공에는 약 1백만 이상의 기업이 있고 이들 기업은 약 8천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가수입의 8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sup>15)</sup> 한편 사기업의 장려결과 현재 사기업이 약 천만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또한 국영기업도 1984년부터 공장장책임제를 도입, 미흡하나마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시도되고 있다.

경제관리에 일단 시장기능과 가격체제를 도입하면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개혁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경제면에서의 대외 개방도 용이해진다. 중공은 홍콩과 인접한 深圳을 위시하여 4개의 經濟特區와 14개의 항구를 특별개발구역으로 정해 놓았다. 나아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참가하고 자본주의경제법칙과 제도에 따라 무역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공에서의 정치·경제적 개혁의 심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1986년 9월 中共黨 제12기 6중전회의에서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지도 방침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이 결의는 중공의 현대화추진을 위해서는 개인이 富를 축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자본주의 경제관리 요소의 도입을 더욱 확대한다는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공의 언론은 최근 빈부의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다. 1987년 8월 工人日報는 경제개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취급한 기사에서 중공이 보다 부유해지는 과정에서 소득격차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격차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가가 핵심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와 버스운전사간, 의사와 교사간,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소득격차에 대한 구체적 수준은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유보했다.<sup>16)</sup>

북경에서 발행되는 영문 일간지 「차이나 데일리」도 87년 8월 초, 해안도시와 경제특구 등의 부유한 동부지역과 사막및 산악지대인 가난한 서부지역을 예로 들어 동서간 소득격차를 지적했다. 이 신문은 가난한

15) 위의책, p113.

16) 중앙일보, 1987. 8. 12일자.

농민들이 1년에, 1인당 200元 이하의 소득밖에 얻지 못하는데, 북경의 택시 운전사는 한달에, 과일류 거래업자는 1주일 이내에 농민들의 1년 분 소득 이상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청부제등으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농민들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인이 경영하는 도산매업, 서비스업, 수리업, 요식업 등 이른바 「個體戶」이다.

「明報」의 보도에 의하면 上海에만도 현재 약 8만9천호의 개체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나. 最近의 改革 政策路線

### 1) 社會主義 初期段階論

중국공산당은 문화혁명의 종결을 선언하고, 한편, 「4개 현대화」의 과제를 제시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입안, 추진하기 시작한지 10년만인 현재 또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1987년 10월 말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의 개막식에서 당시의 국무원 총리 겸 당 총서기 서리인 趙紫陽은 「중국적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자」라는 제목의 「정치 공작보고」를 행하여 현재 추진중인 개혁·개방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중국 사회주의의 초기단계론」이라는 이론으로 정당화시켰다. 보고는 먼저 「사회주의 초기단계와 당의 기본노선」을 제시하고, 이어 본문에서 「경제체제의 개혁」과 「정치체제의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밝히고 끝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전환」에 관한 언급으로 결론을 맺었다.<sup>17)</sup>

보고문에서 사회주의 초기단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료된 1950년대부터 사회주의 현대화가 완성될 때까지 적어도 1백년」은 계속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단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을 1980년의 250달러에서 금세기 말까지

17) 「공산권 동향자료」 국토통일원, 1987.

1000달러로 올려 국민의 衣食을 충족시키며 21세기 중반에는 4000달러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사회주의 초기단계론」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공이 생산력의 낙후, 소유 및 분배제도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명 욕구와 사회생산성의 낙후간의 모순이 현 중공사회의 “주요 모순”(계급 투쟁은 이제 주요 모순이 아님)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제시되었다.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개방이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政治改革

趙紫陽의 보고에서 밝힌 정치체제의 개혁내용은 ① 黨·政의 분리, ② 權力의 지방 이양, ③ 정부기구의 개편과 축소, ④ 간부 인사제도의 개선, ⑤ 사회와의 대화제도 신설, ⑥ 사회주의 민주제도 법제화 방침에 관한 것이다<sup>18)</sup>

제13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정치개혁의 구체적 사례는 우선 黨중앙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집단지도체제를 제도화시킨 한편, 黨內 민주화를 촉구한 것이다. 제13차 黨大會의 중앙위원선거는 복수후보를 내세워 대표들이 비밀투표로 선택케 하였으며, 이 선거는 외부에 공개되었다. 선거 결과 핵심 권력층에 개혁파가 부상되었다.

趙紫陽의 보고에서 나타난 정치개혁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기관 종사자들의 충원과 관련한 개편이다. 그는 정권기관원을 정무공무원과 업무공무원의 두 종류로 대별하는 「국가공무원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무공무원은 임기제로 운영할 것을 밝혔다. 또한 업무공무원의 임용에서는 시험제와 초빙제를 동시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공이 그동안 행정의 비능률화, 관료주의의 팽배 등으로 고민해 왔다는

18) 조선일보, 1987. 10. 29일자.



점을 고려할 때, 제13차 당대회에서의 정치적 조치가 당권의 축소와 하부조직의 역할 강화에 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동시에 黨中央委員會의 권한을 강화하고 매년 중앙위원회를 여러차례 개최토록 한 조치는 중공신문들의 표현대로 「당·중앙 지도체제의 大變」이 아닐 수 없다.

### 3) 경제관리의 합리화

趙紫陽은 효율적인 사회주의경제를 성취하려면 완전히 발달하기 이전의 초기 자본주의가 다소 필요하다고 피력해왔다. 제13차 당대회에서도 역시 산업구조의 개편,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 대외기술 교류 및 합작의 추진방침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그는 당대회의 보고를 통해 경제체제의 개혁으로 ① 소유·경영권 분리 원칙, ② 기업간 횡적 연계추진, ③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육성, ④자율경제체제 조성, ⑤ 공유제를 주체로한 다종의 소유제발전과 각종 개인소유제 추진, ⑥ 다종의 분배방식의 개선 방침 등을 제시하였다.

중공은 이미 1987년 초에 GATT에 제출한 비밀각서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중앙계획경제체제로 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또한 1987년 7월 신화사 통신은 1988년 8월 이후 瀋陽市등에 국영주식거래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공의 경제개혁안인 「초기단계론」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혁파들은 강조하고 있으나 소득격차와 그에 따른 주민간의 위화감등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노출될 때, 언제든지 교조적 보수주의로 되돌아갈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中共은 여론을 조작하여 경제를 통제해 왔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강제력도 사용했던 것이다. 중공은 10억 이상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문제의 해결, 나아가 거대한 영토와 다양한 인종의 통일과 단결을 유지하는데 현재의 전체주의적인 一黨體制가 필요하다. 一黨體制를 지속 시키는 한 사회주의제도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 5. 東歐·아시아 共產國의 實態와 變化 樣相

### 가. 東歐改革의 背景과 過程

#### 1) 東歐의 特性

東歐 諸國은 공산화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소련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에 의해 공산정권이 들어섰다.

東歐 諸國은 정치적인 통념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전통, 경제발전의 수준, 소련으로 부터의 독립성 정도에 이르기까지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 동구 8개국인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알바니아는 인종적, 민족적, 역사적 경험에서 동일한 범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인종적으로는 슬라브족이 주류이기는 하나, 루마니아와 같이 라틴계 민족이 있는가 하면, 동독처럼 순수한 독일민족도 있다.

① 東歐圈 대부분 국가들은 이미 근대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비동구적」 체질을 형성해 왔는데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sup>19)</sup>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보다는 그 정신적 고향인 서구로의 회귀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동구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면 소련(러시아)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있다.

헝가리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이래 서구문화의 동진 통로로서의 역사적 경험과 민족적 특수성으로 인해, 슬라브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서구지향적 특성이 뿌리 깊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도 「슬로바니아」와 「크로티아」를 주축으로 하는 북부문화권에서는 일찍부터 서구문화와의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로마 카톨릭에 귀화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적 사조에 익숙할 뿐더러 공업

19) 安秉永, 「현대공산주의연구」, 한길사, 1982, pp. 178~179.

화의 수준 또한 높았다.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일정 기간 의회민주주의의 생생한 경험을 쌓았고 공산화 이전에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도달한 나라들이다. 동독에서는 비스마르크나 프레데릭 대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② 특히 동구를 이해하는 데에서 종교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원래 宗教와 共產主義는 양립할 수 없지만, 東歐諸國에서 종교의 중요성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國民의 90% 이상이 천주교신자이고 동독에서도 기독교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폴란드는 거듭되는 외세의 침략으로 분할통치의 운명을 감수해야 하는 역경속에서 천주교라는 정신적 지주를 중심으로 고도의 민족적 일체감을 키워왔으며 그 문화적 전통으로 보아 오히려 서구지향적 속성이 강하다.

## 2) 東歐의 變化過程

東歐 共產體制의 변화는 1956년의 헝가리·폴란드 사태,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 1980년대초 폴란드의 노동자파업과 자유노조의 선봉과 같이 누적된 변화 잠재력의 표출로 나타났다.

동구의 개혁공산주의는 1948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사회주의 독자노선」을 천명하고 소련과의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태동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소련의 종주권을 부정한 후, 대내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각조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업체를 「자주관리위원회」가 운영토록하였다.<sup>20)</sup>

유고슬라비아의 독자노선이 몰고온 충격속에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자 동구개혁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1956년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 후르시초프에 의해 스탈린체제의 신화가 무너짐에 따라 개혁의 파고는 다시 높아졌다.

1956년 헝가리에서 개혁주의가 격렬한 면모를 보이자 소련의 군사적

20) 브람코 호르바트, 「자주관리제도」 풀빛, 1984, pp. 38~39.

개입을 야기했지만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에서 당내 민주화와 같은 정치의 개혁과 함께 경제분야에서의 분권화 등 경제개혁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1956년을 풍미했던 개혁주의사상중 훗날에 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프로그램은 폴란드의 경제개혁에 관한 아이디어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의 이윤이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유일의 지표가 되며, 투자액중 큰 부분이 기업의 자체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가격도 기업의 재량권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sup>21)</sup>

1950년대말의 개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연맹 제7차 전당대회에서 마르크시즘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교조체계가 아니라는 마르크시즘의 창조적 해석과 당의 지도적 역할의 재평가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중·소간의 알력이 심화됨에 따라, 동구 개혁주의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소련형과 구별되는 중공식 모형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회주의」의 출현 가능성은 이들의 변혁의지를 자극하기에 족했다.

1960년대 전반기에 동구제국은 경제성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표면화되었으며 서구와의 경제적 격차는 확대되어 심각한 국면에 들어섰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동구국가들로 하여금 실제적 경제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때에 시행된 경제 개혁안은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중앙집권적 관리의 합리화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과 국가관리의 틀 속에서 「시장사회주의」의 도입이다.<sup>22)</sup> 前者에 속하는 나라는 폴란드,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열거할 수 있으며 後者の 경우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들 수 있으며, 유고슬라비아는 이미 「자주관리체제」를 바탕으로 한 시장사회주의를 제도화시키고 실시하고 있었다.

21) 梁好民外, 前掲書, p.118.

22) 安秉永, 「현대공산주의연구」, 한길사, 1983, p.188.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60년대 초에 각계각층에서 싹튼 개혁의지가 학생들과 급진적 당간부에 의해 점화되어 1968년에는 「프라하의 봄」이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968년 초 개혁세력인 「두브체크」가 黨 제1서기가 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의지와 아래로부터의 개혁욕구가 조화롭게 합치되어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정치·경제의 일대 혁신이 예견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 엘리트들은 과격한 정치변혁을 피하기보다 사회주의의 일반적 틀속에서 점진적 체제전환을 통한 목표에의 접근을 추구하여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개혁을 하려다 좌절당했다.

폭넓은 국민의 지지속에 정치적 개혁의지를 집약한 1968년 4월의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행동강령과 지식인의 「2천어 선언」등에 나타난 개혁방향은 黨의 민주화에 초점을 두어 레닌과 스탈린의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조직 운영원칙을 배격하고 시민의 자유권, 사법권의 독립, 언론, 결사 및 거주이전의 자유등의 보장과 시장사회주의 형태로의 전환을 추구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운동은 체제내의 범국민적 운동으로 까지 발전되었으나, 1968년 8월말 소련의 무력개입으로 그 꽃을 피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체제는 다시 권위주의적 질서으로 반전의 길을 걸었다.

1970년대 동구제국은 소련공산당 서기장인 「브레즈네프의 制限主權論」의 영향으로 표면적인 체제수정보다는 사회주의체제의 기본틀 속에서 내부적인 개혁의 잠재력을 축적하여 왔다.

1980년대에 들어와 동구개혁은 폴란드의 노조운동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폴란드에서 육류가격의 인상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속출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 벌어진 「그단스크」 조선소의 파업을 계기로 점차 정치적 색조가 짙어졌다. 체제의 자유화를 요구한 「그단스크」의 파업이 일어나자 정부대표는 파업노동자의 개혁방안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자율적인 노조의 결성권 인정, 검열

관계법 개정, 미사의 방송중계, 정치범의 석방등 노동자들의 요구가 인정되었다.<sup>23)</sup>

노동자의 자유화 열망은 끝내 권력구조에 변화만을 가져 왔지 소련의 영향으로 위로부터의 체제개혁의 결의를 유도해 내지는 못했다.

## 나. 東歐改革의 諸 斷面과 動向

### 1) 政治 經濟改革의 內容

동구 공산체제의 점진적 변화는 여러분야에 걸쳐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변화양태를 집약해 본다면 정치분야와 경제관리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은 정치권력엘리트들의 충원에서 사상성이 강한 당료들 보다는 기술관료의 진출이 현저하다는 것이다. 기술지향적 속성이 강한 테크노크라트의 부상은 합리적 관료제로의 전환노력 결과이다. 한편 黨 機構의 활성화, 경제및 행정업무의 부분적 분권화 등이 시도되었고, 다양한 하위조직의 자율성 제고, 정책결정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기풍이 생겨났다.

공산국가에는 다원적인 민주사회에서 볼 수 있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자발적 결사체인 이익집단의 결성이나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제도화된 대중조직의 이익표출기능이 부여되는 등, 사회적 다원주의가 제한적이나마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관제이데올로기의 절대성이 상대적으로 퇴색하는데 따라 나타났다.

그간 동구제국이 추진했던 경제개혁의 방향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으로는 대체로 ① 기업의 의사결정권 확대, ② 경제계획에서 통제수치의 축소, ③ 물질적 자극인정, ④ 행정적 가격결정의 완화, ⑤ 기업의 실적 평가기준으로 이윤개념 도입, ⑥ 외국시장과의 연계확

23) 梁好民外, 前掲書, pp. 126~127

대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방향의 경제개혁을 동구공산국가 대부분이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여러나라가 중도포기하거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는 체제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경제의 관리운영 방식에 시장요소를 도입한 시장사회주의 모형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 2) 최근의 변화동향

1985년에 들어서자 동구제국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체제개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개방과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소련 스스로 과감한 개혁조치를 수행하는데 따라 동구제국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1987년 1월 黨 中央委員會에서 소련체제의 개혁을 강조한 이후, 서독주재 소련대사 「크비친스키」는 2월 「우리의 혁명적 개혁시도는 유럽사회주의국가 모두의 과업」이라고 밝힘으로써 「위로부터의 개혁」이 소련만이 아니라 東歐의 동맹국들에게도 확산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sup>24)</sup>

체코슬로바키아가 먼저 공식적으로 소련의 「고르바초프」식 개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서기장 후사크는 1987년 2월 제5차 당대회 보고에서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의 재건을 촉구하였다. 그는 민주화의 구체적 조치로서 黨 지도부를 비밀투표로 선출할 것이며 기업소·공장 책임자들도 임명제를 폐지하고 선거를 통해 뽑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국민들이 국가정책과 그 결정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당대회와 중앙위전체회의를 열고 黨의 핵심기구인 정치국과 중앙위원을 젊은 개혁파 인물로 교체 개편하였다.

폴란드 역시 소련에서 일고 있는 개혁 동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4) 조선일보, 1987. 3. 22일자.

폴란드의 정부대변인 「우르반」은 1987년 3월 여러나라가 똑같은 방향으로 나갈 경우 개혁의 성과는 더욱 큰 힘을 얻게 된다면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지지를 표명했다. 「우르반」은 1987년 4월 1일경 또 다시 폴란드는 산업활성화를 위해 중앙통제하의 경제체제를 탈피하고 사유자본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운영방식의 개혁안을 채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80年代초에 노조의 독립성, 기업의 독자경영, 노동자들의 기업경영 참여, 언론 검열제의 폐지 등 민주화조치들을 실천에 옮기려다 소련의 강력한 제재로 수포로 돌아 갔으나, 야루젤스키가 이끄는 폴란드의 통일노동당은 폴란드 특성에 맞는 개혁을 시도할 의향을 꾸준히 표명했었다.

헝가리 역시 20년 가까이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이미 경제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로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배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카타르」 헝가리 사회노동당 서기장의 강력한 후계자로서 지목되고 있는 「마티아스」 黨書記는 소련사회의 변모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헝가리 지도자들은 소련이 헝가리의 개혁을 모델케 이스로 삼고 있는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독을 비롯한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소련의 개혁에 대해 아직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독의 사회통일당 당수 호네커는 1987년 2월 「동독의 현 경제상황은 흠잡을데 없이 모범적이다. 동독에서는 개인및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해 적극적인 정치·경제개혁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냈다. 더구나 루마니아의 공산당서기장 차우세스쿠는 고르바초프가 제창한 위로부터의 개혁에 대해 「과학적 사회주의 원칙을 저버린 발상」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동독청년들이 「우리는 고르바초프를 원한다」고 외치며 데모하는 것을보면 동독의 사회저변에 개혁욕구가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



다.<sup>25)</sup> 또한 루마니아에서도 1987년 11월 제2의 도시 「브라소프」에서 임금인하와 식량부족 현상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 2만명이 폭동을 일으켜 시청청사와 공산당사에 난입·방화하고 당간부들이 사용하는 상점을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도 1987년에 들어와 임금인상 동결, 생필품 가격과 공공요금의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파업이 각지에서 80여회나 발생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2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외채의 상환문제 등 많은 경제적 난제들을 안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제당국이 펴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유고슬라비아의 경제는 구조적인 재조정이 필요한데도 활기찬 처방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대한 東歐諸國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이를 반대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한결같이 직면한 경제난을 해결키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혁의 노선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 다. 東南亞 共產國家 實相

1975년 4월 30일 사이공(현재의 호지명시)이 함락됨으로써 베트남은 하나의 공산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을 이룩한 후, 그렇게 기대했던 平和와 安定과 發展은 찾아 오지 않고 대신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시상황 속에서 개인의 권리는 말살되고 빈곤의 멍에만 쓰게 되었다.

베트남 공산정권은 사이공을 함락한 직후, 남부 베트남주민들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베트남 공산화 이후, 공산정권의 압제 하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국외로 탈출한 피난민은 1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공산화된지 12년이 지난 지금도 10만

25) 조선일보, 1987. 6. 10일자.

명의 사상범이 수용소에 억류되어 재교육을 받고 있다.

1978년 부터는 상권을 빼앗긴 화교상공인 가운데 17만여명이 중공으로 탈출하였다. 그간 공산베트남에서 탈출하다 총에 맞거나 바다에 빠져 죽은 수가 11만이나 되었는데, 지금도 매달 평균 1천5백명의 베트남인들이 바다와 밀림을 통해 탈출하고 있다.<sup>26)</sup>

베트남 공산정권은 현재 115만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만은 캄보디아에, 15만은 라오스에 주둔시키고 있다.

1978년 12월 베트남공산군은 소련의 조종하에 중공의 지원을 받는 캄푸치아를 침공하여 폴 포트 정권을 축출하고 헝 삼린 정권을 대신 구축하였다. 그 결과 캄푸치아는 베트남의 괴뢰인 헝 삼린 정권과 중공의 지원을 받는 폴 포트 저항군간의 장기내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국가의 모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공산정권은 남부 베트남을 점령하자 곧 정치, 경제를 사회주의체제로 개편하면서 국토의 재건에 착수했으나 경제과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산 베트남은 1978년 우호협력조약 등 소련과 여러 가지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기술 지원을 받고있으나 70억 달러의 外債를 상환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소련으로 부터 매년 받고있는 30억 달러의 경제원조가 없이는 베트남경제는 지탱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인구 6천만의 공산베트남은 1986년 말 현재 국민총생산은 194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300달러로 빈곤국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대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느라 주민생활의 꺾박상이 여러가지로 노정되고 있다.<sup>27)</sup>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베트남 어린이 10명 중 1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등 만성적인 기아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 베트남인들의 일상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베트남 공산정권은 사이공 점령 이후, 물리적인 인구 재배치와 무모한 기업 국유화의 추진으로 이러한 재난을 불러왔다. 베트남 공산당의

26) 李善浩, “印支의 현실”, 「국제문제」 1987, 4월 pp. 13~14.

27) 조선일보, 1987.4.30일자.

최고간부들은 이 점을 인정하고 소련식 경제개혁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1986년 12월 개최된 베트남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당의 최고고문인 「투루옹 친」은 「생산은 정체되고 경제의 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베트남은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고 실토했다.

공산정권은 남부베트남에서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대규모 농장 건설을 위한 신경제구를 설치했으나 이것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때문에 최근 한정된 개혁정책을 실시하여 농업부문에서 개인 또는 집단 단위로 정부가 할당된 목표량 이상의 초과생산분의 40%를 자유시장에 판매토록 허용하여 농업 증산을 꾀하고 있다.

1985년 부터 기업의 독립채산제 도입과 배급제도의 폐지 등으로 경제적 난관을 벗어나려 했으나 오히려 제품 부족과 인플레이 등의 부작용만 유발했다. 이는 경제체제의 근본적 變革없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하는 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는 사실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베트남 공산정권은 1986년 3월에는 하노이와 호지명 市에 한해 5인 이하를 고용하는 소규모 상공업의 개인경영을 허용하면서 일부 품목의 배급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공산베트남이 여러가지의 경제관리운영방식을 실험하지만, 그것이 공산주의 방식인한, 평화와 자유의 상실과 빈곤의 악순환 현상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 6. 結 言

공산주의자는 평등지향적이라는 환상을 무기로, 어느 사회에나 있을 수 있는 소외계층의 해소, 새로운 생활에의 약속을 내세우며 폭력혁명을 통해 政權을 탈취하였다. 그러나 착취와 소외, 억압된 삶은 1당지

최고간부들은 이 점을 인정하고 소련식 경제개혁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1986년 12월 개최된 베트남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당의 최고고문인 「투루옹 친」은 「생산은 정체되고 경제의 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베트남은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고 실토했다.

공산정권은 남부베트남에서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대규모 농장 건설을 위한 신경제구를 설치했으나 이것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때문에 최근 한정된 개혁정책을 실시하여 농업부문에서 개인 또는 집단 단위로 정부가 할당된 목표량 이상의 초과생산분의 40%를 자유시장에 판매토록 허용하여 농업 증산을 꾀하고 있다.

1985년 부터 기업의 독립채산제 도입과 배급제도의 폐지 등으로 경제적 난관을 벗어나려 했으나 오히려 제품 부족과 인플레이 등의 부작용만 유발했다. 이는 경제체제의 근본적 變革없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하는 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는 사실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베트남 공산정권은 1986년 3월에는 하노이와 호지명 市에 한해 5인 이하를 고용하는 소규모 상공업의 개인경영을 허용하면서 일부 품목의 배급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공산베트남이 여러가지의 경제관리운영방식을 실험하지만, 그것이 공산주의 방식인한, 평화와 자유의 상실과 빈곤의 악순환 현상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 6. 結 言

공산주의자는 평등지향적이라는 환상을 무기로, 어느 사회에나 있을 수 있는 소외계층의 해소, 새로운 생활에의 약속을 내세우며 폭력혁명을 통해 政權을 탈취하였다. 그러나 착취와 소외, 억압된 삶은 1당지

배체제를 구축하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철폐한 공산국가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탈린주의적 공산체제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였다. 공산주의 1당체제는 인간의 물질적 삶만 궁핍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基本權마저 박탈하였다. 공산체제하의 인간은 黨이 계획한 목적에 공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社會와 人間을 改造하고 革命한다는 과격한 이데올로기를 기초로한 공산체제는 지구상에 나타난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그간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누적 시켜만 왔지 문제의 해결능력은 갖추지 못하고있다. 공산체제는 自己修正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각 공산국가에서 체제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공산대국인 중공의 1970년대 말 부터 체제개혁과 개방을 광범히 추진하고 있고, 공산중주국인 소련도 1980년대 중반에 와서 公開性和 改革의 가치를 내걸고 체제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것은 그 폭과 심도로 보아 공산주의의 변질까지 초래할 가능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공산체제변화의 몇몇 측면은 ① 정치적 리더쉽의 構造 및 行態의 변화에 따른 관료제화와 통제외의 완화, ②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의 개혁과 市場社會主義에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로 집약할 수 있다.

공산국가들이 체제개혁을 시도한다 하여도 어디까지나 공산주의의 일반적 원칙의 틀 속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限界性은 분명히 있다. 아무리 공산국가라도 경제성장을 하려면 정보의 공개없이 불가능하며, 때문에 정보의 자유화는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갑작스런 정보의 자유화는 공산주의 理念의 이완 현상을 초래하며 공산체제의 해체와 붕괴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산체제의 개혁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산체제에 변화할 수 있는 부분과 변화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공산국가들이 경제개혁을 한다하더라도 중앙의 지

량을 얼마나 어떤 형태와 범위로 억제·축소하느냐 하는 것이지 지형 체제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공산당의 1당독재를 불변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서 당의 지도라는 명분으로 민주적 개혁을 한다해도 자유민주주의는 될 수 없으며 전면적인 시장경제체제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이 제도권 내에서 체제의 수정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후진공산체제는 아직도 1930년대의 스탈린식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를 구축한 북한공산체제는 공산세계 내에서도 유독 홀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만 언제까지나 공산권내에서 고아로 있을 수는 없다.

중·소 등 후진공산국가의 변화라는 밖으로 부터 오는 자극과 대내적으로 누적되는父子세습체제의 모순과 경제적 곤경으로 부터 탈피키 위해선 體制의 改革과 開放의 길 밖에 없다. 바로 오늘의 중·소개혁 상황과 동구의 변화양상이 북한공산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미래의 모습을 진단하는 예시가 될 것이다.

우리 民族이 번영하고 세계사의 주류에 참여하는 길은 공산체제의 진상을 바로 인식하고 참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民主平和統一을 달성하는 기반조성이며, 김일성 독재하에서 고통받는 북한동포를 압제의 굴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민족적 責任인 것이다.

## 共產主義와 左傾思想

— 그 理論과 實體 —

---

1987年 12月 27日 印刷

1988年 1月 1日 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19

電話 234-4102 · 236-4143

---